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

A Study on Training Plan for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

박영길 • 김주형 • 김 민 • 김 담

2020.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b>저자</b>	<b>박영길, 김주형, 김 민, 김 담</b>
<b>연구진</b>	연구책임자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원 공동연구원 김 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원 공동연구원 김 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원

<b>연구기간</b>	2020. 4. 6. ~ 2020. 10. 5.
-------------	----------------------------

<b>보고서 집필 내역</b>	
<b>연구책임자</b>	박영길 연구총괄, 제1장 제1절~제2절, 제3절 일부, 제4절, 제2장 제1절, 제2절 일부, 제3절, 제3장 제1절, 제2절~제3절 일부, 제4절, 제4장 제1절, 제2절 일부, 제5장
<b>내부연구진</b>	김주형 제1장 제3절 일부, 제2장 제2절 일부, 제3장 제2절 일부 김 민 제2장 제2절 일부, 제3장 제3절 일부, 제4장 제2절 일부 김 담 제2장 제2절 일부, 제3장 제2절 일부, 제4장 제2절 일부

<b>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b>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 발간사

오늘날 국제해양질서는 1994년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 연안국은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영해와 최대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200해리 넘어서까지 대륙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연안국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교통통신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다를 둘러싼 국가들 간의 경쟁과 갈등 또한 더욱 증가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기존 해양법 규범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규범을 제정할 필요성도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선박이나 무인잠수정 등이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존의 법규범으로는 모두 규율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개발가능성의 증가로 인해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규범화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오늘날 국제해양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해양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러한 해양법의 중요성은 동시에 해양법 전문가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제교역의 절대적 양을 해상물류교통에 의존하는 해양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해양

의 면적은 육지면적의 4배가 넘으며, 주변국들과는 모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와 이어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문제, 생물·무생물 자원 등에 대한 관할권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주변국들과의 중요한 현안들은 대부분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양법과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해양법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양법 전문인력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현황과 양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주변국인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해 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대학원부터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현실적인 해양법 전문가 양성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해양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해양법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어 우리나라의 해양법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나아가 국제 해양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장 영 태

# 목차

요 약	i
-----	---

Executive Summary	xxiii
-------------------	-------

제 1장 서론	1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

1. 연구의 필요성	1
------------	---

2. 연구의 목적	4
-----------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

1. 연구의 범위	4
-----------	---

2. 연구의 방법	6
-----------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7
--------------	---

1. 선행연구	7
---------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	----

제4절 해양법 전문인력의 개념 및 해양법의 중요성	16
-----------------------------	----

1. 해양법 전문인력의 개념	16
-----------------	----

2. 해양법 전문인력의 직업적 분류	18
---------------------	----

3. 해양법 및 해양법 전문인력의 중요성	19
------------------------	----

제 2장 한국의 해양법 현안 및 한·중·일 해양법 전문인력 비교	21
-------------------------------------	----

제1절 한국의 해양법 현안	21
----------------	----

1. 1945년 이후 1950년대 말	22
----------------------	----

2. 1960년부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전	24
--------------------------------	----

3.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1990년대 말	26
---------------------------------	----

4. 2000년대 이후 현재	28
5. 소결	33
<b>제2절 한·중·일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비교</b>	<b>35</b>
1. 해양법 전문인력의 인원	36
2. 해양법 전문인력의 역량 비교 평가	42
<b>제3절 한국의 해양법 전문인력 수요</b>	<b>47</b>
1. 해양법 전문인력 전체 수요	47
2. 분야별 해양법 전문인력 수요	48
3.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51
<b>제4절 소결</b>	<b>52</b>

### **제 3장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현황 및 관련 해외 프로그램 — 55**

<b>제1절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관</b>	<b>56</b>
<b>제2절 국내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현황</b>	<b>58</b>
1. 대학에서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현황	58
2. 연구기관에서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현황	60
<b>제3절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관련 해외 프로그램</b>	<b>73</b>
1. 단기 교육 프로그램	73
2.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80
3. 해외 주요 대학 대학원 과정	84
<b>제4절 소결</b>	<b>111</b>

### **제 4장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 기반 구축 방안 — 113**

<b>제1절 기본 방향</b>	<b>113</b>
<b>제2절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양성 방안</b>	<b>115</b>
1. 대학에서의 양성방안	115

2. 연구기관에서의 양성 방안	119
제3절 해외 프로그램을 통한 양성 방안	123
1. 해양법 아카데미 프로그램	123
2. 인턴십 프로그램	124
3. 해외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	126
제4절 법제도 기반 구축 방안	128

## 제 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33

제1절 결론	133
제2절 정책제언	135

## 참고문헌 ————— 137

## 부 록 ————— 145

##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	14
〈표 1-2〉 해양법 전문인력의 직업군 .....	18
〈표 2-1〉 한반도 주변 주요 국제해양법 현안 .....	32
〈표 2-2〉 한국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해양법 이슈 .....	33
〈표 2-3〉 한국의 주요 해양법 이슈 시기별 개관 .....	34
〈표 2-4〉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	37
〈표 2-5〉 중국의 100대 대학교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	38
〈표 2-6〉 중국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	39
〈표 2-7〉 일본 대학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	40
〈표 2-8〉 일본 연구소 내 전문인력 현황 .....	41
〈표 2-9〉 한·중·일 해양법 전문인력 비교 (2019.12. 기준) .....	41
〈표 2-10〉 한중일 대학교수의 해양법 논문 편수 통계 .....	43
〈표 2-11〉 한중일 해양법 전문인력의 SSCI 논문 게재 통계 .....	45
〈표 2-12〉 한국의 해양법 현안의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 추정 .....	49
〈표 2-13〉 국제해양법 관련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2020.7.기준) .....	51
〈표 3-1〉 국내 대학원 해양법 과목 개설 현황 (2019.12.기준) .....	59
〈표 3-2〉 국내 해양법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통계 .....	60
〈표 3-3〉 국제해양법 관련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	61
〈표 3-4〉 해양법/해양영토 학술지원 사업 지원 규모 및 조건 (2020년 기준) .....	62
〈표 3-5〉 지원 규모 및 조건 (2020년 기준) .....	63
〈표 3-6〉 2019년 여수해양법아카데미 1주차 프로그램 .....	65
〈표 3-7〉 2019년 여수해양법아카데미 2주차 프로그램 .....	66
〈표 3-8〉 2019년 여수해양법아카데미 강사진 .....	66
〈표 3-9〉 2020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요 .....	69
〈표 3-10〉 2020 북극아카데미 세부 프로그램 .....	71
〈표 3-11〉 국제해양법 관련 아카데미 비교 .....	79
〈표 3-12〉 마·영·호 주요 대학 법학과 석사 과정 비교 .....	109



〈표 4-1〉 인턴 1인의 월 비용 산출 .....	122
〈표 4-2〉 해외 석·박사 과정생 지원 소요 예산 .....	128
〈표 4-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조항 .....	129
〈표 4-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조항 .....	129
〈표 4-5〉 예산 수요 파악 .....	130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 체계 .....	7
〈그림 2-1〉 해양법 현안의 시기별 주요 흐름 .....	22
〈그림 2-2〉 독도 관련 지도 .....	23
〈그림 3-1〉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과정 .....	57
〈그림 3-2〉 여수해양법아카데미 강의 및 견학 프로그램 사진 .....	67
〈그림 3-3〉 극지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연수 .....	68
〈그림 3-4〉 북극아카데미 참가자 .....	71
〈그림 3-5〉 2020년 로즈 아카데미 브로셔 .....	74
〈그림 3-6〉 2020년 헤이그 하계 아카데미 브로셔(영/불) .....	76
〈그림 3-7〉 IFLOS 하계 아카데미 강의 .....	79

## 요약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 1. 연구의 목적

- ▶ 국내 해양법 전문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해양법 전문인력 부족 현실과 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해양법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국가의 해양력 확보에 기여
  - 대학 및 연구기관들에서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
  - 대학(원)에서의 해양법 전공 확대, 신규 해양법 인력의 전문성 강화, 국제적인 역량강화와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중장기·체계적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

##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 1) 연구의 방법

- ▶ 1차 자료의 수집과 작성을 중심으로 하고 2차 자료 중심의 문헌연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였음
  -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연구 관련 1차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
  - 한·중·일의 해양법 전문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 홈페이지와 논문 원문 제공 사이트들을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현황 리스트를 작성

### 2) 연구의 특징

- ▶ 본 연구는 1차 자료 작성 및 비교연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
  - 해양법 전문인력의 적정 규모와 전문성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해외 전문인력의 현황을 파악
  - 특히 해양을 사이에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상황을 검토
- ▶ 객관성 담보와 현실성 있는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활용 및 정부부처 협의기능 강화
  -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부처와의 협의

〈그림 1〉 연구의 수행 체계



자료: 저자 작성

### 3. 연구의 결과

#### 1) 연구 결과 요약

##### (1) 해양법 전문인력의 개념

- ▶ 전문가 또는 전문인력이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
- ▶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해양법 전문인력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짐
  - 첫째는 형식적 의미의 전문인력으로, 해양법을 학위논문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또는 해양법 외의 국제공법 관련 학위를 받고서 해양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
  - 둘째는 실질적 의미의 해양법 전문인력을 의미. 단순히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을 넘어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해양

법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올바른 해결 방법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적으로 교류하면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

- ▶ 해양법 전문인력의 개념을 토대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주요한 직업들을 분류

〈표 1〉 해양법 전문인력의 직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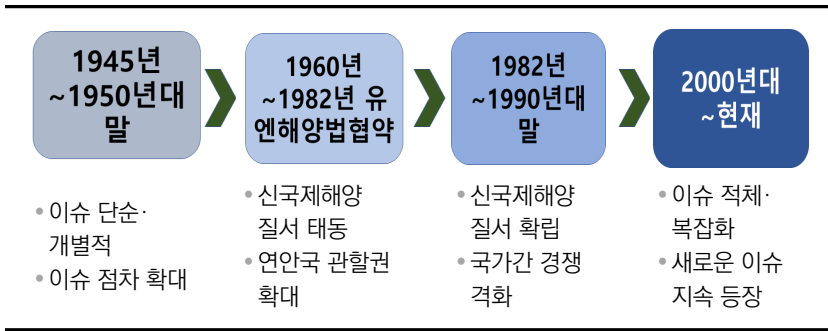
직업	소속	특징
국내	교수	• 대학교, 특정 연구소
	연구원	• 정부·공공·민간 연구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정부·연구소
국외	국제기구 공무원	• 일반 행정직 (간부급) • 개인적 지원 • 개인 역량 좌우 • 정부 추천(선택적)
	국제기구 임원	• 국제기구 수장 (또는 선출직 고위직) • 정부 추천 • 국가간 정치적 역학관계 고려 • 당사국 회의 등에서 선출
	재판관	• 국제해양법재판소 • 국제사법재판소 • 고도의 전문성 •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 (정부 역할 중요)
	교수	• 해외 대학교 • 교육 및 학술연구 중심 • 국제소송 변호인 활동 • 정책 자문
	연구원	• 해외 싱크탱크·대학 • 정책 연구 • 정책 자문
	법률사무소	• 해외 로펌 • 국제소송 • 국가 등에 정책 자문

자료: 저자 작성

## (2) 우리나라의 해양법 현안

- ▶ 우리나라의 해양법 현안들은 꾸준히 증가
  - 현안들의 내용도 비교적 단순한 쟁점에서 점차 복잡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변화

〈그림 2〉 해양법 현안의 시기별 주요 흐름



자료: 저자 작성

- ▶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해양법 현안들을 서해, 남해 및 동해 등 지역별로 나누어 정리

〈표 2〉 한반도 주변 주요 국제해양법 현안

지역	내 용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북방한계선, 접경해역 관리,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리, 해양환경 보호, 해양경계획정, 경계미획정 수역 해양과학조사 등 남북 및 한중 간 해양법 문제
남해, 동중국해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 제주해협 및 대한해협 통항 문제, 이어도 해역 관할권, 이어도 상공 방공식별구역의 한중일 3중첩 문제, 경계미획정수역 해양과학조사 문제, 해양환경 보호,
동해	독도 영토주권, 독도 주변수역 일본과의 관할권 충돌, 동해 표기 문제, 동해 접경해역 관리, 남·북·러·일의 동해 경계획정,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화되지 어장 어업 관리, 중러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문제

자료: 저자 작성

▶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국제해양 이슈

〈표 3〉 한국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해양법 이슈

구분	내 용
전통적 이슈	동중국해·남중국해 해양분쟁, 소말리아 및 말라카해협 해적행위, IUU 어업, 북극 항로 이용과 자원개발,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심해저 자원개발, 대륙붕 한계 확장
새로운 이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이의 대립 격화, 미국-이란 간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해협 통항 위협과 해상교통로 확보, 국가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BBNJ)에 대한 규범화 논의, 선박의 대기오염원 배출 규제 강화

자료: 저자 작성

▶ 우리나라의 주요 해양법 이슈들을 시기별로 개관

〈표 4〉 한국의 주요 해양법 이슈 시기별 개관

시 기	주요 해양법 이슈	특 징
1945년부터 1950년대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문제 시작(한일 정식 공방)</li> <li>• 어업 문제 (일본과 관할수역 중첩)</li> <li>• NLL 설정 (갈등요인 잠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문제 시발점</li> </ul>
1960년대부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문제('60년대 초 문제 부각: 일본의 ICJ 공동제소 제안)</li> <li>• 어업 문제 관심 확대</li> <li>• 해양관할권(영해 12해리)</li> <li>• 자원개발(JDZ 설정)에 관심 확대</li> <li>• 북한의 NLL 이익제기(위협 잠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문제 부각</li> <li>• JDZ 시작</li> <li>• NLL 문제 시작</li> </ul>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부터 1990년대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문제(수면 아래)</li> <li>• EEZ 관할권 중첩문제</li> <li>• 어업문제 부상(어획능력 향상으로 어족자원 고갈, 불법조업 문제 부상)</li> <li>• 대륙붕 자원개발(JDZ)</li> <li>• NLL 문제 갈등 부상(북한의 NLL 부정 군사 경계선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주변국과 EEZ/대륙붕 중첩으로 인한 경쟁 가속화</li> <li>• 어업문제 부각</li> </ul>
2000년부터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문제 갈등심화(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회부 제의, 주변수역 갈등 심화)</li> <li>• 어업문제 심화(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동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문제 고도의 갈등상황 유지</li> <li>• 불법조업 문제 심각</li> </ul>



시 기	주요 해양법 이슈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간수역과 대회퇴 어장 조업, 한국원양어선의 IUU어업)</li> <li>• 해양과학조사 등 해양관할권 경쟁 심화</li> <li>• 이어도 주변수역 관할권 갈등 심화</li> <li>•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시작</li> <li>• JDZ협정 법적 문제로 쟁점화, 동중국해 대륙붕한계연장 문제</li> <li>• 서해 NLL과 해양안보 갈등 심화</li> <li>•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외국 군용기의 빈번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li> <li>• 해양환경보호 문제 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LL과 서해 안보 갈등 심화</li> <li>• 해양관할권 갈등 심화</li> <li>• JDZ 문제 심화 중</li> <li>•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문제 부상</li> </ul>

자료: 저자 작성

### (3) 한·중·일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비교

#### ▶ 우리나라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표 5〉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연번	대학교			연구기관	
	대학명	단과대학명	인원	연구기관	인원
1	국민대	법과대학	1	아산정책연구원	1
2	목포해양대	해양경찰학부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3	부경대	법학과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4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2	한국극지연구소	1
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
6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1		
7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		
8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1		
9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2		
10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		
11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1		
		해사수송과학부	1		
합 계			14	합 계	8

\* 2020.9.30. 기준.

자료: 저자 작성

▶ 중국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100대 대학교 중)

〈표 6〉 중국의 100대 대학교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연번	대학명	인원	연번	대학명	인원
1	중국정법대학	4	20	해남대학	6
2	무한대학	5	21	해남대학	1
3	중국인민대학	3	22	기남대학	1
4	청화대학	3	23	화남이공대학	1
5	북경대학	5	24	서남교통대학	1
6	서남정법대학	2	25	중국해양대학	5
7	중남재정정법대학	1	26	북경항공항천대학	1
8	난징대학	1	27	북경이공대학	1
9	상해교통대학	2	28	상해해사대학	3
10	절강대학	4	29	대련해사대학	4
11	하문대학	3	30	국제관계학원	1
12	사천대학	1	31	영파대학	2
13	북단대학	1	32	화둥사범대학	1
14	산둥대학	2	33	상해대학	1
15	대외경제무역대학	3	34	남창대학	1
16	중산대학	1	35	하해대학	1
17	서북정법대학	6	36	연태대학	1
18	호남대학	1	37	중앙민족대학	1
19	남경대학	1	38	항저우사범대학	1
합 계			83		

자료: 저자 작성 (2019.12.30. 기준)

▶ 중국의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표 7〉 중국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연번	연구소 명	인원
1	중국해양대학 해양발전연구원	5
2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4
3	베이징대학 해양연구원	3

연번	연구소 명	인원
4	상하이교통대학 해양법치연구센터	7
5	우한대학 중국변계와 해양연구원	13
6	샤먼대학 해양과 해안대 발전연구원	3
7	저장대학 해양법률 및 관리연구센터	6
8	상하이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1
9	상하이 해양대학 해양정책·법률연구소	7
10	중국 남해연구원	10
11	중미연구소	3
합 계		62

자료: 저자 작성 (2019.12.30. 기준)

#### ▶ 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 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 파악은 대학 등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표 8〉 일본 대학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연번	대학교	인원	연번	대학교	인원
1	게이오 기주쿠 대학	1	27	세이와 대학	1
2	고마자와 대학	1	28	센슈 대학	1
3	고베대학	3	29	소피아 대학	5
4	교토 대학	3	30	시즈오카 현립대학	1
5	구마모토 대학	1	31	신슈 대학	1
6	나고야 게이자이 대학	1	32	쓰쿠바 대학	1
7	니혼 대학	2	33	아이치 대학	1
8	다카오카 법과대학	1	34	오사카 가쿠인 대학	1
9	다쿠쇼쿠 대학	1	35	오사카 대학	2
10	데이쿄 대학	1	36	오카야마 대학	2
11	도시샤 대학	2	37	오타루 상과대학	1
12	도요 대학	1	38	와세다 대학	3
13	도카이 대학	1	39	요코하마 시립대학	1
14	도쿄 대학	4	40	조사이 대학	1

연번	대학교	인원	연번	대학교	인원
15	도쿄 해양대학	4	41	쥬부 대학	1
16	도호쿠 공익문화대학	1	42	쥬오 대학	1
17	도호쿠 대학	2	43	쥬쿄 대학	1
18	도호쿠 의료약과대학	1	44	해상보안대학교	1
19	리쓰메이칸대학	1	45	호세이 대학	2
20	릿쿄 대학	1	46	홋카이 가쿠인 대학	1
21	메이지 가쿠인 대학	2	47	홋카이도 교육대학	1
22	메이지 대학	4	48	홋카이도 대학	2
23	방송대학	1	49	후쿠오카 공업대학	1
24	방위대학교	1	50	후쿠오카 여자대학	1
25	세이난 가쿠인 대학	2	51	히로시마 대학	1
26	세이사 대학	1	52	히토쓰바시 대학	1
합 계			80		

자료: 저자 작성 (2019.12.30. 기준)

▶ 일본의 해양관련 연구소 내 전문인력 현황 (전수조사)

〈표 9〉 일본 연구소 내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연번	연구소명	국제법 관련 인력	해양법 관련 파악된 인력
1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	1	1
2	일본학술진흥회	3	-
3	국제고등연구소	1	-
4	사사카와평화재단 해양정책연구소	6	4
5	세계인권문제연구소	8	-
6	일본국제문제연구소	3	-
7	일본안전보장전략연구소	3	2
합 계		25	7

자료: 저자 작성 (2019.12.30. 기준)

## ▶ 한·중·일 해양법 전문인력 비교

〈표 10〉 한·중·일 해양법 전문인력 비교 (2019.12. 기준)

국가	대학교	연구소(대학부설 포함)	비고
한국	14명(11개 대학)	8명(5개 연구소)	
중국	83명(38개 대학)	62명(11개 연구소)	일부 조사
일본	80명(52개 대학)	7명(7개 연구소)	

자료: 저자 작성 (한국: 2020.9.30., 중·일: 2019.12.30. 기준)

## ▶ 한·중·일 해양법 전문가들의 연구 역량을 작성 논문편수를 기준으로 파악(국내 논문 포함)

〈표 11〉 한중일 대학교수의 해양법 논문 편수 통계

	한국	중국	일본
조사 대학	37개	112개	111개
국제법 교수	58명	142명	220명
해양법 논문 1편 이상	33명 (해양법 논문 1편 이상)	60명 (해양법 전공 표시)	80명 (해양법 논문 1편 이상)
해양법 논문 3편 이상	14명	22명	36명
비고	전수조사	일부대학 조사	전수조사
고려사항	* 한국: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 연구업적, 논문 검색 조사 ** 중국, 일본: 본인이 공개한 연구업적에 크게 의존, 논문 검색 조사를 하였으나 많은 제약이 있음. 따라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		

자료: 저자 작성 (2020.2.20.기준)

- 한국과 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해양법 논문 3편 이상 집필 현황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33명 중에서 14명(42%), 일본은 80명 중에서 36명(45%)으로, 한국과 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 간에 논문집필 비율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 ▶ 한·중·일 해양법 전문가들의 연구 SSCI 저널 논문 게재 현황

- ‘Web of Science’에서 ‘법’(law) 범주에 속하는 저널 총 148개와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범주에 속하는 저널 총 91개 중에서 ‘법’ 범주 저널 중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IF)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저널과 국제법 일반 또는 아시아를 다루는 저널을 기준으로 15개 저널을 선별

〈표 12〉 한중일 해양법 전문인력의 SSCI 논문 게재 통계

단위: 명

연번	저널명	IF	범주	한국	중국	일본
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4.508	법			
2	YALE LAW JOURNAL	4.500	법			
3	HARVARD LAW REVIEW	4.390	법			
4	COMMON MARKET LAW REVIEW	3.918	법			
5	STANFORD LAW REVIEW	3.748	법			
6	MARINE POLICY	2.865	국제관계	8	17	2
7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71	국제관계			
8	PACIFIC REVIEW	1.865	국제관계		1	
9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810	법, 국제관계			
10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696	법, 국제관계			
11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267	법, 국제관계		21	
12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1.026	법, 국제관계	2	8	
13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0.600	법	5	7	2
14	ASIAN PERSPECTIVE	0.509	국제관계			
15	ASIA PACIFIC LAW REVIEW	0.400	법			
합 계				15	54	4

\* 총 인용수 및 피인용지수는 2018년 기준

자료: 저자 작성 (2020.2.20.기준)

#### (4) 해양법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

##### ▶ 해양법 현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의 수요 추정

〈표 13〉 한국의 해양법 현안의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 추정

대분류	중분류	현안	필요 인원
독도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법 연계 문제	• 일본의 다양한 도발 대응 • 독도 주변수역 관리	3
	국제소송 대응	• 독도 문제의 일방적 국제소송 제기 대응	3
	주변수역 관리	• 독도 주변수역 분쟁 발생	3
어업	어족자원 관리	• 한-중, 한일 어업협정 이행·관리	3
	연근해 불법조업	• 중국·북한 어선 불법조업 • 대화퇴 어장 관리	3
	원양어선	• 한국어선의 IUU 어업	3
해양관할	해양경계	•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 한일 해양경계획정 대비 • 동중국해 EEZ/대륙붕 경계	4
	해양관할권	• 경계미확정수역 MSR • 외국 선박 대응 집행, 임검·추적권	3
	주변국·소송 대응	• 중·일의 해양관할권 확대·강화 대응 • 국제소송 제기 대응	3
해양생물자원 (어업 제외)	EEZ 생물자원	• 지속가능한 이용과 EEZ 관할권	2
	공해 생물자원	• BBNJ 문제	3
해양광물자원	대륙붕 자원개발	• JDZ 대응(협정이행·종료 문제)	2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 광구탐사/개발에 따른 해양법 문제	2
해양환경보호	유엔해양법협약 의무	• 육상기인 오염원 차단 • 선박기인 오염원 차단 • 해양쓰레기(플라스틱 쓰레기 포함) • 해양보호구역	4
해양안보-해양법 연계	접경수역	• NLL 법적 지위 • 접경수역 평화적 이용·관리	2
	방공식별구역(상공)	• 이어도 상공 -3중첩 • 중국·러시아 군용기 안보 위협	2

대분류	중분류	현안	필요 인원
	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협 및 남중국해 안보 위협과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li> <li>• 해적행위</li> </ul>	2
국제해양	북극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극항로 이용</li> <li>• 북극해 자원개발</li> <li>• 지구온난화와 북극해 해빙</li> <li>• 북극해 관할권 확대 경쟁</li> </ul>	3
	남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극조약체제</li> <li>• 기후변화와 남극 변화</li> </ul>	2
	국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동향 정기적 파악·대응</li> <li>• 주요국 및 국제기구 동향</li> </ul>	3

자료: 저자 작성

#### ▶ 공공 및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표 14〉 국제해양법 관련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2020.9.기준)

	소속	소재지	주요업무	현재 해양법 (박사급) 인력	해양법 인력 채용	비고
공공 기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부산	해양법정책 연구	2	수시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부산	해양법정책 연구	3	수시	
	한국극지연구소	인천	극지정책	1	거의없음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충남 서천	해양생물자원 관련 연구	1	거의없음	
	국립외교원	서울	외교관 교육 및 외교 정책 제시	0	거의없음	기후변화 관련 해양법 전문가 1명 근무
	동북아 역사재단	서울	영토분쟁 관련 연구	0	수시	영토분쟁 및 일본 관련 법학박사는 총4명 근무
민간 기관	아산정책 연구원	서울	해양안보관련 해양법 연구	1	거의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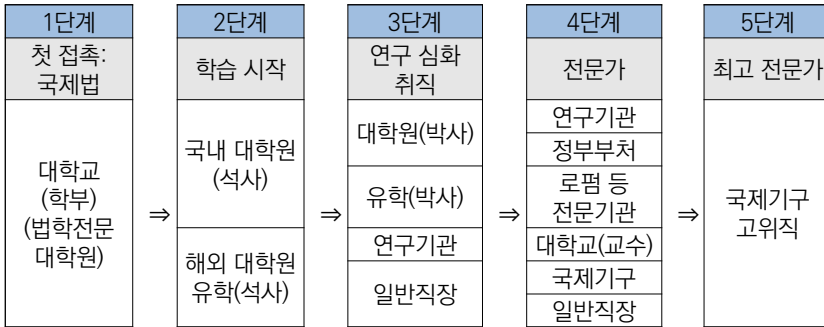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5)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관

###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과정

〈그림 3〉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과정



자료: 저자 작성

### ▶ 국내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현황: 국내 대학원의 해양법 강의개설 현황

〈표 15〉 국내 대학원 해양법 과목 개설 현황 (2019.12.기준)

학 교	2015	2016	2017	2018	2019
강원대학교	○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	○	
서울시립대학교	○	○	○	○	○
서울대학교				○	
연세대학교	○				
인하대학교	○	○	○	○	○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한양대학교				○	

자료: 저자 작성

▶ 해양법을 주제로 한 석·박사 학위 취득 현황

〈표 16〉 국내 해양법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통계

학위 연도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합계
구분	석사	3	6	4	2	8	2	3	3	8	2	41
	박사	5	2	1	1	7	1	2	2	0	1	22
합계		8	8	5	3	15	3	5	5	8	3	63

자료: 저자 작성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관련 해외 아카데미 프로그램 비교

〈표 17〉 국제해양법 관련 아카데미 비교

	여수 아카데미	로즈 아카데미	헤이그 아카데미	패로 아카데미	IFLOS 아카데미
주관	해양수산부	버지니아 법대 해양법정책센터 외 다수	헤이그 아카데미	패로 제도 대학교	IFLOS (국제해양법 재단)
시기/ 기간	여름/2주	여름/3주	여름/3주	여름/1주	여름/4주
내용	국제해양법	국제해양법	국제공법	대륙붕의 과학적 법적 측면	국제해양법
자격/ 선발	개발도상국 국적 해양관련 대학원생, 연구원, 공무원 /내부 서류 선발 절차	특별한 절차 없음/내부 서류 선발 절차	국제법 강의를 수강한 4년제 대학 졸업생/내부 서류 선발 절차	학사 이상/ 내부 서류 선발 절차	40세 이하 대학원생, 외교관/내부 서류 선발 절차
비용	개인 용돈 제외 참가비 및 숙박비 없음	참가비(1,650 미국달러)와 숙소비 등 제반 비용	참가비 (한 세션 참가시 1,150 유로, 두 세션 참가시 2,050유로)와 숙소비 등 제반 비용	참가비 (500유로)와 숙소비 등 제반 비용	참가비(1,590 유로)와 숙소비 등 제반 비용

	여수 아카데미	로즈 아카데미	헤이그 아카데미	패로 아카데미	IFLOS 아카데미
비고	선진국 학생의 경우 자비로 참가한 경우 있음	개도국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있음	전체 참가학생 수의 20% 장학 혜택	소수 참가자 재정적 지원	OECD 국민 아닌 참석자에 한해 장학금 주어짐

자료: 저자 작성

###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 유엔의 해양 및 해양법 담당 분과인 유엔해양법국(UN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UN DOALOS)은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매년 20여명의 신진 정부 관료, 학생(법학, 국제관계, 사회과학, 번역, 문헌정보 등)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
-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학생과 신진 학자들의 직무 경험 향상을 위해 1-3달 동안 ICJ 사무처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
-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소재한 막스 플랑크 국제법·비교법 연구소(Max Plan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4-12주 동안 진행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전략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총 3개 시즌 즉 봄(1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2월)로 나누어 선발 운영
-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각 연구 분야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채용

▶ 해외 대학들의 석·박사 과정

- 미국, 영국, 호주 등에 있는 주요 로스쿨과 법과대학원의 LLM 및 박사과정의 입학조건, 등록금, 주요 코스 등의 현황을 파악

〈표 18〉 마영호 주요 대학 법학과 석사 과정 비교 (2020.10. 기준)

국가	대학명	지원 자격	학위 취득 요건	학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LL.M.과정	• 추천서(최소 2명) • TOEFL IBT 100점	• 12개월 • 23~28학점	\$65,875
	예일대 로스쿨 LL.M.과정	• 추천서(최소 2명) • 수학 동기와 계획에 대한 에세이 2편 • TOEFL IBT100점	• 12개월 • 최소 24학점	\$65,792
	컬럼비아대 로스쿨 LL.M.과정	• 추천서 • TOEFL IBT 105점 • 학부졸업 후 업무경력	• 10개월	\$72,352
	스탠포드대 로스쿨 LL.M.과정	• 미국 외 법학 학사를 받은 학생으로 제한 • 추천서 2건 • TOEFL IBT 100점, PBT 620점	• 9개월, 동안 스탠포드 거주 • 최소 35, 최대 45 학점	\$64,350
	시카고대 로스쿨 LL.M.과정	• JD 학위(미국), 해외 학생 의 경우 변호사 시험을 치 르는데 필요한 대학법률 교육 이수 • TOEFL IBT 104 • IELTS 7.5	• 12개월 • 3학기, 9개 코스이수 (27시간)	\$68,652
	뉴욕대 로스쿨 LL.M.과정	• TOEFL IBT100 • IELTS 7.0	• 9개월 • 24학점	\$68,348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Mphil 과정	• TOEFL IBT 110 • IELTS 7.5	• 3학기 • 3만 단어 논문작성 및 법률연구방법 과정 이수	• 해외£24,450 • 영국/아일 랜드£8,570
	케임브리지대 LL.M.	• TOEFL IBT 110 • IELTS 7.5	• 9개월	• 해외£32,214 • 영국£17,148

국가	대학명	지원 자격	학위 취득 요건	학비
	에든버러대 LL.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EFL IBT 100</li> <li>• IELTS 7.0</li> </ul>	• 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22,850</li> <li>• 영국, EU £13,000</li> </ul>
호주	호주 국립대 법과대학 국제법 및 외교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학위이나 평균평점 (GPA) 7.0점 만점 중 5.0점에 준하는 국제학사학위 또는 평균평점 7.0점 만점 중 4.0점 이상에 해당되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직종에서 업무경험</li> <li>• 외국인의 경우 호주에서 12학년 수학</li> <li>• DET115점 혹은 온라인 인터뷰</li> </ul>	•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AUD 48,384</li> <li>• 호주인 AUD 32,256</li> </ul>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공 및 국제법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학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2년 이상의 전문 경험 보유, 혹은 관련 분야 학부 학위를 보유하면서 2년 이상의 전문경험을 보유</li> <li>• TOEFL PBT 577</li> <li>• IELTS 6.5</li> <li>• Pearson Test of English 58-64</li> <li>• CAE 최소 176점</li> </ul>	• 1년	AUD 44,416

자료: 저자 작성

##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 해양법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기본 방향을 설정
  - 첫째, 생애주기형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대학에서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
  - 해양법/해양영토 학술지원 사업을 개선해서 더 많은 대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사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 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다른 모의재판대회와의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며,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강좌 개설
  - 해양법 강의 개설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양법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대학내 해양법 중점연구소 지정 운영을 통해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동시에 도모
- ▶ 연구기관에서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
- 연구기관 자체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진 인력이 해양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취직하거나 또는 해외 유학의 길을 갈 수 있음
- ▶ 해외 프로그램을 통한 양성 방안
- 해양법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가(로즈 해양법 아카데미, 패로제도 대륙붕아카데미, 국제해양법재판소 여름아카데미 등)
  -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국제기구 및 해양법 정책 관련 국제싱크탱크)
  - 해외 대학 석·박사과정 학업 지원(석사과정 1~2년, 박사과정 4~5년의 장기간 지원)
- ▶ 법제도 기반 구축 방안
-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 정책의 지속성·안정성을 위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통해 장기적인 인력 양성 효과 발현 유도
  - 인력양성의 효과는 그 특성상 장기간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나 정책 집행 수뇌부의 이해에 따라서 중간에 정책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함
  - 본 연구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 ▶ 인력양성 방안 정책을 시행 시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정기적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평가체계의 구축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함
- ▶ 중국과 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해양법 전문인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중요한 해양법 현안은 대부분 중국·일본과 관계가 있으며, 이들 현안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해양법 전문인력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중국·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교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법 전문인력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군사·경제 전쟁과 달리 법률전(lawfare)에서의 무기는 모두에게 동일한 해양법이라는 국제규범이며, 승패는 결국 이를 다루는 해양법

전문인력에 달려 있기 때문임

- ▶ 국제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인력의 안정적 파견할 수 있음
  -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내 해양법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에 안정적으로 파견할 수 있음
  - 국제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 A Study on Training Plan for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Young-Kil Park · Ju-Hyung Kim · Min Kim · Dam Kim

## 1. Purpose

-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and prepare a training plan to systematically nurture them.
- To recognize the lack of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and the severity of the resultant problems, and prepare a proactive and systematic support plan at the national level to stably train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contributing to expanding influence in the field of the law of the sea.
- To be utilized as a reference for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o train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 To present mid- and long-term, systematic training plan for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in regards to expanding the majors in the law of the sea at universities (graduate schools), enhancing the expertise of new personnel in the law of the sea, capacity-building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establishing the

network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tc.

## 2. Methodology and Feature

### 1) Methodology

- ▶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mainly focusing on the collection and preparation of the primary sources, while utilizing the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secondary sources only within the necessary range.
  - The primary sources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and prepared in various ways, including the Internet.
  - The universities' homepages and Websites providing the original texts of research papers were searched in order to make a list of professionals in the law of sea in Korea, China and Japan.

### 2) Feature

- ▶ The preparation of the primary sources and comparative study are crucial to this study.
  -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professionals was identified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size and level of professionals' expertise in the law of the sea.
  - Especially, it examined situations in China and Japan which are competing for the ocean.
- ▶ It is important to utilize experts and strengthen the consulta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in order to secure objectivity and present realistic policy recommendations.

- It is important to fully accommodate the opinions of experts through experts' advice and meetings and to consult with government ministries.

### 3. Result

#### 1) Summary

##### (1) Concept of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 ▶ Professionals in the law of sea introduced in this study have two aspects:
  - First, the term in this study represents professionals in a formal sense, referring to those who have obtained a doctorate or who are in charge of maritime affairs with a public international law-related degree.
  - Second, it refers to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in a practical sense, including those who utilize their substantial knowledge and experiences to present precise analyses on the pending issues of the law of sea and present correct solutions and policy directions and who could even show their capabilitie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 (2) Pending Issues of the law of the sea in Korea

- ▶ Korea's pending issues regarding the law of the sea have steadily

continued increasing.

- The details of such issues have been gradually changing from relatively simple to more complicated and complex.
- ▶ The study presents an overview of major issues of the law of the sea in Korea by timeline

〈Table 1〉 Major Issues of the Law of the Sea in Korea by timeline

Time	Major Issues of the Law of the Sea	Feature
From 1945 to the late 1950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Dokdo issue(official controversy between Korea and Japan)</li> <li>• Fishery issue (The Korean Jurisdiction Sea Zone is overlapped with that of Japan)</li> <li>• The NLL was designated (potential conflict factors exis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rting point of Dokdo issue</li> </ul>
From 1960s until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as adopted in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kdo issue (raised in the early 1960s: Japan suggested filing a joint complain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li> <li>• The interest in the fishery issue grew.</li> <li>• Maritime jurisdiction (12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li> <li>• Interest grew with the Joint Development Zone (JDZ) designated.</li> <li>• North Korea raised an objection to NLL (potential threat exist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Dokdo issue was emerged</li> <li>• The JDZ began</li> <li>• The NLL issue started</li> </ul>
Since adoption of the U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82 to the late 1990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kdo issue (be latent)</li> <li>• Overlapping EEZ jurisdiction issue</li> <li>• The fishery issue was emerged (depletion of fish stocks due to increasing fishing capacity, illegal fishing issue)</li> <li>• Development of continental shelf resources (JDZ)</li> <li>• Conflict over the NLL issue was emerged (North Korea claimed that the NLL Military Demarcation Line was unlawfu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ith the U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aking in effect, competition with surrounding nations became accelerated due to the overlapping EEZ/continental shelf.</li> <li>• The fishery issue was emerged.</li> </ul>

Time	Major Issues of the Law of the Sea	Feature
From 2000 to the pres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flict over the Dokdo became deepened (Japan suggested to raise joint complaint to the ICJ, conflict over surrounding waters deepened.)</li> <li>• The fishery issue became serious (illegal fishing and fishing activities in the East Sea Intermediate Waters and Daehwaetoe, fishery by Chinese fishing boats, IUU fishing by Korean deep-sea vessels)</li> <li>• Competition for the maritime jurisdiction such as the marine science research became severe.</li> <li>• Conflict became deepened over the jurisdiction of waters surrounding Jeodo.</li> <li>• The negotiation on the Korea–China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 began.</li> <li>• The JDZ agreement developed into a legal issue. The issue of extending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China Sea.</li> <li>• Conflict over the NLL in the West Sea and maritime security became severe.</li> <li>• China’s declaration on th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frequent invasion of the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by Foreign military aircrafts.</li> <li>•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ssue was emerge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high-level of conflict over the Dokdo issue is maintained.</li> <li>• Serious illegal fishing issue</li> <li>• Conflict over the NLL and the West Sea security becomes severe.</li> <li>• The JDZ issue is getting serious.</li> <li>• The climate change and marine environmental issues are emerged.</li> </ul>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 (3) Comparison of the present status of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in Korea, China and Japan

- ▶ Comparison of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in Korea, China and Japan

〈Table 2〉 Comparison of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in Korea, China and Japan (As of Sept. 2020 for Korea, Dec. 2019 for China and Japan)

Nation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including university affiliated)	Note
Korea	14 (11 universities)	8 (5 research institutes)	
China	83 (38 universities)	62 (11 research institutes)	Partially surveyed
Japan	80 (52 universities)	7 (7 research institutes)	

- ▶ The research capacity of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in Korea, China and Japan has been identified based on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they wrote (including domestic papers).

〈Table 3〉 Statistics of Journals on the Law of the Sea by the Professors from Korea, China, and Japan

	Korea	China	Japan
Universities surveyed	37	112	111
Professors of International Law	58	142	220
Professors who wrote one or more research papers of the law of the sea	33 (one or more research papers of the law of the sea)	60 (indicating the major in the law of the sea)	80 (one or more research papers of the law of the sea)
Professors who wrote three or more research papers of the law of the sea	14	22	36
Note	Complete Survey	Partial survey	Complete Survey
Considerations	<p>* Korea: Searched the research achievement and papers on personal homepages.</p> <p>** China and Japan: Largely relied on the research achievement disclosed by the researchers themselves. Despite of effort for searching papers, there were certain limitations. Therefore, it is estimated that many have not been captured by the statistics.</p>		

- Comparing the current status in Korea and Japan,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who wrote three or more related research papers numbered 14 in Korea and 36 in Japan, showing little difference in the rate.
- ▶ The present status of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in Korea, China and Japan who published their research paper on the SSCI Journal.
- This comparison study was carried out based on 148 journals in total falling under the 'Law' category in the 'Web of Science', 5 journals with top 5 Impact Factors (IF) falling under the 'Law' category out of 91 journals unde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category and 15 journals addressing general international laws or Asia.

#### (4) Demand of professionals by areas of the law of the sea

- ▶ Estimation on the demand of professionals by areas regarding the pending issues of the law of the sea

〈Table 4〉 Estimation on the demand of professionals by areas regarding pending issues of the law of the sea

Large Classification	Medium Classification	Pending Issue	Required Professionals
Dokdo	Issue of linking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Dokdo with the Law of the S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sponding to various provocation by Japan</li> <li>• Managing the waters surrounding Dokdo</li> </ul>	3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litig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sponding to the unilateral international litigation regarding the Dokdo issue</li> </ul>	3
	Managing the surrounding wa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spute over the waters surrounding Dokdo</li> </ul>	3

Large Classification	Medium Classification	Pending Issue	Required Professionals
Fishery	Managing fishery sto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mplementing/managing the fishery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and China</li> </ul>	3
	Illegal fishing on the costal and adjacent wa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llegal fishing by Chinese and North Korean fishing boats.</li> <li>Managing Daehwatoe Fishery</li> </ul>	3
	Deep-sea fishing vess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UU fishery by Korean fishing boats</li> </ul>	3
Maritime Jurisdicti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negotiation between Korea-China</li> <li>Preparing for Korea-Japan Maritime Borderline Demarcation.</li> <li>EEZ/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China Sea</li> </ul>	4
	Maritime Jurisdi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delimited maritime areas, MSR</li> <li>Responding to/spot inspection/right of hot pursuit for foreign vessels</li> </ul>	3
	Responding to litigations by surrounding count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sponding to the expansion/strengthening of the maritime jurisdiction by China and Japan</li> <li>Responding to international litigations</li> </ul>	3
Marine Living Recourses (excluding fishery)	Living Resources in EEZ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ustainable use and EEZ jurisdiction</li> </ul>	2
	Living resources in the international wa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BNJ issue</li> </ul>	3



Large Classification	Medium Classification	Pending Issue	Required Professionals
Marine Mineral Resources	Continental shelf resource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sponding to JDZ (Issue of the implementation/termination of the agreement)</li> </ul>	2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in the deep-sea b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sues regarding the Law of the Sea due to exploration/development of mining areas</li> </ul>	2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locking the land-based pollution sources</li> <li>Blocking the ship-based pollution sources</li> <li>Marine debris (including plastic wastes)</li> <li>Marine Protected Areas</li> </ul>	4
Maritime Security-linked with the Law of the Sea	Sea border ar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egal status of the NLL</li> <li>Peaceful use/management of maritime border areas</li> </ul>	2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ir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ree Overlapping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s over leodo</li> <li>Security threats by Chinese/Russian military aircrafts</li> </ul>	2
	Pass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curity threats in the strait and the South China Sea and securing the safe sea lane</li> <li>Piracy</li> </ul>	2
International Sea	Arctic Oc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sing the North Pole Route</li> <li>Resource development in the Arctic Ocean</li> <li>Global warming and the thawing of the Arctic Ocean</li> <li>Competing to expand the jurisdiction over the Arctic Ocean</li> </ul>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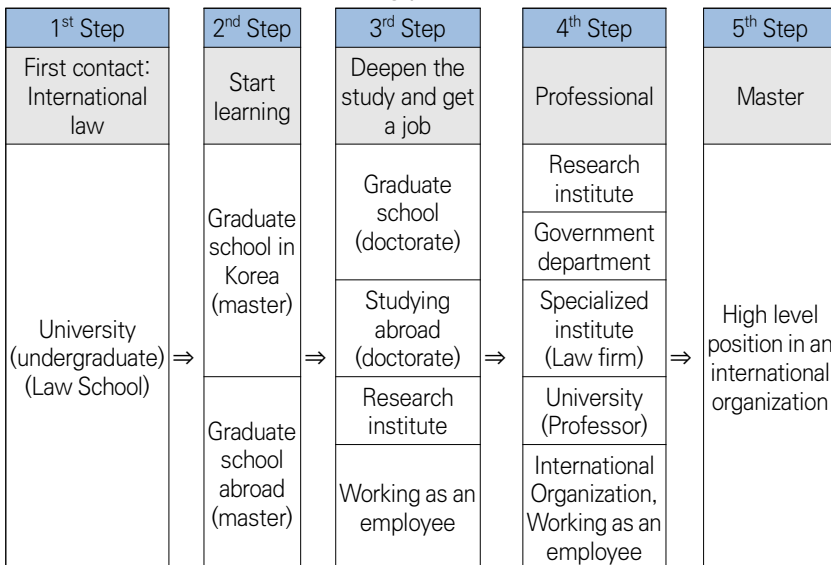
Large Classification	Medium Classification	Pending Issue	Required Professionals
	Antarc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tarctic Treaty system</li> <li>•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 on the Antarctic</li> </ul>	2
	International re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dentifying/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trend on a regular basis</li> <li>• Situations of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li> </ul>	3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 (5) Overview of the training process for professions in the law of the sea

- Process for nurturing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Picture 1〉 Process for nurturing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 ▶ Looking at the status of lectures on the law of the sea being opened in graduate schools in Korea, only 10 schools have open the class at least once a year for the last 5 years. Among them, only the University of Seoul and Inha University have opened the class every year.
- ▶ Present status of earning master's and doctor's degree on the subject of the law of the sea

〈Table 4〉 Number of thesis and dissertation in regards to the law of the sea

Year of degree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Total
category	Master	3	6	4	2	8	2	3	3	8	2	41
	PhD	5	2	1	1	7	1	2	2	0	1	22
Total		8	8	5	3	15	3	5	5	8	3	63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 ▶ Looking at the status of professionals with a doctor degree in the law of the sea in public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4 professionals are working at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while 5 are working in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regarding the law of the sea. Other than these two institutes, there are few professionals working in the law of the sea nor those having employed.

## 2) Policy suggestions and relevant activities

- ▶ This study established a basic direction for continuously nurturing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 First, it is important to carry out education customized in every

stage of the life cycle. Second,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should be nurtured on a continuous and stable basis.

► Measures for training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at universities

- Effort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status of projects for supporting academic research in the field of the law of the sea as well as maritime territory to garner more support from university students.

-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moot court competitions should have a differentiation strategy from other moot court competitions. In addition, lectures in which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students are able to participate should be opened.

- It is imperative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lectures on the law of the sea, while guiding students to write a thesis or dissertation on this subject. Moreover, running programs in the law of the sea for supporting graduate students will enhance the interest in the subject.

-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a research institute specializing in the law of the sea within a university will be able to promote research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at the same time.

► Measures for training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in research institutes

- Research institutes should devise their own programs for nurturing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 Running an internship program will allow new researchers to

build up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on the law of the sea, which will help land a job in research institutes or universities or go abroad for studying.

- ▶ Measures for training professionals through overseas programs
  - Participate in academy programs in the Law of the Sea (The Rhodes Academy of Oceans Law and Policy, The Summer Academy on the Continental Shelf (SACS) by the University of the Faroe Islands, and the IFLOS Summer Academy etc.)
  - Join internship program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think-tanks relevant to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 Support those in master's and doctorate degree courses in foreign universities (1~2 years for master's course and long term support of 4~5 years for doctorate course)

- ▶ Measures for establish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Fishery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lid legal foundation for systematically nurturing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 Establishing a clear legal foundation for nurturing professionals will bring out a long-term effect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policies.
  - The impact of workforce training in nature becomes visible only provided with a long-term and sustainable investment.

---

Therefore, policy should not be changed or suspended during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depending on the interest of a new administration or leading members of the government.

- In an effort to lay a legal foundation, this study proposed addition of a clause specifically concerning the training of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within the Framework Act on Marine Fishery Development.
- ▶ In implementing policy measures for training professionals, specific action plans should be prepared first, followed by a regular assessment system. This method will be able to reduce trial and error, while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 Establishing an assessment system should ensure the participation of external experts in order to guarantee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 ▶ Monitoring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in China and Japan will allow those in Korea to hold a dominant position.
  - Korea's important issues in regards to the law of the sea mostly related to China and Japan. Moreover, it is highly likely that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will devise East nation's position as well as policy that follows.
  - Henc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monitoring and comparative analysis on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in China and Japan that will allow those in Korea to gain advantage in the field.
  - Unlike military or economic warfare, it is the law of the sea equally given to all nations as a weapon of conflict in which victory or defeat is up to professionals in the law of the sea.

- ▶ Building a cooperation network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think tanks will ensure the stable dispatch of professionals and workers.
  - Through such networks, professionals in Korea will be stably dispatched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think tanks to strengthen their capacity.
  - The capacity of experts and professionals in Korean research institutes will be enhanced to the international level through an exchang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think tanks.





## 제 1 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국가경제에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제 현안들은 대부분 해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량의 거의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중간의 패권경쟁, 대륙붕 자원개발 경쟁, 외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독도와 이어도 주변수역의 관할권 문제 등 중요한 국내외 현안들이 모두 해양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 이러한 바다에 관한 국제질서는 1994년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양관련 국제규범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해양질서에 통용되는 해양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국제해양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대응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전문지식

과 경험이 축적된 해양법 전문가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은 2016년 7월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남중국해 사건에 관한 중재판정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던 필리핀이 해양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골리앗인 중국을 상대로 법률전쟁(lawfare)을 벌여 완승을 거둔 사례는 해양법과 그 전문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해양법 전문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양법 전문 인력의 양성 여건은 좋지 않다. 첫째, 해양법 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대학원에서 해양법을 전공한 신진 인력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적기 때문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역량을 배양해 나가기가 어렵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중심의 대학교에서는 국제법 교수의 채용이 크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의 한 분야인 해양법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의 신규 채용도 매우 드물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에서는 해양법 전공자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채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해양법 신진인력들이 훈련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현재 새로운 해양법 인력은 연구나 주어진 과제를 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전문성의 차이가 많이 나며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실패하거나 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해양법 역량은 더욱 약화되고, 치열한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점점 해양에 관한 국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및 국제해양법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국익을 수호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해양법 전문인력의 양성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해양법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되도록 대학(원)의 해양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해양법 강좌 정기 개설, 특정 대학 내 해양법 특별과정 개설, 해양법 전공자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신진 해양법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창출과 이들의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는 우수한 인력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때문에 연구기관 등에서 신진인력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적 수준의 해양법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현안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최고 수준의 극소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해양 관련한 국가적 현안문제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 기여를 하고,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원 재판관 등으로 활동하며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양법 인력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해양문제를 두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국가 주도로 해양법을 통한 해양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계적인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 해양법 전문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해양법 전문인력 부족 현실과 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해양법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양성되어 국가의 해양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학(원)에서의 해양법 전공 확대, 신규 해양법 인력의 전문성 강화, 국제적인 역량강화와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중장기·체계적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선행연구 및 본 보고서에서 상정하는 ‘해양법 전문인력’의 개념을 정의한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서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 연구의 방법론과 결론으로 제시하는 정책제언 부분에서 본 연구에 대

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법 현안이 여러 시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오늘날 주요한 현안은 무엇 인지를 검토하고, 이어서 한·중·일 3국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현황을 인원 및 역량으로 나누어 비교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적정한 해양법 전문인력의 수요를 추정해 본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현황을 검토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현황을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해양법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을 다룬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연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여러 제한들이 있는 있다. 첫째, 해양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양법 외의 국제법은 제외한다. ‘국제법’의 범주에는 해양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조약법 등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이 중에서 해양법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양법과 관련된 현안이나 쟁점들을 본 연구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셋째, 해양법 전문인력의 적정 규모나 전문성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도 파악해야 하지만 해외 사례,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검토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검토 대상 국가들을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으로 한정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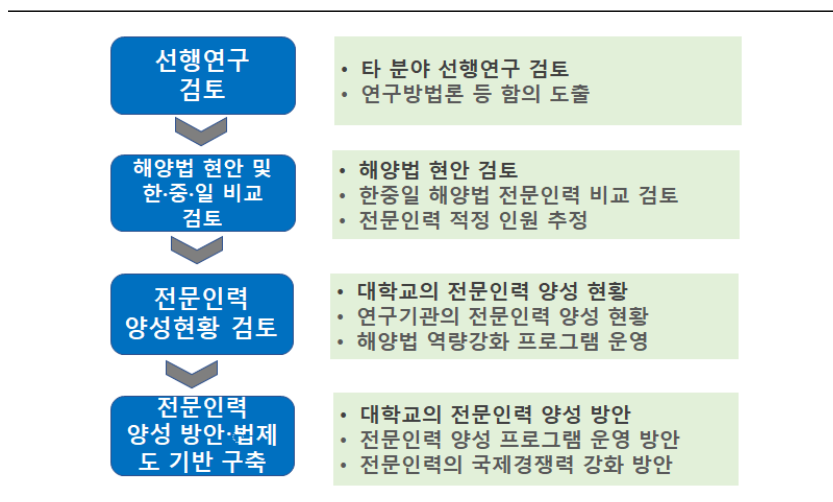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방법론도 그에 부응하도록 다음과 같이 활용하였다.

첫째, 광범위한 1차 자료의 수집과 신규 자료 작성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연구 관련 1차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였다. 예컨대 한·중·일의 해양법 전문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 홈페이지와 논문 원문 제공 사이트들을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현황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 1차 자료의 수집과 작성이 중심이기 때문에 2차 자료 중심의 문헌연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였다.

둘째, 비교연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양법 전문인력의 적정 규모와 전문성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문인력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해양을 사이에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객관성 담보와 현실성 있는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활용 및 정부부처 협의기능 강화이다.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특히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결과가 장차 해양법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정책 자료로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 체계



자료: 저자 작성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1.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해양분야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연구방법론을 비롯해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윤성순, 조동오(2009)는 해양환경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처음 시도한 것으로 해양환경분야 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과 향후 활용성을 제고할 분야별 중·단기 대책을 연구했다. 당시 환경권에 대한 인식 제고로 환경 관련 선진기술이 개발·도입되고 환경분야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양환경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배경에서 해양환경을 위한 건전한 인적자원 양성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i) 환경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정부·산업에서의 인력 수요 확대의 순환모델 형성, ii) 해양환경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을 수립, iii) 전문인력 관리방안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반 관리, iv) 전문인력간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해양환경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기금 및 분담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할 독립적인 회계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의 학문적 특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관련 인력 배출이 필요하나 대학교육에서 제공하는 환경 전공으로는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현장감을 보강한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책 제언으로는 인력 양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양환경 전문인력 양성과 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 집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수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수급 전망 등 현재의 인력수급구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인력 양성 정책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변화하는 기술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검증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용 확대와 활용방안 검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전문인력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및 신규 전문 인력이 적시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호, 고병욱 (2010)는 해운산업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해 연구했다. BRICs의 등장으로 해운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IMO MARPOL 중심으로 선박 배출가스 통제가 시작되는 등 환



경 및 안전규제 강화와 지식 정보 시장 확대로 해운 산업의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초 자료로 실태·설문조사를 통해 해운 산업 전문 인력 확보 현황을 조사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적용을 통한 수급 전망 모델 제시하고 그 결과로 수급 전망 대상이 되는 21개 업무영역을 선별했으며 변화하는 해운 산업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 능력이 변함에 따라 해운 전문인력에 대한 재교육 수요가 높다는 점을 파악했다. 정부, 대학, 민간의 해운 전문인력 양성 현황 조사에서 해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부족, 직업경력개발 프로그램 미비, 해운 전문인력 취업교육 부족, 해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조정기능 미비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해외사례로 EU,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싱가포르, 일본의 해운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정책을 조사한 결과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해운클러스터 단위로 해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석사학위 수준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진행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운 전문인력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되고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안했다. 이를 기반으로 해운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 콘텐츠의 강화, 해운 전문인력 교육사업 관리체계를 일원화, 해운 전문인력 경력개발 프로그램 도입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 교수요원 확대 시급성을 지적했다. 방안으로 해운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내외 전문가 등록제 운영, 해운 전문인력 대상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사뿐만 아니라 경영, 금융, 법률 등도 포함한 해운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교육의 수요·공급, 교육 기회의 형평성, 교육 프로그램 관리 조직, 경력개발프로그램 도입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해운 전문인력 교육사업을 총괄 관리할 조직 설립을 제안했다.

한기원, 안요한, 현우용(2013)는 해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해양신산업이 등장했으나 당시 학제 및 전문인력 정책으로는 해양신산업 분야 인력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인식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해양신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해양관련 전문인력 수요 증가 추세에 비해 박사급 연구원 등 필요 전문인력의 공급 불균형을 우려했다. 그리고 국내 주요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의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조사했다.

문제점으로 부처간 업무영역 중복,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외에는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개별법 부재하여 해양 분야와 해양신산업 분야를 지원할 관련법 미비, 해양과학기술 인력양성 국가 계획 미비, 대학원생의 양적 부족, ‘해양’이라는 특수성으로 졸업생의 해양신산업 분야 유인방안 부재, 전문인력 양성 국가 R&D 사업 부족 등을 들었다.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정책 방향으로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개별 법제도 정비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장원, 이종훈, 이정아(2014)는 국내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국내 레저산업 기초환경과 제약 요건과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도입기 수준의 해양레저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의 대중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관련 기업과 인력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레저 관련 기업체 실태조사 결과 해양레저 전문인력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추진과제로 전문인력 현황 조사와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 마리나 산업이 발달된 국가에서는 마리나 관련 교육이 대부분 정부와 민간 업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따라서 전문인력 교육이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우리의 경우 마리나 관련 인력양성과 취업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기업 현장과 연결되지 못해 효율성 떨어지므로 협회의 정비와 전문 교육기관 설립 필요를 제안했다.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방안으로 산학연 연계 교육모델을 개발, 전문인력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해양레저 관련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이원화하여 대학·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중·고 과정과 기업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 과정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마리나 협회와 프로그램 교류, 해외 파견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에 통용되는 자격증을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2014년 발표된 해양수산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으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기초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아가 해양레저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해양레저 및 마리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법령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마리나 항만 개발, 관리, 운영 관련 사항에 한정하고 시설 조성 단계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마리나항만 운영, 마리나항만 내 레저보트 운항은 「수상레저안전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의 법률이 적용

된다. 법체계 개편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고, 가칭 마리나협회의 설립근거 마련과 별도의 기금조성을 통한 산업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선을 제안했다.

김덕기, 한희정(2018)는 관광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실행 과제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관광산업 전문인력 현황 및 전망, 국내 및 해외(미, 영, 캐, 일) 전문인력 양성 정책 사례를 분석했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 관련 정책과 인력 양성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며, 인력 양성 정책 개발을 위한 조직의 상시 운영, 전문인력 양성정책 사업 추진 전 철저한 평가 관리 체계 구축, 현장 경험이 중요한 관광산업 인력을 위한 산학 협력 강화 정책추진, 경력 단계별 국가 직무능력 모델 제공,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 개편, 관련 자격증 신설 등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 산관학 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중심 인력양성, 종사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 미래 수요 대응 인력 양성,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 강화, 산관학 협의체 구성, 종사원의 경력단계별 재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관광산업 전문인력 중기 계획 수립(안)으로 관광진흥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산업 종사원 교육수요 조사, 장기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각 추진과제별 추진시기에 따라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 선행연구의 시사점

앞서 살펴본 해양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은 모두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거나 심층 인터뷰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일반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해당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설문의 결과는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연구자만큼 고민을 깊이 하지 않았거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히려 설문결과가 바람직한 연구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겠으나 이를 설문조사 형태로 일반적인 조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결론으로서 실효성 있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와 함께 기금 마련과 같은 재정적 부분까지 제안사항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루고자 한다.

## 2) 본 연구의 차별성

해양법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을 다루는 선행 연구는 없기 때문에 선행연구와의 유사성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과 결론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초자료의 조사와 정리에 중점을 둔다. 연구에 참고할만한 2차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자료의 조사와 정리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었다. 예를 들어 기준에 맞는 해양법 전문인력이 현재 몇 명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모든 대학과 중국의 100개 이상의 주요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검색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통로로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전문인력 양성 방안과 관련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떠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교, 연구기관과 유관 기관,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등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해양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li> <li>• 연구자(2002): 윤성순, 조동오</li> <li>• 연구목적: 해양환경분야 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과 향후 활용을 위한 분야별 중단기 대책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관계자 면담</li> <li>• 설문조사</li> <li>• 전문가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분야 전문 인력 양성고 정부와 산업에서의 인력 수요 확대의 순환모델 형성</li> <li>•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li> <li>• 데이터베이스 기반 관리, 전문인력간 네트워크 강화 방안</li> </ul>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해운산업 전문 인력 수급전망과 정책 방향</li> <li>• 연구자(2010): 김우호, 고병욱</li> <li>• 연구목적: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조사</li> <li>• 수요자 조사</li> <li>•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li> <li>• 전문가 세미나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다이내믹스 적용을 통한 수급 전망 모델 제시해운 전문인력 교육 기본계획 수립 필요</li> <li>• 교육 콘텐츠 강화, 해운 전문인력 교육사업 관리체계 일원화, 해운 전문인력 경력개발 프로그램 도입방안 제시</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해양과학기술 전문분야 양성 정책 연구: 해양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li> <li>• 연구자(2013): 한기원, 안요한, 현우용</li> <li>• 연구목적: 신산업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li> <li>• 국가 데이터베이스 자료 분석</li> <li>•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등</li> <li>• 설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신산업 분야별 동향과 전망 분석</li> <li>•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산업별 및 국내외 사례 검토</li> <li>•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관련 개별 법제도 정비 제안</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li> <li>• 연구자(2014): 홍장원, 이종훈, 이정아</li> <li>• 연구목적: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추진 방안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li> <li>• 현장조사</li> <li>• 해외 사례조사</li> <li>• 전문가 설문 조사</li> <li>• 전문가·관련 업체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추진과제로 전문인력 현황 조사와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li> <li>• 마리나 협회의 정비와 전문 교육기관 설립 필요</li> <li>• 산학연 연계 교육모델을 개발과 국제협력 추진</li> <li>• 마리나법 개정안 제시</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li> <li>• 연구자(2019): 김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자료, 문헌자료</li> <li>• 수요전망분석</li> <li>• 심층인터뷰,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산업 전문인력 현황 및 전망</li> <li>•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정책 사례</li> </ul>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한희정 • 연구목적: 관광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 제시		•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책 추진 로드맵 제안
	본 연구	• 과제명: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 연구목적: 해양법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제시	• 문헌 조사 • 전문가 자문(해외사례 조사) • 전문가 워크숍 및 국제회의(세션주제) • 비교연구(한·중·일)	• 해양법 현안의 변천한 중일 해양법 전문가 현황 • 한국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현황 • 해외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법제도 기반 마련

## 제4절 해양법 전문인력의 개념 및 해양법의 중요성

### 1. 해양법 전문인력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전문가 또는 전문인력이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이다.<sup>1)</sup> 영어로는 “expert”란 말이 이 의미에 가장 가깝다.<sup>2)</sup> 그러므로 해양법 전문가란 해양법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네이버 국어사전, 「전문가」, (검색일: 2020. 11. 8)

2) 메리언 웹스터 사전, 「expert」, (검색일: 2020. 11. 8)



그런데 전문가의 속성인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란 말은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으로 객관화해서 파악하기란 어렵다. 예컨대 단순히 국제법 또는 해양법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해양법의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는지, 20년 이상 국제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해양법 분야의 논문을 1~2편 쓴 사람을 해양법 전문가로 부를 수 있는지, 해양법 분야의 박사학위는 없지만 해당 분야에서 오랜 동안 일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연구원이나 또는 학위가 없는 국제법원의 재판관을 해양법 전문가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양법 “전문인력” 또는 전문가를 어떻게 분류하고,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해양법 “전문인력”에 대한 개념정의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의 어떠한 보고서나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소 자의적 요소가 있으나, 해양법 전문인력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개념 정의하고, 본문에서는 그러한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해양법 전문인력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첫째는 형식적 의미의 전문인력으로, 해양법을 학위논문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또는 해양법 외의 국제공법 관련 학위를 받고서 해양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양법 관련 석사학위를 받고서 오랜 기간 해양관련 업무를 할 경우 해양법 전문인력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근무 연수나 전문성 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는 실질적 의미의 해양법 전문인력을 말한다. 단순히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을 넘어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해양법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올바른 해결 방법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적으로 교류하면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비록 해양법으로 박

사학위를 소지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오랜 경험과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 해양법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사람을 포함한다.

## 2. 해양법 전문인력의 직업적 분류

위에서 살펴본 해양법 전문인력의 개념을 토대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주요한 직업들을 분류해 보았다.

〈표 1-2〉 해양법 전문인력의 직업군

직업		소속	특징
국내	교수	• 대학교, 특정 연구소	• 교육 및 학술연구 중심
	연구원	• 정부·공공·민간 연구소	• 정책연구중심
	변호사	• 법률사무소, 정부·연구소	• 소송·분쟁해결 중심
국외	국제기구 공무원	• 일반 행정직 (간부급)	• 개인적 지원 • 개인 역량 좌우 • 정부 추천(선택적)
	국제기구 임원	• 국제기구 수장 (또는 선출직 고위직)	• 정부 추천 • 국가간 정치적 역학관계 고려 • 당사국 회의 등에서 선출
	재판관	• 국제해양법재판소, • 국제사법재판소	• 고도의 전문성 •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 (정부 역할 중요)
	교수	• 해외 대학교	• 교육 및 학술연구 중심 • 국제소송 변호인 활동 • 정책 자문
	연구원	• 해외 싱크탱크·대학	• 정책 연구 • 정책 자문
	법률사무소	• 해외 로펌	• 국제소송 • 국가 등에 정책 자문

자료: 저자 작성

### 3. 해양법 및 해양법 전문인력의 중요성

해양법적 현안을 경시하거나 적절한 대응에 실패할 경우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반면, 그러한 현안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거나 공고히 하는 등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가장 최근의 국제 사례 중 해양법을 가장 적절히 이용한 것으로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을 중재재판에 제소한 것을 들 수 있다.<sup>3)</sup>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여겨졌던 남중국해의 관할권 다툼에서, 필리핀이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필리핀은 재판소가 사건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요소들을 교묘히 피하면서 청구를 하였고, 재판소도 필리핀이 청구한 거의 대부분의 청구취지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안에서도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일방적 승리를 선언하였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해양법 학자들, 특히 소송 전문가들의 역할이 두각을 나타낸 사건이다. 중국이 재판소의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의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 그리고 미국과 견주고자 하는 강국으로서 재판소 판정 불이행에 따른 국제적 신뢰도 타격은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국제법 또는 해양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익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 우선은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에서 배제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1952년 4월 28일)를 100일 앞두고서 인접 해양에서의 자원과 독도

3)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erits (The Hague, 12 July 2016)*

를 수호하기 위해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한 것이다.<sup>4)</sup> 일본어선의 독도 주변수역 조업을 금지하고 있던 이른바 맥아더 라인<sup>5)</sup>의 효력도 평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사라질 위기가 배경이 되었다. 1945년 미국 트루만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 이후 연안국들이 자국의 관할권을 확장하던 국제적 추세를 잘 이용한 것으로, 독도와 관할해역에 대한 주권을 선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다른 예로 동중국해 대륙붕 확장 선언과 한일 대륙붕공동개발 협정의 체결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중국해에 대량의 유전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유엔 보고서와 육지영토의 자연 연장 개념을 지지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1969년 판결<sup>6)</sup>이 나오자 곧바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였다.<sup>7)</sup> 이에 다급해진 일본이 협상에 임하게 되어 결국 1974년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되게 되었다. 이 협정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상 제7광구의 대부분을 공동개발구역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고서 발 빠르게 대처한 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한일 공동개발협정에서 탐사와 개발을 양국이 ‘공동’으로 하기로 한 부분은 오늘날에 와서 돌이켜 볼 때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해양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해양관할권을 크게 확대하거나 공고히 할 수 있다. 어업이나 해저자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서 이러한 해양관할권 확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국익은 영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

4)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1952년 1월 18일 공표, 국무원 고시 제14호)

5)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1033호 (1946년 6월 22일 제정)

6)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69, p. 3.*

7) 「해저광물자원개발법」 1970.1.1. 제정 및 시행.

## 제 2 장

# 한국의 해양법 현안 및 한·중·일 해양법 전문인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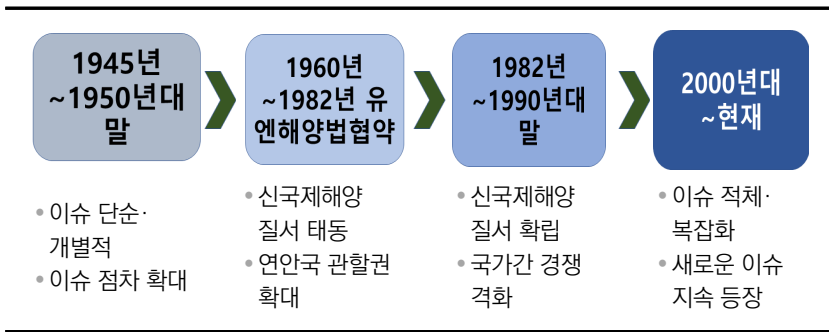
## 제1절 한국의 해양법 현안

국제교류의 증가, 국제규범의 복잡화·다양화, 국가들의 해양영토 경쟁 확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해양법 현안들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현안들의 내용도 비교적 단순한 쟁점에서 점차 복잡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연안국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법 현안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크게 네 시기(1945년부터 1950년대 말, 1960년대부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전, 1982년부터 19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현재)로 구분해서 특징적인 사건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개관해보고자 한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구분의 중요한 시기로 잡은 이유는 오늘날 국제해양질서는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이 협약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협약이 발효된 시기는 1994년 이지

만 협약 채택 후부터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국내적 이행법률들을 채택하고 협약의 내용들을 국가들이 준수하면서 국제관습법화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 말은 국내적으로 한·일 어업협정이 새로이 체결되고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는 등 국내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2-1〉 해양법 현안의 시기별 주요 흐름



자료: 저자 작성

## 1. 1945년 이후 1950년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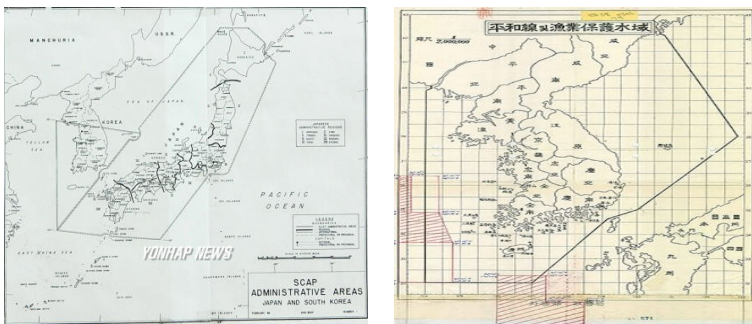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의 시기를 거쳐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지만 곧이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의 대외적 대응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해양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특히 독도 문제, 어업 문제 및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들 수 있다.

### 1) 독도 문제

독도를 둘러싼 문제는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항

시적 문제이다. 일본을 간접 통치하던 연합국사령부는 지령을 통해 일본의 행정구역 범위를 선포하면서 독도를 제외하고 일본의 어업 범위에서도 제외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은 1946년 이후 1951년 9월 채택하기까지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한다는 내용이 조약안에 포함되고 빠지기를 거듭하다가 최종 안에는 결국 빠지게 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인 와중에서 평화조약이 발효(1952.4.28.)를 앞둔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른바 ‘평화선 선언’)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천명하였다.<sup>8)</sup>

〈그림 2-2〉 독도 관련 지도



자료: SCAPIN 677 (1946.1.29.) (좌) 및 평화선 지도 (1952.1.18.) (우)

미군이 독도를 폭격장으로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의 항의를 받고 철회하기도 하고, 일본인의 독도 진주를 막고자 독도 의용수비대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는 1953년 7월부터 1962년 7월까지 주고받은 구술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논쟁을 펼쳤다.

8)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1952년 1월 18일 공표, 국무원 고시 제14호), 평화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종화, 『현대한일어업관계사』(세종출판사: 2000), p.20.

## 2) 어업 문제

1950년대 한국 전쟁과 그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국민 생활에 있어서 어업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 어업 주권 확보를 위해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포하고, 1953년 12월 12일에는 북한 측 수역과 독도를 포함하는 「어업자원 보호법」을 제정·시행하였다.

## 3) 북방한계선(NLL)과 해양안보 문제

1952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해상에서의 경계가 설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해 8월 30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서해와 동해에 각각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이 선은 1960년대까지 북한에 의해 암묵적으로 승인되었다.

# 2. 1960년부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전

이 시기 한국의 가장 중요한 해양 현안으로 어업문제와 대륙붕 자원개발 문제, 그리고 NLL과 해양안보 문제가 있다.

## 1) 해양관할권 문제

1977년 5월 일본이 영해법을 제정해서 영해 폭을 12해리로 하되 대한해협 등의 해협에서 3해리 영해 폭을 정하자, 우리나라도 같은 해 12월 영해법을 제정하였다. 영해 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본 12해리를 하되 대한해협에는 3해리 폭으로 하였다. 영해법은 이때 처음 제정된 것으로 당시 추세에 맞추어 영해 폭을 최대 12해리로 하였다.



## 2) 어업 문제

1960년대 어업은 국가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기에 어업문제는 국가의 중대한 관심사항이었다. 그래서 1965년 6월 22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면서 어업협정도 함께 체결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어업능력은 점차 확대되어 원양어업으로 진출하기에 이른다.

## 3) 대륙붕 자원개발 문제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대륙붕 개념에 대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고,<sup>9)</sup> 같은 해 동중국해에 풍부한 유전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유엔 보고서<sup>10)</sup>가 발표되자, 우리나라가 1970년 1월 1일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동중국해의 대륙붕을 확대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이 항의하면서 양국 간 협상이 진행되어 1974년 북부 대륙붕에 대해서는 경계를 설정하고 남부 대륙붕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두 개의 협약이 채택되었다.<sup>11)</sup>

9) *North Sea Continental Shelf(1969)*

10) 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n Offshore Areas, "Report of the Sixth Session", 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1969; Monika Chansoria, "1969 Report by 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ical Debate over Senkaku Islands", *Japan Review*, Vol. 2 No. 3 (2018), p.41. 재인용

1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1974년 1월 30일 채택, 1978년 6월 22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년 1월 30일 채택, 1978년 6월 22일 발효)

#### 4) 북방한계선(NLL)과 해양안보 문제

북한이 NLL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설정 후 20년이 지난 1973년 12월에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이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道界)의 연장선 이북은 자신의 해역이며, 서해 5도에 항행하는 남측 선박은 자신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0년대에는 북한과의 해상 무력충돌로 인한 해양안보 위협이 증가하였다.

### 3.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1990년대 말

1982년 12월 10일 채택되고 1994년 11월 10일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해양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무엇보다 영해 폭의 확장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의 도입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가 간 관할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내수·영해·접속수역·EEZ·대륙붕·공해·심해저로 해역이 구분되면서 해양에 대한 규제가 보다 촘촘해졌다. 또한 1995년 공해어업협정을 비롯해 다양한 관련 협약들이 채택되었다. 이렇게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많은 협약들이 하나의 국제해양법 체제를 이루면서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할 해양법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 1) 독도 문제

이 시기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은 고조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과 체결한 어업협정에서 정한 동해 중간수역 내에 독도가 위치하는 것을 두고서 국내에서 독도의 주권 훼손 논쟁이 있었다.

## 2) 해양경계 등 관할권 문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되면서 해양관할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과 일본이 EEZ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해리 EEZ를 선포하였다.<sup>12)</sup> 이에 우리나라도 EEZ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관할권 확보에 나섰다.<sup>13)</sup> 이와 함께 해양과학조사법을 제정<sup>14)</sup>하는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 3) 어업 문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국내외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중요한 갈등으로 부상하면서, 어업에 관한 기존 협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등 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조업 문제 등도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확보하기 위한 어족자원의 보존과 관리도 중요한 문제였다. 또한 일본과의 지난한 협상 끝에 어업협정이 1998년 11월 어업협정이 새롭게 체결되고 다음 해 1월 발효하였다.

## 4) 대륙붕 자원개발 문제

1979년 석유공사가 설립된 이후 1980년대부터 자체적인 석유탐사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근거로 한 공동탐사가 이루어졌지만 유의미한 자원이 발견되지 않자 199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공동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12) 일본은 1996년 6월 14일 제정, 중국은 1998년 6월 26일 제정.

13) 1996년 8월 8일 제정.

14) 1995년 7월 5일 제정.

1994년 동태평양 공해상 클라리온 클리퍼튼(Clarion-Clipperton) 해역에서 심해저 망간단괴 광구(15만km<sup>2</sup>)를 국제해저기구에 등록하면서 심해저 자원개발에 본격 진출하였다.

## 5) NLL과 해상안보 문제

1999년 북한은 NLL을 부정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을 주장하는 등 NLL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 4. 2000년대 이후 현재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 및 한반도 주변 해양법적 문제가 한층 복잡해지고 분화된 양상을 보인다. 국가들 간 해양관할권 경쟁이 매우 격화되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문제와 갈등이 심화되고,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 1) 독도 문제

2000년대 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내 우경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양국의 해양에 대한 관할권 강화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왜곡된 주장을 담은 초·중·고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외교청서·방위백서를 통해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 등을 통해 실제로 독도 주변수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리나라는 2005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과학조사를 하고, 독도를 민간인에 개방하는 등 다양한 행정조치를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오고 있다. 독도 문제는 영토주권 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문제, 이로 인한 주변수역 해양관할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 2) 어업 문제

일본 및 중국과의 어업협정이 발효하면서 주변국과의 어업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협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어선의 우리 측 수역(EEZ, 영해)에서의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본과는 우리나라 어민의 일본 측 EEZ 내 입어권에 대한 협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FAO,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불법조업(IUU 어업<sup>15)</sup>)에 대한 규제와 비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아프리카 연안, 인도양, 남빙양 등에서의 불법조업 문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sup>16)</sup> 최근에는 중국과 북한 어선들의 한·일 어업협정상 동해 중간수역과 대화퇴어장에서의 조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3) 해양경계 등 관할권 문제

한반도 주변의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경쟁은 갈수록 깊어지고 확대

15)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16) 2013년 미국과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자, 우리나라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들과 협상을 벌여, 결국 2015년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미국은 2017년 다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가 2019년 해제한 바 있다. (프레시안, “한국 어선들, ‘더 많이 잡기 위해’ 불법어업?” (2020년 5월 1일). 미국과 EU에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국격 저하는 물론 해당 국가로의 수산물 수출이 막히는 등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200해리 EEZ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해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이어도 주변수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가장 중간선의 우리 측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5년 12월 시작된 해양경계획정 공식협상은 2020년 7월 국장급 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012년 12월 한국과 중국이 동중국해 대륙붕을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하고자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했으나 일본의 항의로 심사절차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 4) 대륙붕 자원개발 문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의 공동탐사를 위해 2002년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단 간 공동의 탄성과 탐사 운영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004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동탐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공동탐사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JDZ의 공동탐사 문제는 JDZ 협정의 이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법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동 협정에 의하면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협정 발효 50년이 되는 2028년 6월 22일 이후 언제든지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 5) 북방한계선(NLL), 서해 및 해양안보 문제

NLL과 서해에서 북한의 안보위협은 2000년대 이후 점증하였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및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2014년 북한의 서해 포격사건 등 일련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2016년 이후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의 중립수역에 중국 어선이 조업하면서 이

수역이 새로운 불안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이 2013년 11월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우리나라도 기존의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여 이어도 상공은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모두에 속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 과학자연맹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후 7년 동안 한국, 일본 및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4천회 이상 침범하였다.<sup>17)</sup> 동해에서도 2019년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의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특히 러시아·중국의 군용기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 6) 해양환경 보호 문제

2000년대 이후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제적으로 보호조치가 강화되면서 국내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초국경 간 대기오염과 육상 및 선박기인 오염원의 해상투기, 해양플라스틱쓰레기에 대한 규제는 오늘날 핵심적인 관심사항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관리에 힘쓰고 있다. 최근 국제판례는 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양환경보호·보전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연안국의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sup>18)</sup>

## 7) 현대 해양법 현안 정리 및 주요 국제해양 이슈

### (1) 해양법 현안 정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해양법 현안들을 서해, 남해 및 동해 등 지역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17) 조선일보, “中 7년간 4000회 이상 韓日 방공식별구역 침범” (2020년 8월 27일)

18)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2016)

〈표 2-1〉 한반도 주변 주요 국제해양법 현안

지역	내 용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북방한계선, 접경해역 관리,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리, 해양환경 보호, 해양경계획정, 경계미획정 수역 해양과학조사 등 남북 및 한중 간 해양법 문제
남해, 동중국해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 제주해협 및 대한해협 통항 문제, 이어도 해역 관할권, 이어도 상공 방공식별구역의 한중일 3중첩 문제, 경계미획정수역 해양과학조사 문제, 해양환경 보호
동해	독도 영토주권, 독도 주변수역 일본과의 관할권 충돌, 동해 표기 문제, 동해 접경해역 관리, 남북·러일의 동해 경계획정,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화퇴 어장 어업 관리, 중러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문제

자료: 저자 작성

## (2) 주요 국제해양 이슈

한반도를 넘어서 보더라도 전통적 국제해양법 이슈와 함께 새로운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중동의 호르무즈해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99%가 통과하는데, 이 해협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무력다툼으로 전개될 경우 봉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나라의 원유수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해운산업→원유산업→전 산업으로 여파가 확산될 수 있다. 에너지안보 위협으로 인해 국가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해협 및 해로(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문제는 경제나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해협에서의 통항권 문제와 같이 해양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해양법 이슈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2〉 한국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해양법 이슈

구분	내 용
전통적 이슈	동중국해·남중국해 해양분쟁, 소말리아 및 말라카해협 해적행위, IUU 어업, 북극 항로 이용과 자원개발,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심해저 자원개발, 대륙붕 한계 확장
새로운 이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이의 대립 격화, 미국-이란 간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해협 통항 위협과 해상교통로 확보, 국가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BBNJ)에 대한 규범화 논의, 선박의 대기오염원 배출 규제 강화

자료: 저자 작성

## 5. 소결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 주요 해양법 현안들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시간이 지날수록 해양법 이슈들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더욱 그러하다.

둘째, 초기에는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점차 긴장과 갈등관계가 상승·발전하였다. 예컨대 NLL의 경우 1953년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후 약 20년 동안 북한에 의해 암묵적으로 지켜졌지만, 1973년 이후 북한은 점차 NLL을 부정하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급기야 여러 차례 무력도발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초기에는 사안이 단순했으나 점차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넷째, 현안을 둘러싼 갈등의 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2000년대 이후 독도를 둘러

싼 한일 간 갈등관계, JDZ협정의 이행을 둘러싼 한일 간 대립, 주변 국과의 해양과학조사 등 해양경계미확정 수역에서의 집행관할권 갈등,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및 적극적 실행에 따른 안보적 긴장관계 고조 등이 그러하다.

다섯째, 초기에 비해 오늘날 한국의 해양법 현안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특징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실행된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이 고조되고, 중국과 일본이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해양법 현안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교통과 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국제적 교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들 상호 간의 의존성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및 BBNJ와 같은 새로운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또한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특징들은 오늘날 해양법 인력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필요하고 또한 더욱 더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3〉 한국의 주요 해양법 이슈 시기별 개관

시 기	주요 해양법 이슈	특 징
1945년부터 1950년대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문제 시작(한일 정식 공방)</li> <li>• 어업 문제 (일본과 관할수역 중첩)</li> <li>• NLL 설정 (갈등요인 잠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문제 시발점</li> </ul>
1960년대부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문제('60년대 초 문제 부각: 일본의 ICJ 공동제소 제안)</li> <li>• 어업 문제 관심 확대</li> <li>• 해양관할권(영해 12해리)</li> <li>• 자원개발(JDZ) 설정으로 관심 확대</li> <li>• 북한의 NLL 이익제기(위협 잠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문제 부각</li> <li>• JDZ 시작</li> <li>• NLL 문제 시작</li> </ul>

시 기	주요 해양법 이슈	특 징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부터 1990년대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문제(수면 아래)</li> <li>• EEZ 관할권 중첩문제</li> <li>• 어업문제 부상(어획능력 향상으로 어족자원 고갈, 불법조업 문제 부상)</li> <li>• 대륙붕 자원개발(JDZ)</li> <li>• NLL 문제 갈등 부상(북한의 NLL 부정 군사 경계선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주변국과 EEZ/대륙붕 중첩으로 인한 경쟁 가속화</li> <li>• 어업문제 부각</li> </ul>
2000년부터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문제 갈등심화(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회부 제의, 주변수역 갈등 심화)</li> <li>• 어업문제 심화(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동해 중간수역과 대회퇴 어장 조업, 한국원양어선의 IUU어업)</li> <li>• 해양과학조사 등 해양관할권 경쟁 심화</li> <li>• 이어도 주변수역 관할권 갈등 심화</li> <li>•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시작</li> <li>• JDZ협정 법적 문제로 쟁점화, 동중국해 대륙붕한계연장 문제</li> <li>• 서해 NLL과 해양안보 갈등 심화</li> <li>•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외국 군용기의 빈번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li> <li>• 해양환경보호 문제 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문제 고도의 갈등상황 유지</li> <li>• 불법조업 문제 심각</li> <li>• NLL과 서해 안보 갈등 심화</li> <li>• 해양관할권 갈등 심화</li> <li>• JDZ 문제 심화 중</li> <li>•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문제 부상</li> </ul>

자료: 저자 작성

## 제2절 한·중·일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비교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중국 및 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인원을 비교하고, 학술지 게재를 기준으로 이들의 역량을 파악한다. 이러한 한·중·일의 해양법 전문인력 비교 검토는 장점을 지니는 동시에 유의할 점 또한 있다. 장점은 무엇보다 해양을 사이에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전문인력 현황 파악을 통해 그들의 인적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유의할 점은 인력의 현황은

국가마다 다른 상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비교결과가 절대적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국이 한국에 비해 인구가 약 26배 많다고 해서 양국 간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차이가 26배가 나야 한다거나, 또는 경제력과 정비례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대응하고 나아가 압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중·일과의 비교검토는 이를 위한 참고가 된다.

위와 같은 장점과 한계점을 유의하면서 아래에서는 한·중·일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인원 및 역량을 파악해 본다. 이는 다음 절에서 검토하는 우리나라 해양법 전문인력의 필요한 적정 인원을 추정하는 데에 활용된다.

## 1. 해양법 전문인력의 인원

### 1) 해양법 전문인력 인원

#### (1) 한국

앞서 서론 제4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양법 전문인력의 기준은 대학교 교수의 경우 해양법 관련 논문을 3회 이상 작성한 경우, 연구기관 연구원의 경우 해양법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해양법 외의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서 해양법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자이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준에 의할 때, 해양법 전문인력은 2020년 9월 30일 기준 대학에는 총 14명, 연구기관에는 총 8명의 인력이 파악되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4〉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연번	대학교			연구기관	
	대학명	단과대학명	인원	연구기관	인원
1	국민대	법과대학	1	아산정책연구원	1
2	목포해양대	해양경찰학부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3	부경대	법학과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4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2	한국극지연구소	1
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
6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1		
7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		
8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1		
9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2		
10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		
11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1		
		해사수송과학부	1		
합 계			14	합 계	8

자료: 저자 작성 (2019.12.30. 기준)

## (2) 중국

중국의 해양법 전문인력과 관련해서 1천개가 넘는 대학을 전수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상위 1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다만, 정부 및 대학 부설 주요 연구기관들에 속해 있는 해양법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포함하였다. 해당 학교 또는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하되 인터넷 검색을 보충적으로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본인의 전공분야를 해양법으로 표시하였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작성한 경우 해양법 전문인력으로 분류하였다.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거나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는데, 이 경우 해양법 전문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기관도 많았지만 통계에서는 배제하였다.

〈표 2-5〉 중국의 100대 대학교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연번	대학명	인원	연번	대학명	인원
1	중국정법대학	4	20	해남대학	6
2	무한대학	5	21	해남대학	1
3	중국인민대학	3	22	기남대학	1
4	청화대학	3	23	화남이공대학	1
5	북경대학	5	24	서남교통대학	1
6	서남정법대학	2	25	중국해양대학	5
7	중남재정정법대학	1	26	북경항공항천대학	1
8	난징대학	1	27	북경이공대학	1
9	상해교통대학	2	28	상해해사대학	3
10	절강대학	4	29	대련해사대학	4
11	하문대학	3	30	국제관계학원	1
12	사천대학	1	31	영파대학	2
13	복단대학	1	32	화동사범대학	1
14	산둥대학	2	33	상해대학	1
15	대외경제무역대학	3	34	남창대학	1
16	중산대학	1	35	하해대학	1
17	서북정법대학	6	36	연태대학	1
18	호남대학	1	37	중앙민족대학	1
19	남경대학	1	38	항저우사범대학	1
합 계			83		

자료: 저자 작성 (2019.12.30. 기준)

중국의 정부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에 있는 해양법 전문인력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해양법을 전공으로 표시한 경우를 파악했으며,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였다.

〈표 2-6〉 중국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연번	연구소 명	인원
1	중국해양대학 해양발전연구원	5
2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4
3	베이징대학 해양연구원	3
4	상하이교통대학 해양법치연구센터	7
5	우한대학 중국변계와 해양연구원	13
6	샤먼대학 해양과 해안대 발전연구원	3
7	저장대학 해양법을 및 관리연구센터	6
8	상하이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1
9	상하이 해양대학 해양정책·법률연구소	7
10	중국 남해연구원	10
11	중미연구소	3
합 계		62

자료: 저자 작성 (2019.12.30. 기준)

### (3) 일본

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 조사는 대학과 연구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학교 또는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본인이 해양법을 전공으로 표시했거나 해양법 관련 논문 작성 실적이 있는 경우, 해양법 전문인력에 포함시켰다. 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은 법학부뿐만 아니라 국제학부나 공공정책학연계연구부 등 법학 이외의 과에도 많이 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공개된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표 2-7〉 일본 대학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연번	대학교	인원	연번	대학교	인원
1	게이오 기주쿠 대학	1	27	세이와 대학	1
2	고마자와 대학	1	28	센슈 대학	1
3	고베대학	3	29	소피아 대학	5
4	교토 대학	3	30	시즈오카 현립대학	1
5	구마모토 대학	1	31	신슈 대학	1
6	나고야 게이자이 대학	1	32	쓰쿠바 대학	1
7	니혼 대학	2	33	아이치 대학	1
8	다카오카 법과대학	1	34	오사카 가쿠인 대학	1
9	다쿠쇼쿠 대학	1	35	오사카 대학	2
10	데이쿄 대학	1	36	오카야마 대학	2
11	도시샤 대학	2	37	오타루 상과대학	1
12	도요 대학	1	38	와세다 대학	3
13	도카이 대학	1	39	요코하마 시립대학	1
14	도쿄 대학	4	40	쵸사이 대학	1
15	도쿄 해양대학	4	41	쥬부 대학	1
16	도호쿠 공익문화대학	1	42	쥬오 대학	1
17	도호쿠 대학	2	43	쥬쿄 대학	1
18	도호쿠 의료약과대학	1	44	해상보안대학교	1
19	리쓰메이칸대학	1	45	호세이 대학	2
20	릿쿄 대학	1	46	홋카이 가쿠인 대학	1
21	메이지 가쿠인 대학	2	47	홋카이도 교육대학	1
22	메이지 대학	4	48	홋카이도 대학	2
23	방송대학	1	49	후쿠오카 공업대학	1
24	방위대학교	1	50	후쿠오카 여자대학	1
25	세이난 가쿠인 대학	2	51	히로시마 대학	1
26	세이사 대학	1	52	히토쓰바시 대학	1
합 계			80		

자료: 저자 작성 (2019.12.30. 기준)

한국과 달리 일본은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이 거의 없으며, 대학 부설기관으로 일부 연구기관들이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요하는 분



야에서의 정부에 대한 정책 지원은 대부분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런 한계상황을 고려하면서, 일본의 연구소 내 해양법 전문인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8〉 일본 연구소 내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연번	연구소명	국제법 관련 인력	해양법 관련 파악된 인력
1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	1	1
2	일본학술진흥회	3	-
3	국제고등연구소	1	-
4	사사카와평화재단 해양정책연구소	6	4
5	세계인권문제연구센터	8	-
6	일본국제문제연구소	3	-
7	일본안전보장전략연구소	3	2
합 계		25	7

자료: 저자 작성 (2019.12.30. 기준)

#### (4) 소결

한·중·일 3국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현황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중국의 경우 상위 100개 대학만을 조사했으며,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국가기관, 각 성·시 산하 및 대학부설 기관이 많이 있지만, 이 중 주요 기관들만을 파악하였다.

〈표 2-9〉 한·중·일 해양법 전문인력 비교

국가	대학교	연구소(대학부설 포함)	비고
한국	14명(11개 대학)	8명(5개 연구소)	
중국	83명(38개 대학)	62명(11개 연구소)	일부 조사
일본	80명(52개 대학)	7명(7개 연구소)	

자료: 저자 작성 (한국: 2020.9.30., 중·일: 2019.12.30. 기준)

전수조사를 시행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학교 해양법 전문인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7개 대학교에 33명이, 일본은 52개 대학교에 80명이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이 47명이 더 많다. 비율로는 2.4 배인데, 일본의 인구와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그것에 비해 약 2.4 배인 것과 동일하다. 물론 적절한 전문인력이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양법 관련 적정 인력은 해양법의 현안과 수요 등 그 나라의 상황과 정책 방향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 2. 해양법 전문인력의 역량 비교 평가

해양법 전문인력의 역량은 해양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 현안문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능력, 그리고 국제적 교류 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분히 주관적이며,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대안으로 학술성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집필 논문 수를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역량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한·중·일 3국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학술논문 편수를 논문이 게재된 것이 해당 국가의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파악해 보았다. 하지만 국가 내 논문 게재는 국가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한·중·일 3국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역량을 비교 파악하기 위해서는 SSCI<sup>19)</sup> 논문 게재실적을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

19)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사회과학분야 학술논문 인용지수). 미국의 톰슨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에서 제공.

해양법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국내 대학교 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학술적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양법 관련 학술논문 3편 이상 작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논문 편수를 3편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교수나 연구원은 적어도 3편은 집필해야한다는 판단에서이다.

### 1) 한·중·일 3국 해양법 전문인력의 논문 작성 편수

해양법 전문인력이 해양법 관련 논문을 집필한 실적을 파악한 결과, 한국은 총 37개 대학에 있는 해양법 교수 중 해양법 관련 논문을 총 3편 이상 작성한 교수는 14명, 중국은 112개 대학에 있는 교수 중 22명, 일본은 52개 대학의 교수 중 80명이었다. 중국의 경우 일부대학에 한정되고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참고자료만 될 뿐이다. 그래서 전수조사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2-10〉 한중일 대학교수의 해양법 논문 편수 통계

	한국	중국	일본
조사 대학	37개	112개	111개
국제법 교수	58명	142명	220명
해양법 논문 1편 이상	33명 (해양법 논문 1편 이상)	60명 (해양법 전공 표시)	80명 (해양법 논문 1편 이상)
해양법 논문 3편 이상	14명	22명	36명
비고	전수조사	일부대학 조사	전수조사
고려사항	* 한국: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 연구업적, 논문 검색 조사 ** 중국, 일본: 본인이 공개한 연구업적에 크게 의존, 논문 검색 조사를 하였으나 많은 제약이 있음. 따라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		

자료: 저자 작성 (2020.2.20.기준)

한국과 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해양법 논문 3편 이상 집필 현황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14명, 일본은 36명이다. 한국과 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 간에 논문집필 비율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2) 한·중·일 3국 해양법 전문인력의 SSCI 논문 작성 편수

이번 조사에는 한·중·일 3국의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연구원도 포함해서 SSCI 논문 작성 편수를 파악하였다. 연구원도 포함시킨 이유는 SSCI 논문은 저널과 논문이 모두 공개되어 중국 및 일본의 경우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5년 동안 선별한 SSCI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전문가의 논문 편수를 확인하였다. 둘째, 저자의 국적이 아니라 저자가 속한 직장 또는 소속이 한·중·일인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기간은 발간일을 기준으로 2015년에서 조사시점인 2020년 4월 7일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15개 SSCI급 저널로 한정하였다. 이때 ‘Web of Science’에서 ‘법’(law) 범주에 속하는 저널 총 148개와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범주에 속하는 저널 총 91개 중에서 다음 기준으로 15개 저널을 선별하였다. 첫째, ‘법’ 범주 저널 중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IF)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저널을 포함한다.<sup>20)</sup> 둘째, 국제법 일반 또는 아시아를 다루는 저널을 선별하였다. 해양법도 국제법의 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한·중·일이 모두 아시아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해양법 또는 해양 관련 저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별하였다. 넷째, 여러 명이 저자인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에 관계없이 한·중·일의 저자가 포함되어

20) 상위 랭킹 저널들은 대부분 미국 로스쿨의 저널들이며, 로스쿨 저널들은 거의 대부분 모든 법 분야를 다루며 미국 관련 사항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해양법 관련 논문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피인용지수가 높으며 이들 저널에도 게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있으면 모두 통계에 포함시켰다. 한 논문을 동일 국적의 저자들이 작성한 경우도 있지만 2개국 이상 국적의 저자들이 작성한 경우도 많이 있다.

〈표 2-11〉 한중일 해양법 전문인력의 SSCI 논문 게재 통계

단위: 명

연번	저널명	IF	범주	한국	중국	일본
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4.508	법			
2	YALE LAW JOURNAL	4.500	법			
3	HARVARD LAW REVIEW	4.390	법			
4	COMMON MARKET LAW REVIEW	3.918	법			
5	STANFORD LAW REVIEW	3.748	법			
6	MARINE POLICY	2.865	국제관계	8	17	2
7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71	국제관계			
8	PACIFIC REVIEW	1.865	국제관계		1	
9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810	법, 국제관계			
10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696	법, 국제관계			
11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267	법, 국제관계		21	
12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1.026	법, 국제관계	2	8	
13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0.600	법	5	7	2
14	ASIAN PERSPECTIVE	0.509	국제관계			
15	ASIA PACIFIC LAW REVIEW	0.400	법			
합 계				15	54	4

\* 총 인용수 및 피인용자수는 2018년 기준  
자료: 저자 작성 (2020.2.20. 기준)

위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국의 경우, 소수의 대학교수를 제외하면 SSCI 저널 게재 논문이 거의 전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SSCI 저널 논문 게재를 중요시 하는 학계 전반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학(특히 국제법 또는 해양법 전공) 교수들에게 이러한 논문 게재에 대한 동기유인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 오늘날 중국 전문가들은 SSCI 저널들에 논문을 많이 게재하며, 전반적으로 영어 논문들을 많이 작성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문가들의 역량과 노력을 볼 때 이러한 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문가들의 논문 편수가 매우 적은데, 이는 SSCI 저널 논문게재보다는 자국 내 평가를 중시하는 일본의 학문 풍토에서 기인한다.

학술논문 집필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법 전문인력들은 중국 및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본과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가 SSCI 저널의 논문 게재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반면, 여전히 도제식 교육과 같은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며 SSCI 저널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이 저널의 논문게재 여부만으로 전문인력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수의 전문가들이 SSCI 저널에 논문을 복수로 게재하고 있는 등 해양법 전문인력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심하다.

### 제3절 한국의 해양법 전문인력 수요

#### 1. 해양법 전문인력 전체 수요

현재 한국의 해양법 전문인력은 11개 대학의 교수 14명, 5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8명으로 합 22명이다. 일본은 52개 대학의 교수 80명, 7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7명으로 합 87명이 있다. 중국은 일부만 조사했음에도 38개 대학에서 교수가 83명, 11개 연구기관에서 62명으로 합 145명이 있다. 중국의 경우 특정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해양법 전문인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해양법 전문인력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해양법 전문인력의 적정 인원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양법 현안은 1945년 해방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가 확립이 되고, 국가 간 해양관할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된 2000년대 이후에는 주변국들과의 갈등과 긴장관계가 훨씬 더 고조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상승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양법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법 전문인력은 제1절에서 살펴본 해양법 현안을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국책연구기관들이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지원에 있어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일본은 정부가 직접 대학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협력·지원 구조를 고려한

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부족한 대학의 해양법 전문인력 만큼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채울 필요가 있다.

해양법 논문을 1편 이상이라도 쓴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 내 대학의 해양법 인력이 52개 대학에서 80명이 있고, 우리나라가 27개 대학에 33명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이 더 많다.

한국과 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논문 3편 이상 작성한 통계를 보았을 때도, 한국은 14명이고 일본은 36명이다. SSCI 저널 논문 편수 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SSCI 저널의 논문 게재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 전문가가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반면, 일본은 SSCI 저널의 논문 게재를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러한 논문게재 노력도 작다. 그렇기 때문에 SSCI 저널의 논문게재는 한국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국제화의 지표 중 하나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과 역량 비교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 2. 분야별 해양법 전문인력 수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해양법 주요 현안들을 분야별로 나눈 후, 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해양법 전문인력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검토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즉, 현안이 5개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각 현안마다 중요도나 내용의 전문성 등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경우도 대응할 수 있는 현안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면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양법 현안과 현재의 역량, 그리고 필요한 전문인력의 필요 인원을 아래 표에서 가늠해 보기로 한다.



〈표 2-12〉 한국의 해양법 현안의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 추정

대분류	중분류	현안	필요 인원
독도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법 연계 문제	• 일본의 다양한 도발 대응 • 독도 주변수역 관리	3
	국제소송 대응	• 독도 문제의 일방적 국제소송 제기 대응	3
	주변수역 관리	• 독도 주변수역 분쟁 발생	3
어업	어족자원 관리	• 한·중, 한일 어업협정 이행·관리	3
	연근해 불법조업	• 중국·북한 어선 불법조업 • 대화퇴 어장 관리	3
	원양어선	• 한국어선의 IUU 어업	3
해양관할	해양경계	•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 한일 해양경계획정 대비 • 동중국해 EEZ/대륙붕 경계	4
	해양관할권	• 경계미확정수역 MSR • 외국 선박 대응 집행, 임검·추적권	3
	주변국·소송 대응	• 중·일의 해양관할권 확대·강화 대응 • 국제소송 제기 대응	3
해양생물자원 (어업 제외)	EEZ 생물자원	• 지속가능한 이용과 EEZ 관할권	2
	공해 생물자원	• BBNJ 문제	3
해양광물자원	대륙붕 자원개발	• JDZ 대응(협정이행·종료 문제)	2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 광구탐사/개발에 따른 해양법 문제	2
해양환경보호	유엔해양법협약 의무	• 육상기인 오염원 차단 • 선박기인 오염원 차단 • 해양쓰레기(플라스틱 쓰레기 포함) • 해양보호구역	4
해양안보- 해양법 연계	접경수역	• NLL 법적 지위 • 접경수역 평화적 이용·관리	2
	방공식별구역(상공)	• 이어도 상공 -3중첩 • 중국·러시아 군용기 안보 위협	2
	통항	• 해협 및 남중국해 안보 위협과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 • 해적행위	2

대분류	중분류	현안	필요 인원
국제해양	북극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극항로 이용</li> <li>• 북극해 자원개발</li> <li>• 지구온난화와 북극해 해빙</li> <li>• 북극해 관할권 확대 경쟁</li> </ul>	3
	남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극조약체제</li> <li>• 기후변화와 남극 변화</li> </ul>	2
	국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동향 정기적 파악·대응</li> <li>• 주요국 및 국제기구 동향</li> </ul>	3

자료: 저자 작성

위 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현안에 대해 최소한 2인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이 1인만 있을 경우 그가 출장·휴가 등으로 부재중일 때 현안 관련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가 없을 수가 있고, 그의 의견이 적절하고 균형 잡힌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최소 2인이 담당하되, 독도와 같이 영토문제 또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같이 국가의 해양영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최소 4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전문인력을 추정해 보면 55명이 된다. 현안 대응은 정부와 연계해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연구기관의 필요 전문인력을 추정해 본다. 현재 석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해서 13명이 해양관련 연구기관에 재직 중에 있다. 따라서 해양법 현안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55명으로 추정하고, 여기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를 포함(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고려)한 기존 인력을 제외하면, 신규로 필요한 해양법 전문인력은 42명이 된다.

### 3.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 현황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박사급)은 8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 중 대부분은 공공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명, 그리고 한국극지연구소에 1명이 있으며,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에 1명이 있다. 국립외교원에는 국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교수요원이 3명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도 독도의 영토문제를 연구하는 국제법 연구인력이 2명 있지만 해양법 전공으로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2-13〉 국제해양법 관련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2020.9.기준)

	소속	소재지	주요업무	현재 해양법 (박사급) 인력	해양법 인력 채용	비고
공공 기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부산	해양법정책 연구	2	수시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부산	해양법정책 연구	3	수시	
	한국극지연구소	인천	극지정책	1	거의없음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충남 서천	해양생물자원 관련 연구	1	거의없음	
	국립외교원	서울	외교관 교육 및 외교 정책 제시	0	거의없음	기후변화 관련 해양법 전문가 1명 근무
	동북아 역사재단	서울	영토분쟁 관련 연구	0	수시	영토분쟁 및 일본 관련 법학박사는 총4명 근무
민간 기관	아산정책 연구원	서울	해양안보관련 해양법 연구	1	거의없음	

자료: 저자 작성

이와 함께 해양법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기관들도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해양

오염 방제, 해양사업 및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특히 제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서 해양환경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근 국제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한 규정들을 연안국이 위반했다는 결정을 하는 등 해양환경보호에 관해 적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sup>21)</sup> 이렇게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해양법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변수역에서도 중요한 이슈임을 고려할 때, 해양환경공단에도 해양법 전문가의 충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경찰청과 해군도 선박의 항행과 해양관할권 문제를 실무에서 다루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 내에서 해양법 전문가들이 특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관의 법률 문제를 자문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 제4절 소결

우리나라의 해양법 현안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과거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갈등의 정도도 심화되어 왔다. 그만큼 해양법의 전문인력의 수요도 증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해양법 전문인력의 현황과 역량을 살펴보면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해양에 관한 국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21)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2016)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해양법 전문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해야 함을 반증한다. 해양법 현안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법 수요를 충족하고, 또한 개개인의 해양법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제 3 장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현황 및 관련 해외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현재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동안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현재 해양법 전문인력은 일반적인 법학 교육 체제 내에서 기초적으로 양성이 되고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는 구조이다. 해양법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특이한 것은 없다. 다만, 후에 살펴볼 몇 가지 해양법 관련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같이 제한된 범위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현재의 해양법 전문인력이 어떻게 양성되는지를 크게 대학교, 연구기관 및 기타 기관으로 구분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 제1절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관

보통 대학생이 해양법을 처음 접하는 것은 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법 강의를 통해서이다. 하지만 국제법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국제법의 일부분에 불과한 해양법이 국제법 강의시간에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명확하다. 강의 교수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부분은 강의요목에 해양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많아야 한두 강좌가 이루어진다.

해양법을 본격적으로 접하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이다. 이때 해양법이 개설되어 1학기 동안 배우거나 또는 국제판례연구 등을 통해 해양법 학습과 연구를 시작한다. 석사학위 주제로 해양법 관련된 것을 정한다면 해양법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깊어질 수 있다. 이는 학부를 마치고 해외 유학길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석사과정을 마치면 박사과정에 진학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또는 유학길에 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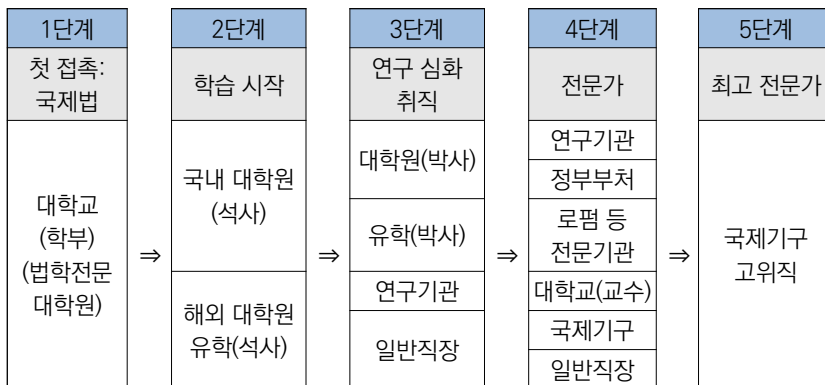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해양법을 전공으로 한다면 본격적으로 해양법 전문가 과정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직장이나 로펌 등으로 취직한다면 해양법 전문가의 길은 끊겼다고 봐야할 것이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해양관련 연구기관에 들어간다면 해양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기관에서 해양법 관련된 일을 지속하면서 학업(박사과정)을 계속한다면 해양법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박사과정에서 국제법 일반에 대한 소양을 쌓으면서 해양법 연구를 계속한다면 해양법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양법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취직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해양법과 무관한 일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해양법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길은 끊겼다고 봐야 한다.

해양법 전문가로서 불리고 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나 대학 교수가 되어 해양법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로, 아래 표의 4단계에 왔을 때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학문적 수준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또 정부 정책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 1단계부터 많은 학생들이 해양법에 관심을 가지고 2단계, 3단계를 거쳐 4단계로 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4단계의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서 국가 해양정책에 기여하고 또 국제법원 재판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림 3-1〉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과정



자료: 저자 작성

## 제2절 국내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현황

### 1. 대학에서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현황

대학에서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시작단계로 크게 2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강의를 통해 교육을 받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학위 논문을 쓰면서 스스로 적극 양성하는 과정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해양법 강의개설과 석·박사 학위논문 현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도록 한다.

#### 1) 해양법 강의 개설 현황

대학에서 해양법 강의를 본격적으로 접하는 것은 대학원에 와서이다. 학부에서는 국제법 과목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교수에 따라 해양법은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 전국 25개 대학교의 법과대학 일반대학원에서 해양법 과목의 강의 개설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해양법 과목이 개설된 적이 있는 학교는 총 10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하대학교가 총 7회, 서울시립대학교가 총 5회 개설되었고, 부산대학교가 총 3회, 강원대학교가 총 2회, 동아대학교·연세대학교·중앙대학교·충남대학교·한양대학교는 각각 1회 개설되었다.

〈표 3-1〉 국내 대학원 해양법 과목 개설 현황 (2019.12.기준)

학 교	2015	2016	2017	2018	2019
강원대학교	○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	○	
서울시립대학교	○	○	○	○	○
서울대학교				○	
연세대학교	○				
인하대학교	○	○	○	○	○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한양대학교				○	

자료: 저자 작성

대학원 석사과정은 해양법 전문가로서 나아가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하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를 제외하면 대학원 과정의 강의를 통해 해양법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대학원 커리큘럼을 통해서는 대학원생들이 해양법에 관심을 가지거나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기가 어려움을 의미한다.

## 2) 해양법 주제의 석·박사 학위 취득 현황

다음으로 해양법 전문인력이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해양법을 주제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논문 통계를 파악해 보았다. 아래 표에서 보듯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 간 국내 대학원에서 해양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총 41명,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총 22명이었다. 추세를 보면 2015년에 석사학위 8명, 박사학위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표 3-2〉 국내 해양법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통계

학위 연도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합계
구분	석사	3	6	4	2	8	2	3	3	8	2	41
	박사	5	2	1	1	7	1	2	2	0	1	22
합계		8	8	5	3	15	3	5	5	8	3	63

자료: 저자 작성

대학원에서의 해양법 관련 강좌 개설이 거의 없는 점을 생각하면 해양법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편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생들이 학위논문의 주제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민하는 것이 학위를 받은 후의 진로에 대한 고려와 함께 논문 주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법을 주제로 해서 학위를 취득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장이 많이 없음을 고려할 때, 해양법 관련 대학원 강좌 개설에 비해 학위 논문이 많은 것은 그 만큼 해양법 관련 이슈가 많고 이것이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재 국내 대학교에서는 해양법 전문인력이 대학원의 강의를 통해서 양성되기 보다는 대학원생들이 해양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면서 스스로 그리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통해 양성되고 있다.

## 2. 연구기관에서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현황

### 1)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부재

국내에 해양관련 연구기관은 사회과학정책을 연구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로 과학연구를 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 해양

생물자원에 대해 연구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이 있다. 이런 해양관련 연구기관에서 해양법을 다루는 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해양법 또는 국제법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신규 채용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연구원들은 업무 수행을 통해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간다. 소속된 연구기관들에서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별히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해양법 아카데미 참석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아래에서는 연구기관 또는 관련 재단 등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해양법 관련 프로그램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표 3-3〉 국제해양법 관련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소속	소재지	주요업무	현재 해양법 (박사급) 인력	해양법 인력 수요	비고
공공 기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부산	해양법정책 연구	4	수시채용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부산	해양법정책 연구	5	수시채용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충남 서천	해양생물자원 관련 연구	1	거의없음	
	국립외교원	서울	외교관 교육 및 외교 정책 제시	0	거의없음	기후변화 관련 해양법 전문가 1명 근무
	동북아 역사재단	서울	영토분쟁 관련 연구	0	수시채용	영토분쟁 및 일본 관련 법학박사는 총4명 근무
민간 기관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서울	해양법 및 국제법 연구	4	거의없음	
	아산정책 연구원	서울	해양안보관련 해양법 연구	1	거의없음	

자료: 저자 작성

## 2) 한국해양재단

### (1) 해양법/해양영토 학술지원 사업

#### 가. 사업 목적

해양법·해양영토 학술지원 사업은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대학(원)생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관련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전반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 한국해양재단이 주최하고 해양법·해양영토 학술지원 사업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있다.<sup>22)</sup>

#### 나. 지원 자격 및 혜택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은 해양영토에 관한 자유 주제(인문/사회/법학 한정) 논문으로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개인 또는 팀(3인 이내)만이 지원할 수 있다.

〈표 3-4〉 해양법/해양영토 학술지원 사업 지원 규모 및 조건 (2020년 기준)

구분	지원 규모	지원내용	지원조건
대학부	총 4팀	팀당 150만원 /전문가 멘토링	기한 내 논문 제출 (논문 수준 평가)
대학원 및 전문가	총 3팀	팀당 500만원	학술지 게재

자료: 저자 작성

### (2)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 가. 대회 목적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해양법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해양법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의 해양영토의 중요성

22) 한국해양재단(검색일: 2020. 8. 7)

과 해양 전반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하여 시작되었다. 모의재판대회는 (재)한국해양재단이 주최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양법학회가 후원하고 있다.(2020년 기준)<sup>23)</sup>

#### 나. 참가자격 및 혜택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참가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4년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국제대학원 포함) 석사과정 중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참가 가능하다.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변호사, 국제법 관련 공무원, 학계, 연구원 및 실무기관 종사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표 3-5〉 지원 규모 및 조건 (2020년 기준)

내역	인원	상금
우승 (해양수산부 장관상)	1팀	700만원
준우승	1팀	500만원
장려상	1팀	300만원
입상	5팀	각 150만원
최우수변론가상	1명	100만원
우수변론가상	3팀	각 50만원

자료: 저자 작성

### (3) 의의

한국해양재단이 운영하는 해양법/해양영토 학술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의 해양법에 대해 관심을 높여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대학원 과정에 진학해서 해양법을 전공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리고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생과 법학

23) 한국해양재단(검색일: 2020. 8. 7)

전문대학원생들에게 해양법에 대한 관심 고취는 물론 해양법 관련된 직업으로 진로를 생각해 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이는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양법으로 진로를 정하도록 유인하는 프로그램이다.

### 3) 여수해양법아카데미

#### (1) 개요

여수해양법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등에게 해양법 중심의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이 자국의 해양법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동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해양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확대를 선언한 2012년 여수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여수 프로젝트의 교육·훈련 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시작되어 2019년 제6회째 개최되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주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하였다. 2020년부터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으로 전환되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9년까지 265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 (2) 참가 자격 및 혜택

여수해양법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 출신 해양 및 해양법 분야 국제기구 직원, 공무원, 연구자, 교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왕복 항공료, 숙박 및 식사(일 2회) 등 일체가 제공되며, 교육비와 등록비 등을 받지 않는다.



비록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전체의 약 10% 이내(약 4~5명)에서 국내 참가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항공료와 숙박비 부담을 조건으로 선진국의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 (3) 프로그램 내용

여수해양법아카데미는 국제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 내용에서부터 어업, 해양과학, 해양환경 등 해양관련 이슈 전반에 대해 약 2주 집중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수업은 약 26시간의 강의와 3회의 문제해결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다양한 견학프로그램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참가자 및 강사진과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한다.

〈표 3-6〉 2019년 여수해양법아카데미 1주차 프로그램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09:20~10:20		영해	공해	심해저와 해저자원	해양안보2	필드 트립
10:35~11:35	개회식 기조강연 T. Heidar	대륙붕 (법)	해양오염	해양안보1	ISA의 도전과제	
11:50~12:50		대륙붕 (과학)	항행	해양과학 조사	도서	
12:50~14:00	점 심					
14:00~15:00	해양법 개관	필드트립	워크숍: 항행		필기시험 (14:00 -16:00)	
15:15~16:15	EEZ					

〈표 3-7〉 2019년 여수해양법아카데미 2주차 프로그램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09:20~10:20	어업1	해적/해상 강도	해양경계 확정	분쟁지역과 초국경자원	구두시험 (10:00~12:00)	출국
10:35~11:35	북극	분쟁해결 절차	BBNJ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11:50~12:50	어업2	해양법의 기술적 분야	ITLOS	동아시아 해양이슈		
12:50~14:00	점 심					
14:00~15:00 15:15~16:15	워크숍: 해양생물 자원	필드트립	워크숍 해양경계 확정	필드트립	졸업식 (17:30- )	

〈표 3-8〉 2019년 여수해양법아카데미 강사진

번호	이 름	직 책	담 당
1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1주, 개회식 기조강연
2	프리다 A. 피테르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교수	1주
3	제임스 크라스카	미국 해군대학 교수, 국제법센터장	1주, 항행 워크숍
4	테드 맥도만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교수	1주
5	스테판 마코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	1주
6	도날드 로스웰	호주 국립대 법대 교수	2주
7	가브리엘 퀘츠-완리	유엔 해양법국 국장	2주
8	에릭 모리너	네덜란드 유트레흐트대 교수	2주, 어업 워크숍
9	클라이브 스코필드	세계해사대학 교수	2주, 경계획정 워크숍
10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주
11	김두영	전 ITLOS 사무차장	2주
12	콜터 라트롭	Sovereign Geographic 대표	2주 경계획정 워크숍

〈그림 3-2〉 여수해양법아카데미 강의 및 견학 프로그램 사진



자료: KMI

#### 4)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 (1) 개요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극지정책의 추진에 대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극지와 관련된 해외 대학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다.<sup>24)</sup>

##### (2) 참가자격 및 혜택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졸업예정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선발하며 학부 졸업자, 석·박사 과정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다. 전공에 대한 자격조건은 없으나 극지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연수생으로 선발될 경우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교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논문 등 성과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우수 수료생(1인)에게는 ‘북극서클 총회’ 참석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극지와 관

24) 외교부(검색일: 2020. 8. 24)

련된 학위논문을 작성할 경우에 일부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sup>25)</sup>

〈그림 3-3〉 극지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연수



자료: KMI 북방·극지연구실

### (3) 강의내용

강의의 목표는 극지전문인력양성으로 북극권 대학(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및 남극권 대학(뉴질랜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단, 2020년도 제5회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의분야는 남극 및 북극정책, 거버넌스, 산업, 과학 국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한다.<sup>26)</sup>

### (4)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과정을 포함해 12주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당 3-4시간 학습이 예정되어있으며, 4주간의 글로벌 아틱 MOOC 프로그램, 온라인강좌(30편), 오프라인 세미나(3회), 과제물 제출의 4가지 코스로 구성되어있다.<sup>27)</sup>

25) 외교부(검색일: 2020. 8. 24)

26) 극지이야기(검색일: 2020. 8. 24)

27) 극지이야기(검색일: 2020. 8. 24)

〈표 3-9〉 2020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요

교육과정	내용
온라인 교육 수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북극 온라인 프로그램 MOOC</li> <li>• 북극/남극 분야별 오피니언 리더 30명 동영상 강의 수강</li> </ul> <p>〈예상 커리큘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로) 북극항로, 북극 교통 인프라, 기타 북극 인프라, 북극 투자·개발, 북극 내수로</li> <li>• (거버넌스) 극지 법 제도</li> <li>• (관광) 극지관광</li> <li>• (국제 협력) 극지 국제협력, 북극 원주민의 권리</li> <li>• (정치) 국제 거버넌스, 북극권 분쟁 등</li> <li>• (과학) 자연환경, 기후, 동토층의 변화 및 다산기지, 세종과학기지 연구 소개</li> <li>• (문화) 북극권 원주민의 문화</li> </ul>
교수진 초청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과정으로 월 1회 총3회 실시</li> <li>• 분야별 전문 교수진의 심도 있는 주제 강의 및 토론</li> </ul>
국내 극지 주요기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진 초청 세미나와 병행</li> <li>*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li> </ul>
논문 및 성과발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참여 개별 대상자가 제안하여 분야별로 추진하는 1과제(논문, 극지정책보고서, 극지창업아이템 등)에 대한 성과 발표회 추진하여 우수 학생 선정에 반영</li> <li>* 과제별 교수님 참여 지도</li> </ul>

자료: 극지이야기(검색일: 2020. 8. 24)

이 중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프로그램은 스위스 주재의 글로벌아틱(GlobalArctic)이 북극권 대학과 연합하여 운영하며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자원, 거버넌스 등 북극관련 주제에 대해 강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로잔 연방 공과대학의 마티아스 핑거(Matthias Finger)교수가 강의를 담당한다.

## 5) 북극아카데미

### (1) 개요

북극아카데미는 180여개의 대학·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북극권 최대의 학술교류네트워크인 북극대학(UArctic) 소속의 학생 40명과 국내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20명이 참가하는 공동 교육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된다. 아카데미는 북극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북극 역량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10일 간의 합숙프로그램을 통해 북극권 및 우리나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확장된 형태의 파트너십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해양수산부의 주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북극대학이 주관하고 있으며, 극지연구소가 후원하고 있다.<sup>28)</sup>

### (2) 참가자격 및 혜택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공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양법 등의 국제법, 해양정책, 해양학, 해양산업, 국제관계학, 국제정치학 등과 연관된 극지 관련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국내교통비, 숙박비 등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북극대학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의의 수료증, 북극 관련 국내외 국제회의 초청 및 필요시 참가 지원, 극지 관련 국내외 정보 제공의 혜택을 제공한다.<sup>29)</sup>

---

28) 외교부(검색일: 2020. 8. 24)

29) 외교부(검색일: 2020. 8. 24)

〈그림 3-4〉 북극아카데미 참가자



자료: Shippers' Journal, (검색일: 2020. 8. 24)

### (3) 강의내용

강의는 10일 동안 국내외 북극관련 석학을 초청하여 특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북극국가의 주요정책, 북극정책 및 거버넌스, 주요 북극현안을 주요내용으로 한다.<sup>30)</sup> 단, 2020년도 북극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되며 총 8주간 북극관련 정책, 거버넌스, 산업, 과학, 협력, 원주민, 문화에 대한 강의가 개설된다.<sup>31)</sup>

〈표 3-10〉 2020 북극아카데미 세부 프로그램

No.	분 야	주 제
1	오리엔테이션	북극아카데미 소개
2	북극정책 1	캐나다의 북극정책
3	북극정책 2	덴마크의 북극정책
4	북극정책 3	핀란드의 북극정책
5	북극정책 4	아이슬란드의 북극정책
6	북극정책 5	노르웨이의 북극정책
7	북극정책 6	러시아의 북극정책
8	북극정책 7	스웨덴의 북극정책

30) 외교부(검색일: 2020. 8. 24)

31) 극지이야기(검색일: 2020. 8. 24)

No.	분 야	주 제
9	북극정책 8	미국의 북극정책
10	북극거버넌스 1	국제 북극 거버넌스
11	북극거버넌스 2	아시아와 북극: 중국의 관점
12	북극거버넌스 3	아시아와 북극: 일본의 관점
13	북극거버넌스 4	아시아와 북극: 한국의 관점
14	북극거버넌스 5	북극과 인류안보
15	북극과학 1	북극과학과 국제협력
16	북극과학 2	북극과 기후변화
17	북극과학 3	한국의 아라온과 과학기지
18	북극과학 4	북극원격탐사
19	북극과학 5	모자익(MOSAIC) 프로젝트
20	북극사회·문화 1	북극사회와 원주민
21	북극사회·문화 2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통지식의 활용
22	북극사회·문화 3	북극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23	북극사회·문화 4	북극과 신종감염병
24	북극사회·문화 5	북극대학연합체
25	북극산업 1	북극의 재생에너지
26	북극산업 2	북극의 지속가능한 경제
27	북극산업 3	북극과 이노베이션
28	북극산업 4	북극관광
29	북극산업 5	북극항로
30	과제물 제출	-

자료: 극지 e야기(검색일: 2020. 8. 24)



## 제3절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관련 해외 프로그램

### 1. 단기 교육 프로그램

해외 단기교육프로그램은 비교적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내의 해양법 전문인력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래에서는 참가 가능한 해외 단기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파견 가능한 인력과 예산이 얼마인지도 알아보도록 한다.

#### 1) 로즈 아카데미

##### (1) 개요

로즈 아카데미는 현대 해양법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5년부터 매년 그리스 로즈(Rhodes)에서 열리는 해양법 아카데미이다. 로즈 아카데미는 버지니아 법대 해양법 정책센터(미국), 예게 해 해양·해사법 연구소(그리스), 아이슬란드 해양법 연구소, 막스플랑크 국제평화 및 법제도 재단(독일), 위트레흐트 대학(네덜란드), 싱가포르 대학 국제법센터가 주최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앙카라 대학 해양법 연구센터(터키)가 후원하고 있다.<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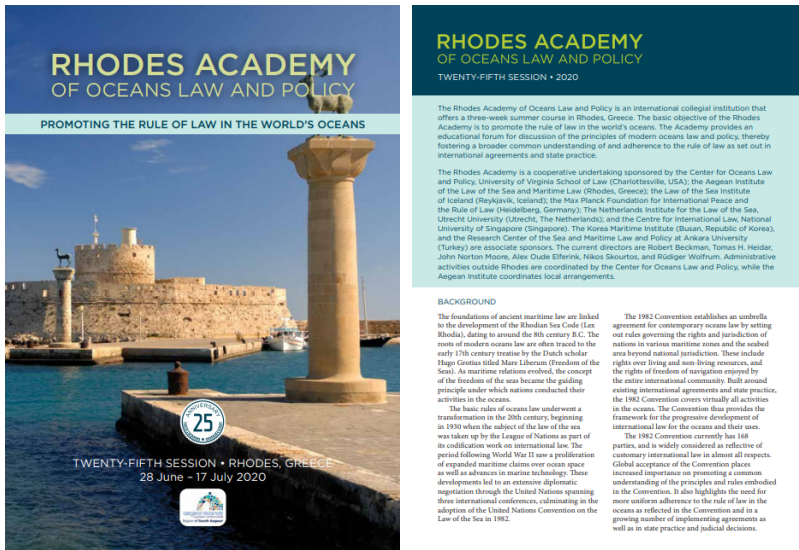
##### (2) 참가자격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으나 아카데미 선발 절차를 통하여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참가비(1,650 미국달러)와 숙소비를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소수의 개도국 학생과 참가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

32) 로즈아카데미(검색일: 2020. 8. 24)

다.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로즈아카데미의 강사 1인과 참가자 2~3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을 포함해서 매년 1명 내지 2명이 참가하고 있다.

### 〈그림 3-5〉 2020년 로즈 아카데미 브로셔



자료: 로즈아카데미(검색일: 2020. 8. 24)

### (3) 강의내용 및 강사진

총 3주에 걸쳐 진행되며, 첫 주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한 해양법 전반에 대한 강의, 둘째 주는 해양법·정책에서 중요한 세부 주제 강의, 셋째 주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다.34)

2021년 아카데미 강사진은 백진현(국제해양법재판소장), 로렌스 마틴(미국 Foley Hoag 로펌 변호사), 에머리투스 존 노트 무어(버지

33) 로즈아카데미(검색일: 2020. 8. 24)

34) 로즈아카데미(검색일: 2020. 8. 24)

니아 대학 해양법정책센터장)를 포함하여 국제재판소 재판관, 해양법 저명교수, 각국 외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5)</sup>

## 2) 헤이그 국제공법 아카데미

### (1) 개요

헤이그 아카데미는 국제관계의 법적 측면의 과학적 연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법 및 사법을 교육하고 연구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헤이그 아카데미는 국제공법 과정(하계)과 국제사법 과정(동계)으로 구성되어 1923년부터 3주간 헤이그 평화궁에서 개최되었으며 현재까지 100개국 천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2) 참가자격

헤이그 아카데미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이어야 하며 반드시 국제법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하계 코스 시작일에 3년제 법학학위(LL.B. 등)를 취득한 학생은 참가가 가능하다. 더불어 영어 또는 프랑스어를 구사하여야 한다. 수업료는 3주 세션 1,150유로이며, 두 세션 모두 수강할 경우 2,050유로를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전체 참가학생수의 20%는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3) 강의내용

헤이그 아카데미는 필수 과정(오전)과 선택 과정(오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 과정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과정에서는 국제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법적 사고를 구축하는 내용 이

35) 로즈아카데미(검색일: 2020. 8. 24)

해를 주목적으로 하며 심화과정에서는 특정 토픽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한다. 선택과정은 세미나로 진행되며 각 분야 전문가인 강사들이 제시한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과 강사 간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선 과정과 별개로 디플로마 수여를 위한 코스이 따로 개설이 되어 있다. 디플로마 과정에 등록한 학생에게는 지도 교수가 배정되며,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만 디플로마가 주어진다.

〈그림 3-6〉 2020년 헤이그 하계 아카데미 브로셔(영/불)



출처 : 헤이그 국제공법 아카데미(검색일: 2020. 8. 24)

#### (4) 강사진

2021년 강사진은 톨리오 트레비스 전 ICJ 재판관, 카타리나 볼레 웰키 교수 등 해양법 저명 교수, 각국 외교관, 학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 3) 패로 제도 대륙붕 아카데미

#### (1) 개요

패로 제도 대륙붕 아카데미는 대륙붕과 그 자원과 관련된 법적, 기술적 분야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대륙붕 아카데미는 전 세계 연구원, 외교관, 학생 등을 대상으로 2014년-2016년, 2018년-2019년 개최되었다.<sup>36)</sup>

#### (2) 참가자격

패로 아카데미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며 내부 선발 절차를 거쳐 합격한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500유로)는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소수의 참가자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sup>37)</sup>

#### (3) 강의내용

패로 아카데미는 대륙붕 특히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법적 과학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대륙붕의 정의과 경계획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와 제83조에 대한 과학적, 법적 측면의 강의를 진행한다.<sup>38)</sup>

#### (4) 강사진

가장 최근 개최된 2018년 아카데미 강사진은 압둘 카위 아메드 유수프 ICJ 재판관, 비요른 쿠노이 페로 제도 외교관, 마틴 하이네슨 유

36) 패로 제도 대륙붕 아카데미, SACS 2018(검색일: 2020. 8. 25)

37) 패로 제도 대륙붕 아카데미, SACS 2018, Terms of Admissions(검색일: 2020. 8. 25)

38) 패로 제도 대륙붕 아카데미, SACS 2018, Summer Academy on the Continental Shelf (검색일: 2020. 8. 25)

엔 대륙붕 한계위원회 위원 등 국제재판소 재판관, 해양법 및 지리학 교수, 각국 외교관으로 구성되었다.<sup>39)</sup>

#### 4) ITLOS 하계 아카데미

##### (1) 개요

IFLOS 하계 아카데미는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유엔해양법협약의 추후 이행을 위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해양법재단(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the Law of the Sea, IFLOS)에서 개최하는 아카데미이다. 국제해양법재단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법 분야 연구 촉진 및 개발도상국 국민에게 해양법 지식을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07년부터 ITLOS 하계 아카데미가 개최되었다.<sup>40)</sup>

##### (2) 참가자격

아카데미 참가자격은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sup>41)</sup> 각 참석자들은 자비로 참가비를 내야하며, OECD 국민이 아닌 참석자에 한해 장학금이 주어진다.

##### (3) 강의 내용

IFLOS 하계 아카데미는 4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국제해양법 및 해상법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다룬다. 매년 특정 주제를 두고 아카데미가 개최되며 2019년 아카데미의 경우 “오션 거버넌스와 분쟁의 평

39) 패로 제도 대륙붕 아카데미, SACS 2018, Intervenor(검색일: 2020. 8. 25)

40) ITLOS, IFLOS Summer Academy(검색일: 2020. 8.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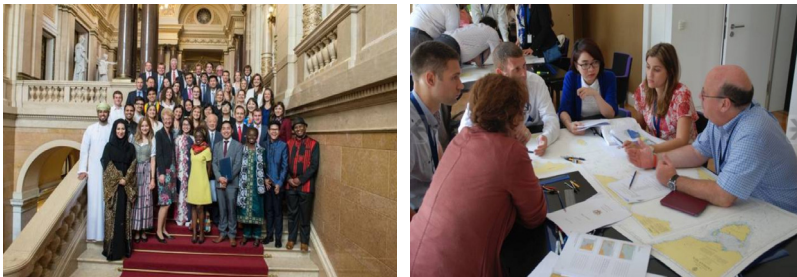
41) ITLOS, Summer Academy(검색일: 2020. 8. 25)

화적 해결”이라는 대주제 아래 해양법 및 해상법 전반에 대해 다루었다.<sup>42)</sup>

#### (4) 강사진

2019년 IFLOS 하계 아카데미에서는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존 브라운 로펌 Cooley 변호사, 클레오파트라 덤비아 헨리 교수 세계 해사대학 총장 등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및 법률 경제 전문가, 자연 과학자 및 기타 해양 관련 실무자들이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7〉 IFLOS 하계 아카데미 강의



자료: IFLOS (검색일: 2020. 8. 26)

〈표 3-11〉 국제해양법 관련 아카데미 비교

	여수 아카데미	로즈 아카데미	헤이그 아카데미	패로 아카데미	IFLOS 아카데미
주관	해양수산부	버지니아 법대 해양법정책센터 외 다수	헤이그 아카데미	패로 제도 대학교	IFLOS (국제해양법 재단)
시기/ 기간	여름/2주	여름/3주	여름/3주	여름/1주	여름/4주
내용	국제해양법	국제해양법	국제공법	대륙붕의 과학적 법적 측면	국제해양법

42) IFLOS(검색일: 2020. 8. 26)

	여수 아카데미	로즈 아카데미	헤이그 아카데미	패로 아카데미	IFLOS 아카데미
자격/ 선발	개발도상국 국적 해양관련 대학원생, 연구원, 공무원 /내부 서류 선발 절차	특별한 절차 없음/내부 서류 선발 절차	국제법 강의를 수강한 4년제 대학 졸업생/내부 서류 선발 절차	학사 이상/ 내부 서류 선발 절차	40세 이하 대학원생, 외교관/내부 서류 선발 절차
비용	개인 용돈 제외 참가비 및 숙박비 없음	참가비(1,650 미국달러)와 숙소비 등 제반 비용	참가비 (한 세션 참가시 1,150 유로, 두 세션 참가시 2,050유로)와 숙소비 등 제반 비용	참가비 (500유로)와 숙소비 등 제반 비용	참가비(1,590 유로)와 숙소비 등 제반 비용
비고	선진국 학생의 경우 자비로 참가한 경우 있음	개도국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있음	전체 참가학생 수의 20% 장학 혜택	소수 참가자 재정적 지원	OECD 국민 아닌 참석자에 한해 장학금 주어짐

자료: 저자 작성

## 2.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 1) 국제기구

#### (1) 유엔 해양법국 인턴십 프로그램

##### 가. 개요

유엔의 해양 및 해양법 담당 분과인 유엔해양법국(UN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UN DOALOS)은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국 인턴십 프로그램은 해양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나. 지원 자격

유엔 해양법국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시점에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영어에 능통해야 하며 (구술, 서면), 불어 등 기타 유엔 공식 언어가 유창할 경우 선발에 참작이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해야하며 해양법 및 해양제반 분야에 대한 관심 및 관련교육, 업무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한다.

#### 다. 근무 환경

인턴십 프로그램은 주5일(35시간) 전일 근무이며 무급으로 진행된다. 인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보통 5개월 정도 기간으로 공석이 생길 때 마라 수시로 채용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해양법 관련 프로젝트에 배치되어 해양법 및 해양 제반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적용할 수 있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 (2) 국제해양법재판소 인턴십 프로그램

#### 가. 개요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매년 20여명의 신진 정부 관료, 학생(법학, 국제관계, 사회과학, 번역, 문헌정보 등)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소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가자들의 재판소 전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나. 지원 자격

학부 3학년 이상, 35세 미만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영어 또는 불어에 능통해야 하고, 국제법 특히 국제해양법, 국제관계, 국제기구법

전공자를 우대한다. 인턴십 기간은 대개 3달(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동안 진행되며, 예외적인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인턴들은 재판소 재판관 및 사무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크게 법률 분과, 통번역 분과, 대외 보도 분과, 도서관에 배치된다.<sup>43)</sup>

더불어 2010년 “Trust Fund for the Law of the Sea”가 만들어진 이래, Korwind(함부르크 소재 한국 기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중국 정부가 신탁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신탁자금을 통하여 개도국(OECD 리스트 기준) 출신 인턴십 참가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 (3) 국제사법재판소

#### 가. 국제사법재판소 인턴십 프로그램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학생과 신진 학자들의 직무 경험 향상을 위해 1-3달 동안 ICJ 사무처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나 영어와 불어에 능통해야 하고, 학위증, 이력서,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sup>44)</sup>

#### 나. 재판 펠로우십 프로그램

국제사법재판소는 법학 전공자들의 국제법과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위해 현직 재판관 지도 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각 대학이 지원자를 선발하고 재정 지원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31세 이하 법학 전공자일 것을 요구한다. 매년 15명 이하가 선발되며 10개월 (매년 9월-다음해 6월/7월)<sup>45)</sup> 동안 진행된다.

43) ITLOS, Internship Programme(검색일: 2020. 9. 25)

44) ICJ, Internship(검색일: 2020. 9. 25)

## 2) 해외 저명 싱크탱크

### (1) 막스 플랑크 국제법·비교법 연구소 인턴십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소재한 막스 플랑크 국제법·비교법 연구소(Max Plan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는 국제공법, 유럽연합법, 개별국가의 헌법 및 행정법과 관련된 기본 문제와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단체이다.<sup>45)</sup>

막스플랑크 국제법·비교법 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은 4-12주 동안 진행된다. 지원 시점 기준으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 전일제 학생만 지원가능하며, 박사 과정 수료자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고 방문학자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법학 또는 관련 분야(국제관계, 유럽 문제, 철학, 사회과학)을 우대하며 영어는 구술, 서면 모두 능통해야 하며(C1레벨), EU 언어 또는 독일어, 컴퓨터 이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sup>47)</sup>

### (2)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sup>48)</sup>는 국제 전략 이슈를 연구하는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이다. CSIS에서는 국제안보, 정치, 경제, 경영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법 및 우리나라와 관련한 이슈도 다루고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총 3개 시즌 즉 봄(1월-5월), 여름(6월-8월), 가

45) ICJ, Judicial Fellows Programme(검색일: 2020. 9. 25)

46) 막스 플랑크 국제법·비교법 연구소(검색일: 2020. 9. 28)

47) 막스 플랑크 국제법·비교법 연구소, INTERNSHIP PROGRAMME(검색일: 2020. 9. 28)

48) 미국 국제전략연구소(검색일: 2020. 9. 28)

을(9월-12월)로 나누어 선발한다. 국제전략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문학사(college)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 인턴십 기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인력이 필요할 때 마다 수시채용하며, 채용 분야에 따라 별개 조건이 요구된다.<sup>49)</sup>

### (3)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는 싱가포르, 바레인,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IISS는 국제안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각 연구 분야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 마다 수시 채용하고 있다. 채용 공고에 따라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전공 등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영어에 능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50)</sup>

## 3. 해외 주요 대학 대학원 과정

### 1) 미국 주요 대학

미국 로스쿨 학위 과정은 크게 JD(Doctor of Jurisprudence), LL.M., 그리고 LL.M. 학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박사과정인 S.J.D.(JSD)가 있다. 학교에 따라 Executive LL.M. 과정이나 협동과정 등을 두기도 한다.

49)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Careers and Internships(검색일: 2020. 9. 28)

50) 영국 국제전략연구소(검색일: 2020. 9. 28)

JD학위는 미국내에서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미국인은 LL.M.이나 J.S.D.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JD과정을 수료해야 하고 JD 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 학부졸업 후 로스쿨 입학에 위한 시험인 LSAT를 필수적으로 쳐야한다. 학교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JD 학위는 주로 3년 과정이다.<sup>51)</sup>

LL.M.은 Master of Laws(법학 석사)로 JD 학위가 있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특정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늘리고자 할 경우 지원하는 과정이다. 유학생의 경우 관습법, 비교법 등 미국이나 캐나다 법체계를 공부하게 된다. 미국 혹은 캐나다 학생의 경우 JD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유학생의 경우 법학학사(LLB)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일부 국제 변호사는 향후 미국에서 JD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LL.M.을 이용하기도 한다. 단, 로스쿨별로 JD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LL.M.프로그램이 반드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sup>52)</sup> J.S.D.(혹은 S.J.D., The Doctor of Juridical Science) 과정은 로스쿨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학위 과정으로 주로 해당 로스쿨에서 LL.M.을 졸업한 학생 중 선발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지도 교수와의 논의를 거쳐 논문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해 다소 까다롭고 학생수도 적다.

이 외에 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될 계획이 없는 경우, Master of Science in Laws(MSL), Master of Legal Studies(MLS), Juris Master(JM) 등과 같은 석사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그리고 주로

51) 법과대학원입학위원회, JD Degree Programs(검색일: 2020. 9. 28)

52) 법과대학원입학위원회, LL.M Degree Programs(검색일: 2020. 9. 28)

3개월 과정으로 특수분야에서 더 전문화된 법률지식을 다루는 Legal Certificate Programs가 있다.

## (1) 하버드대 로스쿨

### 가. 개요<sup>53)</sup>

1817년 설립되었으며, JD, LL.M., S.J.D, 등이 있으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JD/MBA, 하버드 케네디 스쿨과 JD/MPP, MPA-ID, 하버드 T.H.Chan 공중보건스쿨과 JD/MPH, 디자인 대학원과 JD/MUP. 예술과학대학원과 JD/PhD 등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나. LL.M. 프로그램<sup>54)</sup>

#### - 개요

하버드 로스쿨 LL.M.은 1년 과정 학위 프로그램으로 약 70여 개국에서 약 180명의 학생이 등록해 있다. 현직 변호사, 공무원, 법학 교수, 판사, 외교관, 박사과정학생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의 학생들이 있다.

#### - 지원 방법

온라인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추천서(최소 2명), TOEFL 성적(해당되는 경우), 재정지원신청서(해당되는 경우), 지원수수료 \$85이다. TOEFL 점수는 최소 IBT 100점(하부 평가 항목에서 각각 최저 2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sup>55)</sup>

53) 하버드대학교, LL.M. Application Deadlines and Materials(검색일: 2020. 9. 28)

54) 하버드대학교, LL.M. Program(검색일: 2020. 9. 28)

55) 그러나 영어가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하고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에서 최소 2년 연속 수학을 했을 경우에는 면제를 부여한다.

#### - 학위 취득 요건

1년에 최소 23 최대 2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유학생과 미국인 학생에 따라 수강요건에 차이가 있다. 유학생의 경우 수강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이나 독점금지법과 경제, 계약법, 민사소송, 헌법, 기업법, 형법, 증거법, 가족법, 입법, 재산법 등과 같은 미국법 중 핵심 과정 하나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법학 역사, 법률 이론, 정책 분석, 법적 절차 관련 과정 중 하나 이상을 수강하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혼자 혹은 공동으로 25페이지 이상의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미국에서 법학박사 학위(JD)를 취득하고 법학 교육 경력을 쌓고자하는 학생들은 법률 이론 혹은 법학과 관련된 과정을 최소 하나 이상 수강하고 50페이지이상의 논문을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

#### - 학비 및 재정 지원

2020-2021학년도 학비는 \$65,875이다. 장학금은 평균 수업료의 약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소수의 학생에게는 학비 전액과 생활비 일부를 제공해준다. 2019년 기준 LL.M. 학생 57%가 Frank Knox Memorial Fellowships, Albert Sachs 장학금, Fulbright 장학금 제도로 평균 \$27,800의 장학금을 받았다. 한편 개인별 대출 규모는 평균 \$25,100이었다.

#### 다. S,J,D 프로그램

현재 하버드 로스쿨에는 S,J,D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은 30개국에서 온 60여명이다. 통상 첫해에 수업을 포함한 연구 과정을 완료하고 구술 시험을 실시한다. 특히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특정 과정을 규정

하지 않으며, S.J.D. 과정 재학생이 첫째 가을에 지도 교수와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 직원과 상의 후 자신의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연구 계획 수립 후 12~18개월 후 전체 교수와 현장 담당 앞에서 구술시험을 치르게 된다.

구술시험 통과 후 3년 이내에 S.J.D. 콜로키움에서 두 번 발표를 해야 하며,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

## (2) 예일대 로스쿨<sup>56)</sup>

### 가. 개요

1824년 설립되었으며, 5개 학위 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JD, 1년 과정인 LL.M., J.S.D.(Doctor of the Science of Law), 비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Master of Studies in Law(M.S.L.)프로그램, 예술 및 과학 대학원과 공동으로 수여하는 Ph. D. in Law<sup>57)</sup>이 있다.<sup>58)</sup>

### 나. LL.M. 프로그램

#### - 개요

1년 과정으로 매년 약 25명 등록한다. 최근 4년간 약 30여개 국가에서 입학했는데 일반적으로 법률 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하며 일원화된 학습 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학생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공부할 수 있어 상당한 유연성이 있다. 재학생은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할 자격이 주어진다. 가을

56) 예일대학교, Degree Programs(검색일: 2020. 9. 28)

57) 미국내 로스쿨 JD 학위 소지자만 지원가능하다.

58) 예일대학교, Graduate Programs(검색일: 2020. 9. 28)



과 봄 학기가 있으며, 1월에는 입학 절차가 없다. LL.M. 프로그램은 뉴욕주 변호사 시험 대비용은 아니다.

#### - 지원 방법

지원마감일 4~6주전에 LSAC(Law School Admission Council)의 자격 증명 서비스(CAS, Credential Assembly Service)에 가입해야 한다.<sup>59)</sup>

추천서는 최소 2~최대 4명으로부터 받되 학업 및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수진이나 고용주 및 상사가 작성한 추천서야 한다. 2건이 접수되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추천서 제출은 LSAC 추천서 제출서비스(LOR)를 통해서 접수된다.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영어가 교육 언어인 대학에서 학부 교육 혹은 법학 학위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지원자는 토플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IBT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LL.M.지원서에는 두 개의 에세이가 필요하다. 1000단어 이하로 학문적 연구의 계기, 이유와 지금까지 연구 수행 과정 등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한다.

#### - 학위 취득 요건

최소 24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이 중 최소 18과목은 예일 법대나 그 외 학과에서 진행되는 정규 과정 및 세미나에서 이수해야 한다. 학기당 12학점을 이수하고 적어도 2학기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 - 학비 및 재정 지원

2020학년도 학비는 \$65,792이다. 학생 중 72%정도가 장학금과 대

59) LSAC가 지원서, 성적표, LSAT점수, 추천서 등을 처리하는데 약 2주가 소요되며 LSAC는 입학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로스쿨에 서류를 보내지 않는다.

출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69% 정도가 로스쿨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대학 측에서 통계를 발표했다.

#### 다. J.S.D. 프로그램

J.S.D 프로그램은 예일 LL.M.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박사과정이다. LL.M. 학위 받은지 5년 이내 지원할 수 있다. 상주하는 J.S.D 학생의 학비는 2020-2021년도 \$25,586이다.

### (3) 컬럼비아대 로스쿨<sup>60)</sup>

#### 가. 개요

1858년 설립되었으며, J.D., LL.M., J.S.D.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3년 및 4년 과정으로 J.D.와 MBA를 함께 하는 복수 및 공동 학위과정이 있다.

#### 가. LL.M. 프로그램

##### - 개요

LL.M. 과정에는 full academic year LL.M과 6개월 과정인 글로벌 비즈니스법의 Executive LL.M. 프로그램 두 가지 과정이 있다. 학업 과정은 각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한다. 입학 자격을 얻으려면 법학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 - 지원방법

지원서류로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성적 증명서, 추천서 등이며 성적과 추천서를 바탕으로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

60) 컬럼비아대학교(검색일: 2020. 9. 28)

고 대학 졸업 후 업무 경험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영어는 TOEFL 105점을 요구한다.

- 학비 및 재정지원

2020-2021학년도 학비는 \$72,352이다. 장학금은 신청에 따라 수여되는 장학금과 Human Rights Fellowship, Jagdish Bhagwati Fellowship, Appel Fellowship, CPRL Lemann Scholar Award 등과 같은 지정장학금이 있다.

다. J.S.D. 프로그램

J.S.D. 과정 지원자는 법학 학위가 있어야 하며 법률 이외의 분야에서 받은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교, 겸임교수, 혹은 법률 교육 경력을 가진 지원자의 경우 우선하며, 정부 기관, 법원 서기 등 법률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입학 자격이 있다. 컬럼비아 대나 그 외 기관, 미국과 미국 외 지역에서 LL.M.을 수여받은 지원자도 동등하게 지원 자격이 있다.

(4) 스탠포드대 로스쿨<sup>61)</sup>

가. 개요

1893년 법학 교육을 시작했으며, JD, 협동과정(Joint Degree Programs), 법학 석사과정으로 LL.M., Stanford Program in International Legal Studies(SPILS), Master of Legal Studies(MLS) 등 세가지 과정이 있으며, 박사학위 과정으로 J.S.D. 과정이 있다.

61) 스탠포드대학교(검색일: 2020. 9. 28)

## 나. LL.M. 프로그램

### - 개요

스탠포드대학교 LL.M. 프로그램은 미국 외에서 법학 학사를 받은 학생으로 제한된다. 학과 과정은 기업거버넌스와 실무, 환경법 및 정책, 법률, 과학 및 기술, 국제경제법, 비즈니스와 정책 등과 같이 과정별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각 커리큘럼별로 약 15~20명씩 등록한다.

### - 지원방법

LSAC를 통해서 지원하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2건, 성적증명서가 필수 문서이다. 영어는 TOEFL IBT 100점, PBT 620점이 되어야 한다.

### - 학위취득요건

LL.M. 재학생은 전체 학년도(9개월) 동안 스탠포드에 거주해야 하고 최소 35, 최대 45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미국법 및 관습법과 법적 윤리와 직접적 책무에 관한 입문과정, 각 전문 분야와 관련된 최신 주제에 대한 LLM 콜로키움 참석, 정규 스탠포드 로스쿨 커리큘럼(제한적으로 스탠포드 내 다른 대학 및 프로그램의 과정), 실용 작문 등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 학비 및 재정지원

2020-2021학년도 학비는 \$64,350이다. 학생들 중 약 75~80%가 학비 장학금 혹은 대출 지원을 받으며, 수혜자는 평균 연간 \$25,000~28,000을 지원받는다.

#### 다. J.S.D. 프로그램

JSD는 JD와 LL.B를 보유한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 이상의 법학 분야에서 실질적인 전문 지식을 개발하고 사회과학, 인문학, 공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제간 지적 확산을 도모한다.

### (5) 시카고대 로스쿨<sup>62)</sup>

#### 가. 개요

1902년 개설되었으며 JD, LL.M., J.S.D., MLS 프로그램이 있다.

#### 나. LL.M. 프로그램

##### - 개요

약 25개 국가에서 70~80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학할 과정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다. 대부분 헌법, 법률 이론, 법률 및 경제학, 비교법과 같은 분야를 과정에 포함시키지만 기업과 증권, 지적재산권, 독점 금지와 상거래 규제 등 특정 전문 분야 세미나 일정을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작문과정과 두 가지 LL.M. 전용 과정을 제외하고는 LL.M.을 위한 교육과정이 따로 있지 않고 JD프로그램 학생들과 함께 수강한다.

##### - 학위취득요건

로스쿨에서는 LL.M.과 비교법 석사(MCompL)를 제공하지만 거의 모든 학생이 LL.M.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두 가지 학위에 대한 요건은 동일하다. LL.M. 학위는 평균 170점을 유지하면서 3학기 동안

62) 시카고대학교(검색일: 2020. 9. 28)

27시간(일반적으로 9개 코스)을 이수한 학생에 수여하며 논문은 필요하지 않다.

- 학비 및 재정지원

2020-2021학년도 학비는 \$68,652이다. 약 30% 정도의 학생이 \$15,000~20,000정도의 장학금을 받는다.

다. J.S.D. 프로그램

시카고 대학은 석사 이후의 학위로 J.S.D.와 비교법 박사(D.Comp.L.)를 제공한다. 대부분 J.S.D.를 받지만 동일한 학위 요건이 충족되면 학생의 선택에 따라 비교법 박사를 받기도 한다. J.S.D. 후보자는 법학 분야에 학문적 기여를 할 만한 논문을 J.S.D.에 처음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논문 작업을 하는 동안 최소2년(6학기)을 시카고에 거주해야 한다. 거주기간 동안 학위 지원자는 매일 로스쿨의 학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2년 동안 학위논문과 관련된 3개 이상의 과정을 수강해야 하고(시카고대에서 LL.M.을 수여한 경우 면제), 교수진 워크샵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J.S.D.콜로키움에 참여해야 한다. 2018-2019학년도 J.S.D. 프로그램 연간 수업료는 \$6702인데 모든 학생들은 최대 5년간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생활비로 \$20,000를 펠로우십으로 받는 혜택이 있다.

## (6) 뉴욕대 로스쿨<sup>63)</sup>

### 가. 개요

1835년 설립되었으며, 기업법, 경쟁법, 환경 및 에너지법, 국제세법, 세법 등 9개 분야의 LL.M. 과정<sup>64)</sup>과 S.J.D.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LL.M. 프로그램

#### - 개요

LL.M.은 JD나 LLB가 있어야 지원가능하다. 매년 45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LL.M. 지원자는 법학 석사 프로그램(Master in Law) 또는 LL.M. 전문 분야 8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 지원방법

지원학생들은 해외 변호사를 위한 풀타임 LL.M., 미국 JD학위자를 위한 풀타임 LL.M., 파트타임 LL.M.과 인증 프로그램, 파트타임 MSL 프로그램 중 선택하고 LSAC를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어의 경우 TOEFL과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TOEFL은 IBT 100점이 되어야 하는데 독해와 청해에서 최소 26점 이상, 작문과 구술에서 최소 22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IELTS를 제출하는 경우 평균 7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독해와 청해에서는 최소 7.5점, 작문과 구술에서는 최소 7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63) 뉴욕대학교(검색일: 2020. 9. 28)

64) master of laws, competition, innovation & information law, corporation law, environmental & energy law, international business regulation, litigation & arbitration, international legal studies, international taxation, legal theory, taxation

#### - 학위취득요건

9개 LL.M. 과정별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커리큘럼이 제공되고 있다. 뉴욕 로스쿨의 대표 과정인 세법 LL.M의 경우 2학기 프로그램으로, 고급 세법 과정<sup>65)</sup> 20학점을 포함해 2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 변호사는 8월에 개설되는 과목인 「미국법 개요」, 「미국법 실행」을 이수해야 한다. 5년 내에 과정을 종료해야 하며 평균 학점 2.667(B-)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 학비 및 재정지원

2020-2021학년도 학비는 \$68,348이다. 가을 입학을 하는 풀타임 LL.M. 프로그램 신청자는 Hauser Global Scholarship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제, 국가나 지역 등에서 해결해야 하는 법적 딜레마나 쟁점 등을 500~750자로 작성한 에세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다. J.S.D. 프로그램

주로 학계에서 경력을 쌓으려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학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제법, 법률이론, 세법, 환경 및 에너지법,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극소수의 학생을 선발한다. J.S.D. 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J.S.D. 포럼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대학 전체에서 조교, 연구조교, 공동 강사 등으로 일할 수 있다. JSD 프로그램 중에 작성된 논문들은 일반적으로 저명한 법률 전문 저널이나 출판사에 기고된다.

---

65) 소득세, 소득세 조사, 세금 클리닉을 제외한 세법 과정



## 2) 영국 주요 대학

### (1) 옥스퍼드대학교

#### 가. 설립연도 및 대학소개

옥스퍼드대학은 영어권 대학 중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영국 사우스이스트잉글랜드 옥스퍼드셔주 옥스퍼드에 있는 공립대학이다. 명확한 창립연도는 찾을 수 없지만 1096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친 기록이 있다. 1167년 헨리2세가 영국학생들의 파리 대학교 진학을 금지한 후 빠르게 발전하였다. 옥스퍼드대학에는 140여 개국에서 온 약 2만 4천명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며, 39개의 대학과 6개의 회관이 존재한다. 회관은 규모가 작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대학과 유사하다.<sup>66)</sup>

#### 나. 대학원 입학생수 및 학비

2018-2019학년도 옥스퍼드대학원 연구신청 건수는 29,091건에 달하며 2008-2009학년도 13,500건에서 약 115% 증가하였다. 이 중 22,547건이 영국 이외 시민권을 가진 학생들로 5,268명은 EU국가, 그 외 17,279명은 비EU국가에 해당됐다. 연구신청자 중 합격건수는 5,742건으로 확인된다. 법학 석사과정의 경우 지원자 1,650명, 입학허가 438명, 입학수락 319명이며, 박사과정의 경우 지원자 579명, 입학허가 123명, 입학수락 77명으로 확인되었다.<sup>67)</sup> 법학 석박사 과정의 학비는 EU를 포함한 해외학생의 경우 연 24,450 파운드(한화 약 3,677만원)으로 영국 및 아일랜드 공화국 학생이 연 8,570파운드(한화 약 1,289만원)인 것에 비해 높은 편이다.<sup>68)</sup>

66) 옥스퍼드대학교(검색일: 2020. 9. 28)

67) 옥스퍼드대학교, GRADUATE ADMISSIONS STATISTICS(검색일: 2020. 9. 28)

#### 다. 옥스퍼드 법학대학원 석사(Mphil) 과정

옥스퍼드대학 Mphil(Master of Philosophy in Law)과정은 3학기 정규프로그램으로서 3만 단어의 논문작성 및 법률연구방법 과정을 이수한다. 처음 두 학기 동안에는 모든 연구학생들은 법률연구방법론 또는 범죄학 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따라야한다. 논문은 8월 초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시험관 2인을 동반한 심층 구술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Mphil 과정 이후에도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구생 또는 Dphil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이때 Mphil 논문을 Dphil 최종논문에 통합할 수 있다. 또한 1년에 2일씩 진행되는 PLTO(the Preparation for Learning and Teaching at Oxford) 프로그램을 수료한 연구생들은 교직원 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sup>69)</sup>

#### 라. 옥스퍼드 법학대학원 박사(Dphil)과정

옥스퍼드대학 DPhil(The Doctor of Philosophy)과정은 전일제의 경우 보통 3~4년, 파트타임의 경우 6~8년간 진행되며 7만 5천단어에서 10만단어에 이르는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의 경우 PRS(Probationer Research Student)라는 연구학생의 지위로 먼저 입학하며, 3학기에 있는 자격시험에 통과해야만 완전한 Dphil 자격을 얻게 된다. 자격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법률연구방법론이나 범죄학센터와 사회법학센터가 운영하는 세미나 등을 이수하여야하나, 옥스퍼드에서 Mphil 과정을 거친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입학 후 6학기에 논문 초안제출과 연구주제 개요에 대한 추가평가가 이루어지며

68) 옥스퍼드대학교, DPhil in Law(검색일: 2020. 9. 28)

69) 옥스퍼드대학교, Admissions, Master(검색일: 2020. 9. 28)

확인과정을 마친 후 3, 4학년에 최종 논문을 제출한다. 또한 Dphil 과정생은 PLTO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조교로서 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sup>70)</sup>

#### 마. 국제사법재판소 사법 펠로우 프로그램

옥스퍼드 법학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펠로우십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법학부 대학원생 또는 최근 2년간 옥스퍼드 법학부를 졸업한 학생이며 국적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지원자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에 능통하고 국제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 지원신청 시에는 이력서 및 신청서, 성적증명서, 2통 이상의 추천서, 15페이지 이내의 논문이나 논문요약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생으로 최종선발된 1인은 ICJ에 1년간 파견되어 의견서 작성, 명령서 및 기타 법원 문서 작성, 사건 파일 작성, 법적 문제 조사 등의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변호사이자 국제법 권위자인 프랭크 버만의 기부금과 옥스퍼드 국제공법 과목 그룹 회원들이 모금한 추가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sup>71)</sup>

## (2) 케임브리지대학교

### 가. 설립연도 및 대학소개

케임브리지대학은 영국 잉글랜드 케임브리지에 위치한다. 1209년에 설립되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다. 총 31개의 대학, 150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9명의 노벨상 수상자, 47명의 국가원수, 190명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하였다. 케임브리지대학에

70) 옥스퍼드대학교 Admissions, Doctor(검색일: 2020. 9. 28)

71) 옥스퍼드대학교, News(검색일: 2020. 9. 28)

는 전 세계 147개국 학생들이 재학 중으로 2018년 기준 학부생과 대학원생 22,579명이 재학 중이다.<sup>72)</sup>

#### 나. 학비

2021-2022학기 케임브리지대학원 학비는 영국 국내학생의 경우 연간 최저8,844파운드(한화 약 1,328만원)에서 최고 59,000파운드(한화 약 8,859만원)까지이며, 외국 학생의 경우 최저 22,482파운드(한화 약 3,375만원)에서 최고 59,000파운드(한화 약 8,859만원)까지로 책정된다. 법학 석사의 경우 영국 국내 학생 학비가 17,148파운드(한화 약 2,575만원)인데 반해 외국 학생은 32,214파운드(한화 약 4,838만원)로 약 1.8배 높다. 법학 박사의 경우 영국 국내 학생이 8,844파운드(한화 약 1,328만원), 외국 학생이 25,758파운드(한화 약 3,868만원)로 책정되어있다.

#### 다. 케임브리지 법학대학원 석사(LLM) 과정

케임브리지 법학석사과정은 매년 10월초에서 다음 해 6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되는 교육과정으로 40~50개국에서 온 160~18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이 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영국 대학의 법학 퍼스트 클래스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해외 기관의 학위가 필요하다. 언어 요구사항은 언어자격은 IELTS 점수 합계 7.5 또는 TOEFL 합계 110점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학생들은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총 4개의 코스를 수강하여야 하며 법률 강좌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약 25~30개 강좌가 개설된다. 또한 학기 초에 각 강좌마다 포럼을 개최하여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과 적합한 강좌를 선택할 수 있

72) 케임브리지대학교(검색일: 2020. 9. 28)

다. 2018-2019학기 국제법 강좌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국제법’ 강좌가 마련되었다. 학기말에는 각 코스마다 3시간의 필기시험또는 에세이를 통하여 평가가 진행되며, 4개 코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전체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sup>73)</sup>

#### 라. 케임브리지 법학대학원 박사(PhD in Law) 과정

케임브리지 법학박사과정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3~4년간 과정으로 첫 해 5월말까지 1만 5천 단어 이내의 논문을 제출하고, 구두시험에 통과하여야 박사과정에 정식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된다. 법학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국 대학 또는 해외 대학에서 법학학위나 제안된 연구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우등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언어자격은 IELTS 점수 합계 7.5 또는 TOEFL 합계 11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해야한다. 박사과정에 정식으로 입학하면 3~4학년 단계에서 10만 단어 이내의 최종논문을 작성하게 된다. 이때 심사관 2명의 심사 및 구두시험을 치른다.<sup>74)</sup>

#### 마. 로터파트 국제법 센터(LCIL) - 로터파트 링크드 프로그램

케임브리지대학 로터파트 국제법 센터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로터파트 링크드(Lauterpacht Linked)는 로펌, 기업, 외무부, 센터 간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센터의 인프라와 활동을 지원하는 대가로 실무자들에게 센터와 관련된 인물·사건 및 연구에 대한 배타적 접근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파트너는 LCIL 파트너 펠로우에 한 명의 대표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현재 일본 외무성, 폴

73) 케임브리지대학교, Postgraduate Admissions, Master of Law (LLM)(검색일: 2020. 9. 28)

74) 케임브리지대학교, Postgraduate Admissions, Ph D in Law(검색일: 2020. 9. 28)

란드 외무부, 스페인 외무부, 네덜란드 외교부 국제법 센터, 해외 및 영연방 사무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sup>75)</sup>

#### 바. 로터파트 국제법 센터(LCIL) - 브랜든 리서치 펠로우십

케임브리지대학 로터파트 국제법 센터는 마이클 브랜든의 기부금으로 브랜든 리서치 펠로우십(Brandon Research Fellowship)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 법률 실무자와 학자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박사 후 과정 연구 장학금으로 약 11주에서 13주 동안 로터파트 국제법 센터에서 공공 또는 사설 국제법 또는 국제 중재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응시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 하나 이상의 언어에 능통해야하며 유럽연합 회원국민과 커먼웰스 회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일본, 파나마, 세르비아, 스위스, 그리스, 미국 국적을 가진 후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sup>76)</sup>

#### 사. 막스플랑크 로(Max Planck Law) 연구 파트너십 및 확장

케임브리지대학교 법학부는 독일 함부르크의 막스 플랑크 비교 및 국제 사법연구소와 계약을 맺어 연구생이 5월에서 9월 사이에 보통 2~5개월 동안 방문학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지원자는 케임브리지대학교 유럽법 연구센터의 연구보조금을 받게 된다.<sup>77)</sup> 이 파트너십은 독일 11개 법률중심 연구기관 네트워크인 막스 플랑크 로와 새로운 교환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연구생 및 학자에게 연구센터 중 한 곳에서 2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확장된 파트너십은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다.<sup>78)</sup>

75) 로터파트 국제법 센터(검색일: 2020. 9. 29)

76) 로터파트 국제법 센터, Brandon Research Fellowship 2020-2021(검색일: 2020. 9. 29)

77) 케임브리지대학교(검색일: 2020. 9. 29)

### (3) 에든버러대학교

#### 가. 설립연도 및 대학소개

에든버러대학교는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에 위치해있으며 1583년에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현재 3개 대학 아래 22학부 및 대학원으로 구성되어있다. 2019-2020학기 기준 44,510명이 재학 중이며, 해외 학생 16,375명이 포함된다. 학기는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이다.<sup>79)</sup>

#### 나. 학비

에든버러대학교 법학석사과정 중 국제법을 전공할 경우 2020-2021학기 기준 국내 및 EU학생의 경우 연간 13,000파운드(한화 약 1,954만원), 외국 학생 은 22,850파운드(한화 약 3,435만원) 정도의 학비가 소요된다.<sup>80)</sup> 법학박사 과정은 국내 및 EU학생이 4,407파운드(한화 약 662만원), 그 외 외국 학생은 20,100파운드(한화 약 3,022만원)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수업료가 매년 증가한다.<sup>81)</sup>

#### 다. 에든버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석사(LLM)과정

에든버러대학교 법학대학의 국제법 석사학위는 국제공법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고안되었으며, 국제법 및 국제관계의 기초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1년에 걸쳐 풀타임으로 수강하거나 2년에 걸쳐 파트타임으로 수강할 수 있으나, 파트타임의 경

78) 케임브리지대학교, University of Cambridge and Max Planck Law Expand research partnership (검색일: 2020. 9. 29)

79) 에든버러대학교(검색일: 2020. 9. 29)

80) 에든버러대학교, 2020-2021 등록금 안내 페이지(검색일: 2020. 9. 29)

81) 에든버러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안내 페이지(검색일: 2020. 9. 29)

우 영국 및 EU학생에 한정하여 제공된다.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국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우등학위가 필요하며 한국 학생의 경우 학점 4.5점 만점 중 3.5점에 해당하는 성적이 필요하다. 언어자격은 IELTS 총 7.0점 이상, TOEFL-iBT 100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유하여야 한다.

국제법 석사과정에서는 국제해양거버넌스 및 해양환경보호, 국제법 기본문제, 국제기후변화법, 국제환경법 등의 과목이 핵심과목으로 배정되어있으며 국제해양법의 경우 제임스 해리슨(James Harrison)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하나의 코스 당 약 200시간의 학습 및 교육활동시간이 배정되며, 석사과정 중 120학점의 과정을 완료하면 1만 단어 내외의 논문을 작성한다. 이때 수강한 프로그램 중 한 가지 과목을 기반으로 한다.<sup>82)</sup>

#### 라. 에든버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PhD)과정

에든버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는 약 1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으로 3년의 풀타임 과정과 6년의 파트타임 과정이 있다. 단, 파트타임은 영국 및 EU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 박사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법학 또는 사회과학 학위를 수여하거나 영국 석사 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과학, 역사 및 철학적 탐구를 포함한 법률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만큼 법률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의 지원도 고려한다. 언어자격은 석사과정과 동일하게 IELTS 총 7.0점 이상, TOEFL-iBT 100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2,000단어 이내의 연구제안서를 제출해야한다. 연구 코스에는 상법, 형법, 범죄학 등의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중 국제공법

82) 에든버러대학교, 법대 홈페이지, Masters Degrees(검색일: 2020. 9. 29)



연구 분야를 선택하여 해양법, 세계 환경법, 국제법 이론, 국제법의 역사, 국제 경제법, 인권, 국제 형법을 포함한 전문적인 현대 국제법 지식을 쌓을 수 있다.<sup>83)</sup>

### 3) 호주 주요 대학

#### (1) 호주 국립대학교

##### 가. 설립연도 및 대학소개

호주 국립대학교는 1946년 8월 호주 의회 입법으로 설립된 호주 명문대학이다. 캔버라에 위치해 있으며 7개 단과대학을 가지고 있으며, 호주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정부의 지원 및 기금을 받고 있다. 학생 수는 학부생 약 1만 명, 대학원생 약 1만 명 정도이다.<sup>84)</sup>

##### 나. 학비

호주 국립대학교 국제법 및 외교석사과정의 학비는 국내 학생 32,256 호주달러(한화 약 2,684만원), 국외 학생의 경우 48,384 호주달러(한화 약 4,026만원)으로 책정되어있다.<sup>85)</sup> 박사과정을 밟는 국내 학생의 경우 호주 정부가 지원하는 RTS(Research Training Schem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비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유학생의 경우 2018년 기준 40,416 호주달러(한화 약 3,363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 호주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 및 외교석사과정

호주 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 및 외교석사(Master of International

83) 에든버러대학교, 법대 홈페이지, Research Degrees(검색일: 2020. 9. 29)

84) 호주 국립대학교(검색일: 2020. 9. 30)

85) 호주 국립대학교, 학과 소개(검색일: 2020. 9. 30)

Law and Diplomacy)는 2년 과정으로 국제법 원칙, 해양법, 국제환경법, 해양안보법, 국제기후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개설된다. 지원자는 학사학위이나 평균평점(GPA) 7.0점 만점 중 5.0점에 준하는 국제학사학위 또는 평균평점 7.0점 만점 중 4.0점 이상에 해당되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직종에서 업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호주에서 12학년을 보낸 자, 국제학사학위 보유자, 뉴질랜드 국가 교육 성취증명서(NCEA) 보유자의 경우 국내 지원자로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외 지원자의 경우 영어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DET(Duolingo English Test) 115점 이상 자격을 보유하거나 온라인 인터뷰를 통과하여야 한다.<sup>86)</sup>

#### 라. 호주 국립대학교 법학대학 법학박사(PhD) 과정

호주 국립대학교 법학대학 법학박사 과정은 풀타임 4년 과정이다. 입학 을 위해서는 호주 대학 기준 1급 또는 상위 2급의 우등학위에 해당되는 학사학위나 차별평균 70% 이상의 법학석사(LLM), 또는 고등학위 연구책임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Academic IELTS 전체 점수 6.5 이상, TOEFL 필기 시험 570점 이상, TWE 점수 4.5점 이상, TOEFL 인터넷 시험 전체 점수 80점 이상에 해당되는 영어점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매년 연간계획, 연례보고서, 논문제안검토,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를 받아야하며, 10만 단어 이내의 논문을 최종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sup>87)</sup>

86) 호주 국립대학교, 학과 소개(검색일: 2020. 9. 30)

87) 호주 국립대학교, 학과 소개(검색일: 2020. 9. 30)

## (2) 멜버른대학교

### 가. 설립연도 및 대학소개

멜버른대학교는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1853년 설립되었다. 2008년에는 멜버른 모델로 불리는 멜버른대학교만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발하였으며 18개 대학원에서 400개 이상의 대학원 학위 과정을 제공한다. 현재 재학생은 약 5만 2천여 명이며 49%가 대학원생에 해당된다. 전체 재학생 중 42%는 130개국 이상에서 모인 유학생으로 구성되어있다.<sup>88)</sup>

### 나. 학비

멜버른대학교 석사과정 학비는 44,416 호주달러(한화 약 3,696만원) 정도로 책정되어있다. 박사과정 국내 지원자의 경우 RTP (Research Training Program)을 통해 학비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외국 유학생의 경우 연간 42,240 호주달러(한화 약 3,696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 다. 멜버른 법학전문대학원 공공 및 국제법 석사과정

멜버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LLM) 과정은 70명 이상의 국제 전문가와 130명의 호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26개의 전문 법률분야에서 39개의 강좌를 지원한다. 총 1년 과정으로 3월 중순부터 다음 해 8월까지 학업을 지속하게 되며 지원자는 전체 전문분야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자는 법학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2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보유하거나, 관련 분야의 학부 학위를 보유하면서 2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관련 분야

88) 멜버른대학교 홈페이지(검색일: 2020. 9. 30)

의 학부 학위를 보유자는 4개 과목이 성적이 우수하며 1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언어요건은 TOEFL 577점 이상, IELTS 6.5점 이상, Pearson Test of English 최소 58-64점, Cambridge English, Advanced / Certificate in Advanced English (CAE) 최소 176점에 준하는 점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공공 및 국제법 석사(Master of Public and International Law)과정을 선택하게 되면 총 10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기당 50학점을 등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해양법, 국제법, 조약법, 국제기구법, 국제법 및 개발 등의 강좌가 개설되며 석사 학위를 마친 학생이 추가적인 연구를 원하는 경우 법학 박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sup>89)</sup>

#### 라. 멜버른 법학전문대학원 박사(PhD) 과정

멜버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과정은 4년 과정으로 매년 15명 정도가 지원하고 있다. 연간 4번 지원자를 모집하며 지원자는 매년 한 번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박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최종결과물로 8만에서 10만 단어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학기간 중 연구지원 프로그램(RSP)을 통해 연구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호주 대학에서 H2A 표준으로 인정하는 우등 학위를 최소 4년 동안 이수하거나 RHD위원회에서 동등하다고 간주하는 자격을 이수해야한다. 또한 석사학위에서 전체 H1(80-100%) 또는 H2A (75-79 %) 등급이상의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 영어자격은 석사과정과 마찬가지로 TOEFL 577점 이상, IELTS 6.5점 이상, Pearson Test of English 최소 58-64점, Cambridge English, Advanced

89) 멜버른대학교 핸드북(검색일: 2020. 9. 30)

/Certificate in Advanced English (CAE) 최소 176점을 달성해야한다. 멜버른대학교에서 학부학위나 대학원 학위를 이수한지 2년 이내인 자와 대학원 학위 1년 이상 수료자라면 영어 실력에 대한 추가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sup>90)</sup>

〈표 3-12〉 마영호 주요 대학 법학과 석사 과정 비교

국가	대학명	지원 자격	학위 취득 요건	학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LL.M.과정	• 추천서(최소 2명) • TOEFL IBT 100점	• 12개월 • 23~28학점	\$65,875
	예일대 로스쿨 LL.M.과정	• 추천서(최소 2명) • 수학 동기와 계획에 대한 에세이 2편 • TOEFL IBT100점	• 12개월 • 최소 24학점	\$65,792
	컬럼비아대 로스쿨 LL.M.과정	• 추천서 • TOEFL IBT 105점 • 학부졸업 후 업무경력	• 10개월	\$72,352
	스탠포드대 로스쿨 LL.M.과정	• 미국 외 법학 학사를 받은 학생으로 제한 • 추천서 2건 • TOEFL IBT 100점, PBT 620점	• 9개월,동안 스탠포드 거주 • 최소 35, 최대 45 학점	\$64,350
	시카고대 로스쿨 LL.M.과정	• JD 학위(미국), 해외 학생 의 경우 변호사 시험을 치 르는데 필요한 대학법률 교육 이수 • TOEFL IBT 104 • IELTS 7.5	• 12개월 • 3학기, 9개 코스이수 (27시간)	\$68,652
	뉴욕대 로스쿨 LL.M.과정	• TOEFL IBT100 • IELTS 7.0	• 9개월 • 24학점	\$68,348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Mphil 과정	• TOEFL IBT 110 • IELTS 7.5	• 3학기 • 3만 단어 논 문작성 및 법 률 연구 방법 과정 이수	• 해외£24,450 • 영국/아일랜드£8,570

90) 멜버른대학교, 학과 정보(검색일: 2020. 9. 30)

국가	대학명	지원 자격	학위 취득 요건	학비
	케임브리지대 LL.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EFL IBT 110</li> <li>• IELTS 7.5</li> </ul>	• 9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32,214</li> <li>• 영국£17,148</li> </ul>
	에든버러대 LL.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EFL IBT 100</li> <li>• IELTS 7.0</li> </ul>	• 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22,850</li> <li>• 영국, EU £13,000</li> </ul>
호주	호주 국립대 법과대학 국제법 및 외교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학위이나 평균평점 (GPA) 7.0점 만점 중 5.0점에 준하는 국제학사학위 또는 평균평점 7.0점 만점 중 4.0점 이상에 해당되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직종에서 업무경험</li> <li>• 외국인의 경우 호주에서 12학년 수학</li> <li>• DET115점 혹은 온라인 인터뷰</li> </ul>	•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AUD</li> <li>• 48,384</li> <li>• 호주인AUD</li> <li>• 32,256</li> </ul>
	멜버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공 및 국제법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학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2년 이상의 전문 경험 보유, 혹은 관련 분야 학부 학위를 보유하면서 2년 이상의 전문경험을 보유</li> <li>• TOEFL PBT 577</li> <li>• IELTS 6.5</li> <li>• Pearson Test of English 58-64</li> <li>• CAE 최소 176점</li> </ul>	• 1년	AUD 44,416

자료: 저자 작성

## 제4절 소결

현재 국내에는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국내 대학원에서 해양법을 주제로 한 강의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법을 논문 주제로 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들이 해양법을 학위 논문 주제로 선택하는 것은 해양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학문적으로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의 해양법 공부가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위논문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해양법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전공을 살려서 해양법 분야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을 직업적으로 수용할 만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이다.

또한 해양관련 연구기관 또는 재단에서도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신진인력이 연구기관에 들어오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간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들 중 해양법 관련 국내와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는 있다.

한국해양재단이 해양수산부의 위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들(해양법 모의재판대회, 해양법 논문경시대외, 해양법 논문작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단계로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법에 대해 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은 아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양수산부의 공적원조프로그램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수해양법아카데미는 해양법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 2주간 집중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다만, 이는 참여자들의 해양법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한국인들에게 전체 정원의 10% 이내에서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해양법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는 아직까지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가 없을뿐더러 관심있는 신진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해양법 관련 해외의 프로그램에는 2주 내지 3주 과정의 단기교육 아카데미, 인턴십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교의 석·박사 과정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국내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 제 4 장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 기반 구축 방안

## 제1절 기본 방향

해양법 전문인력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양성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의 정책수요에 비해 해양법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이를 시장원리에 맡겨 둘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정책적으로 해양법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생애주기형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법에 대해 생소한 대학생부터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들이 해양법에 대해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대학원에서 해양법에 대한 교과 과정이 정기적으로 편성되어 해양법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터득할 수 있게 하고, 많은 대학원생들이 해양법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작성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 진입하게 한다. 이렇게 배출된 신진인력을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국제법 교수 인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학교 교원 채용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양법 신진인력을 수용해서 해양법 전문가로 양성해 나갈 수 있는 곳은 관련 연구기관이다. 연구기관에서 인력을 정기적으로 채용하고 해양법 전문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해양법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벤트성에 거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력양성의 특성상 어떤 프로그램을 5년 내지 10년을 운영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크게 세 부분, 즉 대학, 전문 연구기관 및 해외로 나누어서 검토하도록 한다.

## 제2절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양성 방안

### 1. 대학에서의 양성방안

#### 1)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해양법 관심 확대 방안

##### (1) 내용

대학의 학부생들이 해양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장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양법 관련 교양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한국해양재단 등을 통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정교화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한국해양재단이 운영 중인 해양법/해양영토 학술지원 사업을 개선해서 더 많은 대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사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다른 모의재판대회와의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외교부의 지원 하에 대한국제법학회가 국제법 모의재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해양법이 국제법의 한 분야인 점을 고려할 때 서로 중복될 수가 있다. 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통해 국내 대학원생들의 해양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 연관시키는 등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강좌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다. 독도, 이어도,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 등 한국의 해양법 현안들을 쉽게 풀어주는 강좌를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개설하고, 수강자에게는 해양수산부 또는 주관 기관의 수료증과 함께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 (2) 예산

한국해양재단 등이 위의 해양법/해양영토 학술지원 사업, 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 그리고 강좌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각 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 2) 대학원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방안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은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해양법 강좌를 거의 개설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대학원생들이 학위논문의 주제로 해양법을 주제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대학에서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 (1) 해양법 강의 개설 지원

#### 가. 내용

대학원의 해양법 강의 개설은 전적으로 담당 교수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의 협조 없이는 해양법 강의 개설을 늘이는 어렵다. 따라서 담당교수의 해양법 강의 개설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해양법 강의 개설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교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

기 때문에 어렵다. 이를 고려해서 이른바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강의 운영에 따른 회의비와 특강 강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첫째, 타 대학과의 해양법 공동 강좌 운영 프로그램이다. 타 대학과의 공동 강의는 강의를 두 대학 이상이 동시에 개설해서 전부 또는 일부 과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담당교수의 강의 부담은 줄이면서 두 개 이상의 대학에서 동시에 해양법 강의를 개설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교수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원과 연구기관의 공동 강좌 운영 프로그램이다.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강의 내용을 구성하거나,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이 강의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 나. 예산

이를 위해 1개 프로그램 운영에 연간 5백만 원의 예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연간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10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 (2)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

#### 가. 내용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이 해양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양법 관련 학위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해양법 분야 전문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 해양법 관련 단기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일정한 선발을 거쳐 해외 아카데미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일부로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이 해양법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학원생이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술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예산

대학원생의 해외 연수프로그램 지원은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5백만원으로 가정하면 1천만원의 예산으로 2명을 지원할 수 있다. 석·박사 과정생의 학위논문 작성 지원은 석사과정생에게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박사과정생에게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 지원을 각각 2명으로 산정할 때 필요한 예산은 3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이른다.

### (3) 대학 내 해양법 중점 연구소 지정 운영

#### 가. 내용

대학에서 해양법에 특화된 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대학교에서의 해양법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해양법 전문인력의 양성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학 내에 해양법 관련 현안이나 이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곳은 없으며, 가장 큰 이유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학의 관련 연구소를 해양법 중점 연구기관으

로 지정하여 3년 내지 5년 동안 안정적으로 해양법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연구소 스스로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적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많은 대학교의 연구소들이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해양법과 유사한 사례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중점 연구소로 지정되어 일정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독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임의 연구교수 3명과 연구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sup>91)</sup>

#### 나. 예산

대학 내 해양법 중점 연구소의 운영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가 정착해서 제 기능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지정이 되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 기간 동안 지원을 보장을 하고, 연구의 계속성을 위해 이후 심의를 거쳐 재선정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1개 기관에 1억원 내지 3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2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2. 연구기관에서의 양성 방안

연구기관에서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연구기관에 직원으로 입사한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기관이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의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91)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홈페이지(검색일: 2020. 9. 30)

## 1) 연구기관 자체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 가. 내용

현재 국내 연구기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없다. 연구원이 입사하면 다양한 연구과제에 관여하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아간다. 이 점은 연구기관에 입사하는 해양법 이외 다른 분야의 연구원에게도 동일하다. 또한 연구기관 내에서 해양법을 담당하는 연구원도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자체의 연구인력을 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외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해양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국내 연구원들의 해당 프로그램들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원이 여수해양법 아카데미와 로즈해양법아카데미에 소수의 인원이 참여할 뿐이다. 이는 연구원에게 주어진 업무가 과다해서 교육기회를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능력배양을 위한 인식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연구원에게도 적용하여 능력 배양을 위한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기관과 대학이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다. 이를 앞서 살펴본 대학원 강좌를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과 연계



할 수도 있다. 연구기관과 대학이 공동으로 핵심적 현안과 이론으로 짜여진 강좌를 계절단위 또는 학기 단위로 개설하는 방안도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해양경 찰청과 해군 등 해양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관계자들도 참여 가능하다.

#### 나. 예산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국내외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는 여비, 숙박비 또는 등록비 등의 비용을 연구기관과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에서 분담할 수 있다.

## 2)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가. 내용

해양관련 연구기관에서 해양법 전공자의 인턴십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해양법을 논문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에게 6개월에서 1년의 인턴십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인턴은 해양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취직하거나 또는 해외 유학의 길을 갈 수도 있다.

현재 해양법 관련 인턴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해양관련 연구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연구소 포함)이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법 전문인력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해양법과의 업무 연관성이 낮아서 해양법을 전공하는 인턴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인턴을

채용하는 방법은 예산, 인원, 기간 등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양 기관이 부산 영도구 내에 서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인턴 기간의 절반씩 양 기관을 옮겨가며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 방안도 있다. 나아가 양 기관이 있는 부산 내에 한국 해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등의 대학들에 해양법 전문가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채용된 인턴들을 이들 대학 또는 대학의 해양법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나. 예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적정 인원을 정하는 일이다. 인턴 수요가 얼마가 될 지는 인턴의 대우 조건에 달려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 단가는 출연연구기관의 인턴연구원을 연구보조원에 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연간 비용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이 1인당 연간 57백만 원이 조금 넘게 소요된다.

〈표 4-1〉 인턴 1인의 월 비용 산출

단위: 원

구분	기준단가 (100%)	상여금	퇴직급여 총당금	적용월액	연 비용
연구보조원	3,310,932	1,103,644	367,881	4,782,457	57,389,484

자료: 2020년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정 기준(검색일: 2020. 9. 20)

인턴이 연구기관에서 생활하면서 일정 부분 연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를 연구기관이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부담 방식과 채용 인원 따라 연구기관과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5:5, 3:7, 0:10 등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 각 기관에 2명씩 총 4명의 인턴을 채용하

고 전액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경우 연간 약 2억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 제3절 해외 프로그램을 통한 양성 방안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해양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수적인 어학능력을 키울 수 있다. 어학능력은 해양법 전문인력이 국제적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전문가들과 교류를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둘째, 해양법 관련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여 해양법 전문가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셋째,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업무 수행에 활용하고 전문가 자신의 학술적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해양법 아카데미 프로그램

##### 1) 내용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의 프로그램에 단기로 파견하는 방안이 있다. 해외 단기 프로그램은 기간이 1주일에서 3주까지 다양하고 주제도 해양법 일반에서 대륙붕이나 해양분쟁해결로 특화되어 있기도 하다. 이 중 단기간에 해양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 참가자들과 교류하기에는 3주간 그리스 로도스섬에서 운영되는 로즈해양법아카데미가 가장 적절하다. 파견 대상자는 해양수

산부 주최의 경시대회 등에서 상을 수여한 사람과 공개모집과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로즈해양법아카데미의 선발방식이 기본적으로 신청자 사이의 경쟁에 의하고 있으며, 참가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국가별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1명을 파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추가 파견 인원은 2명 내지 3명이 된다. 선발된 이들을 안정적으로 파견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카데미의 공동후원자로 참가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과 로즈해양법아카데미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인원을 최소 인원의 수용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2) 예산

로즈해양법아카데미에 1인을 파견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항공료 300만원, 숙박비(20만원x21일=420만원) 및 식비(4만원x21일=82만원)를 포함해서 약 8백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2인을 파견한다면 약 1,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 2. 인턴십 프로그램

### 1) 내용

인턴십 프로그램은 6개월 내지 1년 동안 해외의 기관에서 일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으면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한국에서 파견하는 인턴을 수용할 만한 해외의 기관을 찾는 일이다. 둘째는 인턴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법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의 기관은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들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기구로는 유엔 해양법국과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이 있고, 연구기관으로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막스플랑크연구소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라우터팩터 국제법 연구소와 같은 독립 또는 대학부설의 연구소들이 있다.

이들 기관에 인턴을 파견하는 방법은 해당 기관과 사전에 양해협정을 체결해서 적정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하는 방법과 파견 선발자가 직접 본인이 인턴으로 일할 곳을 찾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파견 선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사전에 해당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후자는 선발자 본인이 선호하는 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부담이 적지만, 선발자가 인턴 기관을 찾지 못해서 파견되지 못하는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인턴에게는 정기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인턴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턴은 해당 기관에 있으면서 자신의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보고서 제출이 인턴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 2) 예산

파견하는 인턴에게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턴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비에는 왕복 항공료, 월세, 보험료 및 생활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비는 국가와 지역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화하기 어렵지만, 선진국의 경우 1명을 파견하는데 6천만 원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2명을 보낼 경우 1억2천만 원이 소요된다.

## 3. 해외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

### 1) 내용

이는 해양법 전문인력을 처음부터 해외에서 양성하는 방안이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처음부터 해외의 잠재적 해양법 전문인력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면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의 수년에 걸친 학업을 통해 어학과 전공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담당 교수를 포함해서 해외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못지않게 이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앞서 살펴본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선발과 파견에 있어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해외의 대학들의 입학사정 절차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해외 대학의 석·박사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을 할 것인

지 또는 선발 후 일정기간(예: 1년) 내에 입학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것인지, 또는 둘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선발자가 해양법 관련 주제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발자에게 해양법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을 쓰게 하고, 석사과정생이 학교에 따라 학위논문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 해양법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적절한 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학교에 따라 석사과정의 경우 학위를 취득하는데 1년에서 2년이 소요되고, 박사과정의 경우 학위를 수여하기까지 4년에서 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원금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대학원 과정의 등록금이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을 기준으로 연간 학비가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은 약 7,660만원인 반면,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의 법과대학은 그 절반이 되지 않는 약 3,677만원 정도이다. 따라서 선발자에게 지원을 할 때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할 것인지 또는 생활비 정액과 등록금의 몇 %와 같이 변동금액을 지원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률적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 2) 예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몇 명에게 지원할 것인지는 전체 예산 규모를 포함해서 다양한 검토를 거친 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합리적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입학 학교까지 정해진 경우에 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 지원 금액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매년 석사과정생 1명, 박사과정생 1명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석사과정생은 2년, 박사과정생은 5년을 매년 6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5년 동안 총 14억4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총 10명(석사과정생 5명, 박사과정생 5명)이 혜택을 받으며, 연간 기준 혜택 받는 사람을 합하면 총 24명이 된다.

〈표 4-2〉 해외 석·박사 과정생 지원 소요 예산

단위: 만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계
석사과정생	6천	12천	12천	12천	12천	54천
박사과정생	6천	12천	18천	24천	30천	90천
인원 합계	2명	4명	5명	6명	7명	24명

자료: 저자 작성

## 제4절 법제도 기반 구축 방안

### 1) 법적 근거 마련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법률 중에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은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이다. 이 법 제6조는 정부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있다.<sup>92)</sup> 해양법 전문인력이 ‘해양수산전문인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은 ‘해양수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해 제31조에서 아래와 같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4-3〉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의 해양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항

조항	내용	비고
제1항	정부는 해양수산업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해양수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교육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원의 증원 및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014년 신설
제3항	해양수산업부장관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	해양수산업부장관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업인과 수산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또한 위 법률 조항의 이행을 위해 동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4-4〉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해양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항

조항	내용
제22조	<p>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업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양수산업전문인력 양성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수립</li> <li>2. 해양수산업전문인력의 교육수요 파악</li> <li>3. 해양수산업전문인력의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교원의 양성</li> <li>4. 그 밖에 해양수산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자료: 저자 작성

92)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해양수산업발전기본계획) 제2항 6호.

그런데 위 법률 제31조 제1항과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초점이 해양 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의 양정보다는 이와 관련한 연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위 조항을 통해 시행하기에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 제31조에 해양법 전문인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는 현재 법 제31조 4항에서 구체적인 분야인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항의 전체적인 체계를 흐트리지 않는다. 요컨대, 위 법률 제5항에 “해양 수산부장관은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 2) 예산 수요 파악 및 확보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의 뒷받침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충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정책의 추진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해양법 전문인력 인력양성 방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누어 잡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5〉 예산 수요 파악

단위: 천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소 예산	최대 예산
국내	대학	대학생 저변확대	30	30
		학위논문 지원	3	6
		강좌 지원	0.5	1
		중점 연구소 지원	20	60
	연구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11.5 (반액 부담)	23 (전액 부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소 예산	최대 예산
해외	아카데미 참가	로즈해양법아카데미	0.8 (1인)	1.6 (2인)
	인턴십 프로그램	국제기구, 연구기관	6 (1인)	12 (2인)
	학위과정 지원	석·박사 과정	12 (석사 1인, 박사 1인: 1년차 지원 누적 2인)	24 (석사 2인, 박사 2인: 2년차 지원 누적 4인)
<b>합계</b>			<b>72.3</b>	<b>157.6</b>

자료: 저자 작성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최소 72.3천만 원에서 최대 157.6백만 원(2년차 기준)에 이른다. 다만, 해외 석·박사 과정생 중 박사과정생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매년 지원을 하기 때문에 5년차에 가서는 혜택을 받는 학생이 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예산도 늘어나야 한다. 그래서 예산이 정점에 이르는 5년차에는 필요 최대 예산이 175.6억 원에 이른다.

예산 수요가 위와 같지만, 사업의 시행은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세부 항목의 예산을 조정하고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새롭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 제 5 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1절 결론

본 보고서는 해양법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45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양법에 관한 현안은 꾸준히 증가하고, 사안의 내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현안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의 정도 또한 심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현안들을 적절히 다루기 위한 해양법 전문인력이 현안의 증가에 비례해서 꾸준히 증가해 오고, 특히 중국·일본과의 경쟁에서 국제사회의 룰인 해양법을 통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서 각 분야에 필요한 해양법 전문인력의 수요를 파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법 전문인력의 양성 현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현황을 검토한 결과 전혀 계획적 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며,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불균형 또

한 심각한 점을 확인하였다. 대학원 과정에서 해양법 강의는 극소수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석·박사 과정생들은 학위논문의 주제를 해양법으로 정하고 대부분 스스로의 연구를 통해 기본적인 해양법 소양을 기르고 있다. 해양법을 학위논문의 주제로 정하여 전공을 하더라도 학위 취득 후에 계속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의 문은 좁다. 해양관련 연구기관에 들어와서 해양법 관련 업무를 접하더라도 본인의 전문성 함양은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 즉, 우리나라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대학원에서부터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각자도생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서 본 보고서는 해양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양성방안은 크게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국내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의 양성 과정으로, 국외는 단기 아카데미, 중기 인턴, 장기의 학위과정으로 세분하여 파악하였다.

먼저 대학에서의 양성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해양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이다. 현재 한국해양재단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그 동안의 실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원에서 해양법 강의 개설을 늘리고, 대학원생들의 해양법 관련 학위 논문 작성을 유도하여 이 분야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안이다. 셋째, 대학 내 해양법 중점연구소를 지정하여 해양법 연구와 인력 양성을 병행하게 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연구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방안이다.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국내외 다양한 아카데미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

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해양법 관련 학위를 취득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징금 다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국외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는 해양법 관련 아카데미 참가하는 단기 프로그램,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에 인턴으로 참가하여 6개월 내지 1년 동안 일을 하며 배우는 중기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해양법을 전공하는 장기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검토 결과 현재의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을 위해 동 법에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근거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들을 모두 실행하기 위해 연간 필요한 예산은 최소 7억2천3백만 원(1년차)에서 최대 15억7천6백만 원(2년차)에 이른다.

## 제2절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양법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은 본문과 앞서 결론에서 기술하였다. 성공적인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과 이를 통한 국가 해양권익의 증대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 ▶ 첫째, 정책의 지속성·안정성을 위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인력양성의 효과는 그 특성상 장기간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나 정책 집행 수뇌부의 이해에 따라서 중간에 정책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인력양성 방안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정기적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평가체계의 구축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중국과 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해양법 현안은 대부분 중국·일본과 관계가 있으며, 이들 현안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해양법 전문인력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일본의 해양법 전문인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교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법 전문인력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군사·경제 전쟁과 달리 법률전(lawfare)에서의 무기는 모두에게 동일한 해양법이라는 국제규범이며, 승패는 결국 이를 다루는 해양법 전문인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제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목적은 첫째, 국내 해양법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에 안정적으로 파견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안정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목적은 국제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김우호, 고병욱, 『해운산업 전문인력 수급전망과 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김덕기, 한희정,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박덕배, 『동북아 해양영토전-보이지 않는 외교전쟁의 기록』 (블루&노트; 2013)
- 윤성순, 조동오, 『해양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최종화, 『현대한일어업관계사』 (세종출판사: 2000)
- 한기원, 안요한, 현우용, 『해양과학기술 전문분야 양성 정책 연구- 해양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 홍장원, 이종훈, 이정아,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 〈해외 문헌〉

- 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n Offshore Areas, “Report of the Sixth Session”, 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1969
- Monika Chansoria, “1969 Report by 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ical Debate over Senkaku Islands”, *Japan Review* Vol. 2 No. 3 (2018),

## 〈국내 법령 및 국제협약〉

-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1033호」(1946년 6월 22일 제정)
-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1952년 1월 18일 공포, 국무원 고시 제14호)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1974년 1월 30일 채택, 1978년 6월 22일 발효)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년 1월 30일 채택, 1978년 6월 22일 발효)
- 「유엔해양법협약」(1982. 4. 30. 채택/1994. 11. 16 발효)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4. 7. 1./ 2013. 12. 30. 일부개정, 법률 제12147호)
- 「해저광물자원개발법」(2017. 9. 22./ 2017. 3. 21 일부개정, 법률 제14679호)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2020. 2. 28. / 2019. 8. 27. 타법개정, 법률 제16570호)

## 〈국제판례〉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69
-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erits (The Hague, 12 July 2016)

## 〈인터넷 링크〉

- 네이버 국어사전, 「전문가」,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ec12fafbdb64f6ba1d9b285811550dc>) (검색일: 2020. 11. 8)

메리안 웹스터 사전, 「expert」(<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expert>) (검색일: 2020. 11. 8)

2020년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정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o7gRg5fKd2dc9baq5SXas+pX.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5118](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o7gRg5fKd2dc9baq5SXas+pX.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5118) (검색일: 2020. 9. 20)

ICJ, Internship, <https://www.icj-cij.org/en/internships> (검색일: 2020. 9. 25)

\_\_\_\_\_, Judicial Fellows Programme, <https://www.icj-cij.org/en/judicial-fellows-program> (검색일: 2020. 9. 25)

IFLOS, <https://www.iflos.org/summer-academy/classes/class-of-2019/> (검색일: 2020. 8. 26)

ITLOS, Summer Academy(<https://www.iflos.org/summer-academy/overview/admission/>) (검색일: 2020. 8. 25)

\_\_\_\_\_, IFLOS Summer Academy, <https://www.itlos.org/en/the-registry/training/iflos-summer-academy/> (검색일: 2020. 8. 25)

\_\_\_\_\_, Internship Programme, <https://www.itlos.org/the-registry/training/internship-programme/> (검색일: 2020. 9. 25)

\_\_\_\_\_, Summer Academy, <https://www.iflos.org/summer-academy/overview/admission/> (검색일: 2020. 8. 25)

Shippers' Journal, <http://www.shippersjournal.com/news/article.html?no=23218> (검색일: 2020. 8. 24)

극지 이야기, <http://koreapolarportal.or.kr/news/detail/polarNotice.do> (검색일: 2020. 8. 24)

\_\_\_\_\_, <http://koreapolarportal.or.kr/news/detail/polarNotice.do> (검색일: 2020. 8. 24)

뉴욕대학교, <https://www.law.nyu.edu/> (검색일: 2020. 9. 28)

- 로즈아카데미(<https://colp.virginia.edu/Rhodesacademy/>)(검색일: 2020. 8. 24)
- 로터파트 국제법 센터, <https://www.lcil.cam.ac.uk/about-centre/lauterpacht-linked-programme>(검색일: 2020. 9. 29)
- \_\_\_\_\_, Brandon Research Fellowship 2020-2021, <https://www.lcil.cam.ac.uk/b-randon-research-fellowship-2020-2021>(검색일: 2020. 9. 29)
- 막스 플랑크 국제법·비교법 연구소, <https://www.mpil.de/en/pub/news.cfm>(검색일: 2020. 9. 28)
- \_\_\_\_\_, INTERNSHIP PROGRAMME, <https://www.mpil.de/en/pub/research-in-teraction/internship-programme.cfm>(검색일: 2020. 9. 28)
- 멜버른대학교 홈페이지, <https://about.unimelb.edu.au/>(검색일: 2020. 9. 30)
- \_\_\_\_\_, 학과 정보, <https://study.unimelb.edu.au/find/courses/graduate/doctor-of-philosophy-law/>(검색일: 2020. 9. 30)
- \_\_\_\_\_, 핸드북, <https://handbook.unimelb.edu.au/2020/courses/511aa>(검색일: 2020. 9. 30)
-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csis.org/>(검색일: 2020. 9. 28)
- \_\_\_\_\_, Careers and Internships, <https://www.csis.org/programs/about-us/careers-and-internships>(검색일: 2020. 9. 28)
- 법과대학원입학위원회, JD Degree Programs, <https://www.lsac.org/discover-law/types-law-programs/jd-degree-programs>(검색일: 2020. 9. 28)
- \_\_\_\_\_, LLM Degree Programs, <https://www.lsac.org/discover-law/types-law-programs/llm-degree-programs>(검색일: 2020. 9. 28)
- 스탠포드대학교, <https://law.stanford.edu/>(검색일: 2020. 9. 28)
- 시카고대학교, <https://www.law.uchicago.edu/>(검색일: 2020. 9. 28)
- 에든버러대학교, <https://www.ed.ac.uk/about>(검색일: 2020. 9. 29)
- \_\_\_\_\_, 2020-2021 등록금 안내 페이지, [https://www.ed.ac.uk/studying/postgraduate/fees?programme\\_code=PRPHDLAWAA1F](https://www.ed.ac.uk/studying/postgraduate/fees?programme_code=PRPHDLAWAA1F)(검색일: 2020. 9. 29)

- \_\_\_\_\_, 대학원 등록금 안내 페이지., <https://www.ed.ac.uk/tuition-fees/find/postgraduate-taught/2020-2021/taught-masters?keyword=law>(검색일: 2020. 9. 29)
- \_\_\_\_\_, 법대 홈페이지, MastersDegrees, <https://www.law.ed.ac.uk/study/masters-degrees/llm-international-law#first/>(검색일: 2020. 9. 29)
- \_\_\_\_\_, 법대 홈페이지, Research Degrees, <https://www.law.ed.ac.uk/study/research-degrees/how-to-apply>(검색일: 2020. 9. 29)
-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https://www.iiss.org/careers/jobs/2020/09/research-analyst-csdp-latam>(검색일: 2020. 9. 28)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홈페이지, <http://dokdo.yu.ac.kr/>(검색일: 2020. 9. 30)
- 예일대학교, Degree Programs, <https://law.yale.edu/study-law-yale/degree-programs>(검색일: 2020. 9. 28)
- \_\_\_\_\_, Graduate Programs, <https://law.yale.edu/study-law-yale/degree-programs/graduate-programs>(검색일: 2020. 9. 28)
- 옥스퍼드대학교, <https://www.ox.ac.uk/about/organisation>(검색일: 2020. 9. 28)
- \_\_\_\_\_, Admissions, DPhil in Law, <https://www.ox.ac.uk/admissions/graduate/courses/dphil-law>(검색일: 2020. 9. 28)
- \_\_\_\_\_, Admissions, Doctor, <https://www.law.ox.ac.uk/admissions/postgraduate/doctor-philosophy-law>(검색일: 2020. 9. 28)
- \_\_\_\_\_, Admissions, Master, <https://www.law.ox.ac.uk/admissions/postgraduate/master-philosophy-law>(검색일: 2020. 9. 28)
- \_\_\_\_\_, GRADUATE ADMISSIONS STATISTICS, [https://www.ox.ac.uk/sites/files/oxford/field/field\\_document/Grad%20Admissions%20Statistics%20-%202018-19%20entry.pdf](https://www.ox.ac.uk/sites/files/oxford/field/field_document/Grad%20Admissions%20Statistics%20-%202018-19%20entry.pdf)(검색일: 2020. 9. 28)
- \_\_\_\_\_, News, <https://www.law.ox.ac.uk/news/2019-12-17-call-applications-2020-2021-icjs-judicial-fellows-programme>(검색일: 2020. 9. 28)
- 외교부, [http://www.mof.go.kr/synap/view.do?fn=MOF\\_ARTICLE\\_35031\\_20200807173c774bd6e380&fd=202008](http://www.mof.go.kr/synap/view.do?fn=MOF_ARTICLE_35031_20200807173c774bd6e380&fd=202008)(검색일: 2020. 8. 24)

- \_\_\_\_\_, <http://www.mof.go.kr/article%20/view.do?articleKey=26246&boardKey=9&menuKey=375&currentPageNo=1> (검색일: 2020. 8. 24)
- \_\_\_\_\_, [http://www.mof.go.kr/synap/view.do?fn=MOF\\_ARTICLE\\_35031\\_20200807173c774bd6e380&fd=202008](http://www.mof.go.kr/synap/view.do?fn=MOF_ARTICLE_35031_20200807173c774bd6e380&fd=202008)(검색일: 2020. 8. 24)
- 컬럼비아대학교, <https://www.law.columbia.edu/>(검색일: 2020. 9. 28)
- 케임브리지대학교, <https://www.cam.ac.uk/about-the-university/cambridge-at-a-glance>(검색일: 2020. 9. 28)
- \_\_\_\_\_, 법대 홈페이지, <https://www.law.cam.ac.uk/admissionscoursespostgraduate-research/links-overseas-institutions>(검색일: 2020. 9. 29)
- \_\_\_\_\_, Postgraduate Admissions Ph D in Law, <https://www.postgraduate.study.cam.ac.uk/courses/directory/lwlwpdlaw/requirements>(검색일: 2020. 9. 28)
- \_\_\_\_\_, Postgraduate Admissions, Master of Law (LLM), <https://www.postgraduate.study.cam.ac.uk/courses/directory/lwlwllll>(검색일: 2020. 9. 28)
- \_\_\_\_\_, University of Cambridge and Max Planck Law Expand research partnership, <https://www.law.cam.ac.uk/press/news/2020/09/university-cambridge-and-max-planck-law-expand-research-partnership>(검색일: 2020. 9. 29)
- 패로 제도 대륙붕 아카데미, SACS 2018(<https://www.setur.fo/en/education/sacs-2018/>)(검색일: 2020. 8. 25)
- \_\_\_\_\_, SACS 2018, <https://www.setur.fo/en/education/sacs-2018/>(검색일: 2020. 8. 25)
- \_\_\_\_\_, SACS 2018, Intervenors, <https://www.setur.fo/en/education/sacs-2018/intervenors/>(검색일: 2020. 8. 25)
- \_\_\_\_\_, SACS 2018, Terms of Admissions, <https://www.setur.fo/en/education/sacs-2018/terms-of-admission/>(검색일: 2020. 8. 25)
- 하버드대학교, LL.M. Application Deadlines and Materials, <https://hls.harvard.edu/dept/graduate-program/llm-application-deadlines-and-materials/>

(검색일: 2020. 9. 28)

\_\_\_\_\_, LL.M. Program, <https://hls.harvard.edu/dept/graduate-program/llm-program/>(검색일: 2020. 9. 28)

한국해양재단, [http://koreamaritimefoundation.or.kr/community/Notice\\_View.asp](http://koreamaritimefoundation.or.kr/community/Notice_View.asp)(검색일: 2020. 8. 7)

\_\_\_\_\_, [http://koreamaritimefoundation.or.kr/Part/MockTrial/MockTrial\\_Poster.asp](http://koreamaritimefoundation.or.kr/Part/MockTrial/MockTrial_Poster.asp)(검색일: 2020. 8. 7)

헤이그 국제공법 아카데미, <https://www.hagueacademy.nl/programmes/summer-courses/summer-programme/>(검색일: 2020. 8. 24)

호주 국립대학교, <https://www.anu.edu.au/about>(검색일: 2020. 9. 30)

\_\_\_\_\_, 학과 소개, <https://programsandcourses.anu.edu.au/2021/program/MINLD>(검색일: 2020. 9. 30)



## 부록

## 1. 2010년과 2020년 국제법 교수 인원 비교 (2020.10.1. 기준)

	2010	2020
강원대학교	1	1
건국대학교	3	1
계명대학교	1	1
고려대학교	5	4
국민대학교	1	1
경기대학교	1	1
경북대학교	2	2
경상대학교	2	1
경희대학교	2	3
단국대학교	2	3
대구대학교	1	1
동국대학교	2	3
동아대학교	5	3
동의대학교	1	1
부경대학교	2	1
부산대학교	3	3
삼육대학교	0	1
서강대학교	1	0
서울대학교	3	2
서울시립대학교	2	1
선문대학교	1	1
성균관대학교	2	1
성신여자대학교	1	1
숙명여자대학교	1	1
송실대학교	1	2
아주대학교	1	1
안양대학교	1	2
연세대학교	4	4
영남대학교	1	2
영산대학교	2	2

	2010	2020
원광대학교	1	1
이화여자대학교	2	2
인천대학교	1	1
인하대학교	2	3
전남대학교	1	3
전북대학교	1	2
전주대학교	1	0
제주대학교	1	1
중앙대학교	4	2
청주대학교	1	0
충남대학교	2	2
충북대학교	0	0
한국외대	2	2
한국해양대	2	2
한남대학교	1	0
한양대학교	3	1
홍익대학교	2	1
<b>합계</b>	<b>82</b>	<b>74</b>

## 2. 해양 관련 국제기구 고위직 근무 현황 (2020.10.1. 기준)

기구명	한국	중국	일본
국제사법재판소 (ICJ)	• 없음	• 지룽 두안 재판관	• 유지 이와사와 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 백진현 재판관	• 치구오 가오 재판관	• 야나이 순지 재판관
국제해저기구 (ISA)	• 이지현 국장	• 용셴 카이 선임 법무관 • 왕페이 치우 프로 그램매니저	• 키오시 미시로 GIS 담당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	• 박용안 위원	• 탕용 위원	• 야마자키 토시츠구 위원
유엔 해양법국 (UN DOALOS)	• 없음	• 없음	• 없음
국제수로기구 (IHO)	• 박희윤 부국장 • 백 용 부국장	• 없음	• 나오히코 나가사카 부국장
합 계	5명	5명	5명

※ 고위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위 국제기구 직원들이 모두 해양법 전문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자료: 저자 작성

### 3. 해양법 주제 석·박사 학위 논문 목록

#### 1) 해양법 주제 석사 학위 논문 목록 (2010-2019)

	수여년도	논문제목	이름	학교
1	2019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절차의 재판관할권 성립에 관한 연구 : '제7부속서에 의한 중재재판으로 중심으로'	권지예	고려대
2	2019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연구	조은영	중앙대
3	2019	주변국 도서 영유권 · EEZ 문제에 따른 독도 · 이어도 분쟁의 대응방안 연구	이재영	부경대
4	2018	해양법상 잠정조치 요건에 관한 연구 :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서가영	인하대
5	2018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보호구역과 어업 간 조화	김혜인	서울대
6	2018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관할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우동	건국대
7	2018	UN해양법협약 강제적 관할권 조항 해석 및 적용의 변천	조훈	서울대
8	2018	우리나라의 북극해 활동에 관련된 국제해양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문규은	한국해양대
9	2018	유엔해양법협약의 잠정조치제도에 대한 연구	서유진	한국해양대
10	2017	남중국해 관련 필리핀/중국간 중재판정의 의의와 해양법 발전에 미치는 함의	황주영	한양대
11	2017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고은수	고려대
12	2017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관할권 연구	정소현	연세대
13	2017	IUU어업규제를 위한 문제점 및 법적 개선방안	김재현	한국해양대
14	2016	국제해양법상 선박과 기국간 '진정한 관련'에 관한 연구	정로사	한국해양대
15	2015	국제법상 심해저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연구	김민	숙명여대

	수여년도	논문제목	이름	학교
16	2015	동북아 해양갈등이 한반도 해양질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영유권 및 해양경계를 중심으로	박세영	인하대
17	2015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한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정 방안 연구 : 한중어업협정을 중심으로	최혜선	경희대
18	2015	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행사 : 한반도 주변수역을 중심으로	김민철	서울대
19	201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	장혜원	이화여대
20	2015	조어도(釣魚島) 영유권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 중국의 시각에서	우경진	중앙대
21	2015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 및 '이어도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수	제주대
22	2015	UN해양법협약상 중재재판소 판례의 독도문제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차고스군도 사건을 중심으로	김임향	한국해양대
23	2014	해양경계획정 이전 권원중첩수역에서의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이영주	연세대
24	2014	한반도 주변 불법어선 규제 및 관할권 행사에 관한 연구	박상욱	인하대
25	2013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 최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박진철	건국대
26	2013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이명아	한국해양대
27	2013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 한계에 대한 연구	강현주	한국해양대
28	2012	國際法上 北極關聯 法制度의 發展方向에 대한 研究	박원	인천대
29	2012	국제법상 섬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최영진	강원대
30	2012	서해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북방한계선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이경민	이화여대
31	2011	국제사법기구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지위와 역할	김태훈	연세대
32	2011	남극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제6부속서를 중심으로	이현미	인천대

	수여년도	논문제목	이름	학교
33	2011	해양에서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연구 :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도기범	인하대
34	2011	南中國海 海洋領有權 紛爭에 관한 研究 : 中國의 立場을 中心으로	장정정	동국대
35	2011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작은 섬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 형평에 의한 해결의 관점에서	김대경	한양대
36	2011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배수경	한국해양대
37	2011	소말리아 해적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대응방안	박혜성	한국해양대
38	2011	공해어업의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	김남수	부경대
39	2010	국제해양법상 해양경계획정시 고려 요소에 대한 연구 : 특히 해안선 길이에 관하여	김영재	고려대
40	2010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정희제	한국해양대

## 2) 해양법 주제 박사 학위 논문 목록 (2010-2019)

	수여년도	논문제목	이름	학교
1	2019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분쟁해결	김민철	서울대
2	2019	국제법상 해양투기 규제에 관한 연구	최영진	강원대
3	2019	유엔海洋法協約의 發展을 위한 IMO의 法制的 役割에 관한 研究	이보라	한국해양대
4	2019	해양경계획정에서 도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김임향	한국해양대
5	2019	중앙북극공해 어업자원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임지형	한국해양대
6	2018	북극해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 북극해의 이용과 환경보호·보전을 중심으로	김민경	고려대
7	2018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자원의 이용과 규율 : UN해양법협약 원칙의 확장적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진웅	성균관대
8	2017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국제법 쟁점 연구 : 소도서국가와 해양경계획정을 중심으로	김민수	고려대

	수여년도	논문제목	이름	학교
9	2016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의 효력과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사건을 중심으로	장원일	서울대
10	2016	국제해양법상 中國의 九斷線에 관한 研究	정탁	연세대
11	2015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 체제 연구	김자영	고려대
12	2015	동북아지역에서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김남수	부경대
13	2015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해양경계획정문제를 중심으로	성관실	조선대
14	2015	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논거로서 식민지 국가책임에 대한 연구	이동원	한국외대
15	2015	국제해양범죄의 관할권에 관한 법적 연구	성기주	인하대
16	2015	한·중간의 해양관할권 쟁점에 관한 연구 : 해양경계획정과 불법어업 중심으로	남완우	성균관대
17	2015	해적퇴치에 관한 법제 연구	김도준	인하대
18	2014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 : 해양 관할수역을 중심으로	송병진	한국외대
19	2013	동북아시아 도서영유권 분쟁의 법적 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욱	목포대
20	2013	ICJ의 영토분쟁 사건에서의 증거의 유형과 증명력 평가	김원희	서울대
21	2012	한·중 해양관할권 제도에 관한 연구 : 이어도 문제를 중심으로	김태영	한남대
22	2012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연구	김청수	조선대
23	2010	공해 해양보호구역제도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노화섭	한국해양대



#### 4. 일본 대학 교수들의 해양법 주제 논문 목록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1	다마다 다이	<p>①「国連海洋法条約の紛争解決手続における客観訴訟の可能性(유엔 해양법 조약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객관적 소송의 가능성)」 芹田健太郎・坂元茂樹・薬師寺公夫・浅田正彦・酒井啓巨編 『実証の国際法学の継承—安藤仁介先生追悼信山社, 2019年.</p> <p>②「国連海洋法条約附属書Ⅴ調停事件(東チモール/オーストラリア) 権限抗弁に関する決定(유엔 해양법 조약 부속서 V조정사건(동티모르/호주) 권한 항변에 관한 결정)」『神戸法学雑誌』66(3), 2017.</p> <p>③「判例研究 フィリピン対中国事件(国連海洋法条約附属書Ⅶ仲裁裁判所)管轄権及び受理可能性判決(판례연구 필리핀 대 중국 사건(유엔 해양법 조약 부속서 Ⅶ 중재재판소) 관할권 및 수리 가능성 판결)」『神戸法学雑誌』66(2), 2016-09.</p>
2	다케우치 마리	<p>①「国際法における一方的行為の法的評価の再検討(1)海洋法における沿岸国管轄権の「拡大」実行を素材として(국제법에 있어서의 일방적 행위의 법적 평가의 재검토(1) 해양법에 있어서의 연안국 관할권의 "확대" 실행을 소재로 하여)」『法学論叢』150(6), 2002.</p> <p>②「国際法における一方的行為の法的評価の再検討(2・完)海洋法における沿岸国管轄権の「拡大」実行を素材として(국제법에 있어서의 일방적 행위의 법적 평가의 재검토(2・완) 해양법에 있어서의 연안국 관할권의 "확대" 실행을 소재로 하여)」『法学論叢』151(4), 2002.</p> <p>③「国際法における国家管轄権行使に関する基本原則(국제법에 있어서의 국가관할권 행사에 관한 기본원칙)」鶴田順編『海賊対処法の研究』有信堂高文社, 2016.</p>
3	아사다 마사히코	<p>①「国家責任条文における相互依存的義務の違反と対抗措置—第42条と第48条の關係を中心に(국가책임조문에 있어서의 상호 의존적 의무 위반과 대항 조치-제42조와 제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21世紀の国際法と海洋法の課題』東信堂, 2016.</p> <p>②「Treaty of Peace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China: Its</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Territorial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Statu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Taiwa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I 2015.</p> <p>③「国連の北朝鮮制裁と輸出管理(유엔의 북한재판과 수출관리)」『CISTEC journal』131, 2011.</p> <p>④“The Peace Trsaty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China in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Kyoto Law Review,147(4), 2000.</p> <p>⑤「九州南西海域不審船事件と日本の対応—継続追跡の問題を中心に—(규슈 서남해역 괴 선박사건과 일본의 대응-계속 추적 문제를 중심으로)」『日本における海洋法の主要課題 (現代海洋法の潮流・第3巻)』有信堂, 2010.</p>
4	스기하라 다카네	<p>①栗林忠男, 杉原高嶺(編)『海洋法の歴史的展開(해양법의 역사전 전개)』2004有信堂. (도서)</p> <p>②栗林忠男, 杉原高嶺(編)『海洋法の主要事例とその影響(해양법의 주요사례와 그 영향)』2006 有信堂. (도서)</p> <p>③「近代国際法の生成母体と法史的展開に関する一考察(Modern International Law : Its Cultural Foundation and Historical Evolution)」『国際法研究』5, 2017.</p> <p>④「国連海洋法条約の紛争解決手続--他の条約手続との適用関係について(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Its Applicability to Other Treaty Disputes concerning the Law of the Sea)」『法学論叢』146(3・4), 2000.</p> <p>⑤「政府船舶に対する裁判権免除の展開(The Evolution of the Jurisdictional Immunity of Public Ships)」『法学論叢』140(3・4), 1997.</p>
5	후카마치 기미노부	<p>①「国連海洋法条約に関連する韓国の国内法(유엔 해양법 조약과 관련된 한국의 국내법)」『関東学園大学法学紀要』6(2),1996.</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②「翻訳・海洋法に関連する大韓民国の法令(번역·해양법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령)」『關東学園大学法学紀要』6(2),1996.</p> <p>③「公海漁業の規制:IUU漁業をてがかりとして(Regulation of the High Seas Fisheries against the IUU Fishing)」『國際法外交雜誌』112(2),2013.</p> <p>④「群島航路帶通航權と航路帶の指定(군도의 항로 통항권과 항로 지정)」『關東学園大学法学紀要』12(1), 2002-12.</p> <p>⑤「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航行自由と經濟行為--サイガ号事件を題材として(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항해 자유와 경제행위-사이거(saiga)호 사건을 소재로)」『海上保安國際紛争事例の研究:「周辺諸国との新秩序形成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 (3),2001.</p> <p>⑥「新日韓・日中漁業協定における執行に関する問題点(신한일, 중일 어업협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海上保安國際紛争事例の研究:「周辺諸国との新秩序形成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 (2), 2000.</p>
6	다카무라 유카리	<p>①「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による放射性排水の放出と海洋環境保護の国際的義務」(Release of radioactive effluent by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and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環境と公害』41(2), 2011.</p> <p>②「国際環境法における予防原則の動態と機能(국제환경법에서의 예방원칙의 동태와 기능)」『國際法外交雜誌』104(3), 2005.</p> <p>③「生物多様性条約の下での海洋の生物多様性保全(생물 다양성 협약 하에서의 해양 생물의 다양성 보전)」『海洋の生物多様性保全に関する国際法-普遍と地域の制度連関と相互調整の実証研究』日本学術振興会 科学研究費助成事業 基盤研究(B)</p>
7	고테라 아키라	<p>①『海洋權益の確保に関わる国際紛争事例研究(第2号)(해양 권익 확보와 관련된 국제분쟁사례연구(제2호))』, 海上保安協会、2009.(図書)</p> <p>②「領海外沿岸海域における執行措置」および「執行管轄權の域外行使と旗国管轄權」(「영해 밖 연안 해역에서의 집행조치」 및 「집행관</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할권의 역외 행사와 기국 관할권) 小寺彰共編著『海洋保安法制』2009.(図書)</p> <p>③「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軍事調査」(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조사')」『海洋權益の確保に係る国際紛争事例研究(第2号)』2010.</p> <p>④「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外国公船に対する措置(배타적 경제수역의 외국 공선에 대한 조치)」『海洋法の執行と適用をめぐる国際紛争事例研究』2008</p>
8	즈카하라 유미	<p>①『21世紀の国際法と海洋法の課題 (21세기 국제법과 해양법의 과제)』東信堂2016..(図書)</p> <p>②「国際法からみた避難水域問題(국제법으로 본 피난 수역 문제)」『海洋政策研究特別号：避難船舶の避難港への受け入れに関する総合的研究』2012</p> <p>③「海洋紛争の解決手続と法の支配(해양분쟁의 해결 절차와 법의 지배)」『国際問題』666,2017.</p>
9	니시모토 겐타로	<p>①「南シナ海仲裁判断の意義——国際法の観点から(남중국해 중재판결의 의의-국제법의 시점으로-)」『東北ローレビュー』第4号, 2017年.</p> <p>②「国家管轄権外区域の海洋生物多様性の保全と持続可能な利用：新たな国際制度の形成とその国内的な影響(국가관할권외 구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새로운 국제 제도의 형성과 국내적인 영향)」『論究ジュリスト』19, 2016.</p> <p>③「極海コード採択後の北極海の航行規制(북극 코드 채택 후 북극해 항해 규제)」『国際協力論集』24(1), 2016.</p> <p>④「国際海事機関 (IMO) を通じた国連海洋法条約体制の発展(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유엔 해양법 조약 체제의 발전)」『国際問題』642, 2015.</p> <p>⑤「延長大陸棚における国内法令の適用・執行(대륙붕 연장에 있어서의 국내법령의 적용·집행)」『海上法執行活動に関する諸問題</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の調査研究 研究報告書』海上保安大学校国際海洋政策研究センター、2015.</p> <p>⑥“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Disaster Response: A Case Study of Recent Earthquakes in Japan”, David D. Caron et al. (eds.), The International Law of Disaster Relief, Oxford University Press, 2014.</p> <p>⑦「北極航路における沿岸国規制と国際海峡制度(북극 항로의 연안 규제와 국제 해협 제도)」『海洋政策研究』特別号, 2014.</p> <p>⑧「南シナ海における中国の主張と国際法上の評価(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과 국제법 상의 평가)」『法学』78(3), 2014.</p> <p>⑨「スヴァールバル諸島周辺海域の国際法上の地位(스발바르 제도 주변 해역의 국제법상 지위)」奥脇直也・城山英明編『北極海のガバナンス』東信堂、2013.</p> <p>⑩「海洋管轄権の歴史的展開(一)(해양관할권의 역사적 전개(1))」『国家学会雑誌』125卷5・6号, 2013年.</p> <p>⑪「海洋管轄権の歴史的展開(二)(해양관할권의 역사적 전개(2))」『国家学会雑誌』125卷7・8号, 2013年.</p> <p>⑫「海洋管轄権の歴史的展開(三)(해양관할권의 역사적 전개(3))」『国家学会雑誌』125卷9・10号, 2013年.</p> <p>⑬「海洋管轄権の歴史的展開(四)(해양관할권의 역사적 전개(4))」『国家学会雑誌』125卷11・12号, 2013年.</p> <p>⑭「海洋管轄権の歴史的展開(五)(해양관할권의 역사적 전개(5))」『国家学会雑誌』126卷1・2号, 2013年.</p> <p>⑮「管轄権の歴史的展開(六・完)(해양관할권의 역사적 전개(6, 7))」『国家学会雑誌』126卷3・4号, 2013年.</p> <p>⑯「海洋秩序の維持におけるソフトローの機能——漁業資源の保存管理と海洋環境の保護(해양질서 유지에 관한 soft law의 기능:</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어업자원의 보존 관리와 해양환경의 보호)』小寺彰・道垣内正人編『国際社会とソフトロー』有斐閣, 2008.</p> <p>⑩「南シナ海仲裁(남중국해 중재)」『平成28年重要判例解説』2017年.</p>
10	와니 겐타로	<p>①「中国による海洋法秩序への挑戦と海洋ガバナンス(해양법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해양 거버넌스)」『論究ジュリス』(30), 2019.</p> <p>②「未承認反乱団体が海上で行う暴力行為と海賊行為との関係(4・完)海賊行為の「私的目的」要件をめぐる歴史的展開」(Unrecognized Insurgents and Pirac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rivate Ends" Requirement in the Concept of Piracy(4))『Osaka law review』68(4), 27-74, 2018-11大阪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p> <p>③「未承認反乱団体が海上で行う暴力行為と海賊行為との関係(3)海賊行為の「私的目的」要件をめぐる歴史的展開」(Unrecognized Insurgents and Pirac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rivate Ends" Requirement in the Concept of Piracy)『Osaka law review』68(3), 2018.</p> <p>④「海洋の科学的調査法制および海洋構築物法制と国際法: 排他的経済水域・大陸棚における沿岸国管轄権とその根拠 (海洋法の新展開と持続的発展)(해양의 과학적 조사법제 및 해양구축물 법제와 국제법: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에서의 연안국 관할권과 그 근거(해양법의 신 전개와 지속적 발전))」『国際問題』(674), 2018.</p> <p>⑤「未承認反乱団体が海上で行う暴力行為と海賊行為との関係(2)海賊行為の「私的目的」要件をめぐる歴史的展開」(Unrecognized Insurgents and Pirac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rivate Ends" Requirement in the Concept of Piracy(2))『Osaka law review』67(6), 2018.</p> <p>⑥「未承認反乱団体が海上で行う暴力行為と海賊行為との関係(1)海賊行為の「私的目的」要件をめぐる歴史的展開」(Unrecognized Insurgents and Piracy: The Historical Background</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of the "Private Ends" Requirement in the Concept of Piracy(1) 『Osaka law review』67(5), 2018.</p> <p>⑦「国連海洋法条約における「軍事調査」の位置：「海洋の科学的調査」との関係」(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Survey" and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阪大法学』66(3・4), 2016.</p> <p>⑧「海上捕獲法の正当化根拠：ロンドン宣言(1909年)以前の学説・国家実行の検討」(The Legal Foundations of Prize Law in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国際法外交雑誌』113(4), 2015.</p>
11	하연수	<p>①「韓国の海洋関連法制史(한국의 해양 관련 법제사)」 『龍谷法学』48(1), 2015.</p> <p>②「韓国の海洋・沿岸管理政策について——海洋保護区(MPA)を中心に——(한국의 해양·연안 관리 정책에 관하여: 해양보호구(MPA)를 중심으로)」 『新世代法政策学研究』(19), 2013.</p> <p>③「尖閣諸島問題について(센카쿠제도 문제에 대하여)」 『日本の科学者』46(5), 2011.</p> <p>④「日韓漁業協定の現状と課題(한일 어업 협정의 현황과 과제)」 『龍谷法学』35(2), 2002.</p> <p>⑤「国際法における「島」の法的地位に関する一考察(국제법에 있어서의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일고찰)」 『龍谷法学』34(3), 2001.</p>
12	니시타니 하지메	<p>①The Doctrine of Implied Pow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一橋論叢』10(4)号, 1986.</p> <p>②The Doctrine of Implied Pow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V) 『一橋研究』13(1), 1988.</p> <p>③The Doctrine of Implied Pow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II) 『一橋研究』12(4), 1988.</p> <p>④The Doctrine of implied pow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I) 『一橋研究』11(1), 1986.</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13	안도 다카요	<p>①「海賊行為に対する普遍的管轄権－その理論的根拠に関する学説整理を中心に－(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이론적 근거에 대한 학설정리를 중심으로)」『国際関係研究』30(2), 2010.</p> <p>②「日韓国交正常化交渉における竹島問題－『紛争の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の成立をめぐる－(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의 독도문제: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의 성립을 둘러싸고)」『政経研究』47(3), 2010/12</p> <p>③「日韓国交正常化交渉における『紛争の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の成立と竹島問題(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에서의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의 성립과 독도문제)」『九州国際法学会年報』38・39・40・41・42合併号, 2013.</p> <p>④「海洋航行不法行為防止(SUA)条約における裁判管轄権規定－被強要国の管轄権をめぐる議論を中心に－(해양 항해 불법 행위 방지(SUA) 조약에서의 재판관할권 규정: 피강요국의 관할권 논의를)</p>
14	아보 기미토	<p>①「喫緊の課題となった領域警備法の整備(중요한 과제가 된 영역 경비법의 정비)」『読売クオターリー』(25), 2013.</p> <p>②「国際法と日本の海洋戦略(국제법과 일본의 해양 전략)」『世界平和研究』(192), 2012年.</p> <p>③「海洋の安全保障と日本の安全－国際法を交えて考える問題点と対策(해양 안전보장과 일본의 안전: 국제법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防衛法研究』(35), 2011年.</p> <p>④「いわゆるグレーゾーン事態の必要かつ有効な法整備: 自衛措置と主権侵害排除の措置(特集 新たな安全保障法制の整備の現状と課題)(Necessary and Effective Legislation for the so-called Gray Zone Situation)」『防衛法研究』, 2015.</p>
15	기타 야스오	<p>①「核兵器不拡散条約第VI条における核軍縮交渉義務——核兵器の威嚇または使用の合法性事件と核軍備競争の停止および核軍備の縮小に関する交渉義務事件に照らして——(핵무기 비확산 조약 제VI조에 있어서의 핵군축 교섭의무: 핵무기의 위협 혹은 사용의 합법성 사건과 핵군비경쟁의 정지 및 핵군비 축소에 관한 교섭 의</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무 사건을 중심으로)』『国際法外交雑誌』118(1), 2019年.</p> <p>②“The Authority of the Legal Advisers to the UK Foreign Office i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erritorial Waters, 1923-1958”『帝京法学』31(1・2), 2018.</p> <p>③「コルフ海峡事件の先決的抗弁段階におけるイギリス政府の訴訟戦略(쿠프 해협 사건의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의 영국 정부의 소송 전략)」『帝京法学』27(2), 2011.</p>
16	사카모토 시게키	<p>①“Legal Status of the Nine-Dash Line: Historic Waters or Historic Right”『同志社法学』92, 2017.</p> <p>②“The Whaling in the Antarctic Case from a Japanese Perspective,”『The Japa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58, 2016.</p> <p>③「外国公船に対する警告(続) 一日中の解釈の異同に焦点を当てて(외국공선에 대한 경고-중일의 해석 차를 중심으로)」『海上法執行活動に関する諸問題の調査研究報告書2』, 2015.</p> <p>④「東アジア紛争と海洋法(동아시아 분쟁과 해양법)」広島市立大学広島平和研究所編『平和の創造とは一平和研究の過去・現在・未来』2015.</p> <p>⑤「日本と国際海峡(일본과 국제해협)」『国際海峡』, 2015年.</p> <p>⑥「地域漁業管理機関の機能拡大が映す国際法の発展—漁業規制から海洋の管理へ—(지역어업관리기관의 기능확대로 보여지는 국제법의 발전: 어업규에서 해양 관리로)」秋葉剛男・村瀬信也編『国際法の実践 小松一郎追悼』信山社, 2015.</p> <p>⑦「尖閣諸島をめぐる中国国内法の分析(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 국내법 분석)」『島嶼研究ジャーナル』(4), 2014.</p> <p>⑧「『国国有化』は先に立法『領海侵入』は実績作り中国の狙いを見誤るな(‘국유화’는 입법화를 위한 준비, ‘영해침입’은 실적 만들기, 중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함)」『WEDGE』, 2013年</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17	야스이 겐고	<p>①「現代国際法における海上経済戦の規律—武力紛争下の第三国船舶に対する攻撃に至らない干渉の法的枠組み(현대국제법에서의 해상경제전 규율-무력분쟁 하의 제3국 선박에 대한 비공격 간섭의 법적 틀)」同志社大学, 学位论文(博士), 2019.</p> <p>②「現代国際法における海上封鎖—「ガザの自由」船団事件を契機に—(현대국제법 상의 해상봉쇄-‘가자 자유’ 선단 사건(Gaza flotilla incident)을 계기로-)」『同志社法学紀要』, 66(6), 2015.</p> <p>③「現代国際法における海上封鎖の設定と実施—「ガザの自由」船団事件を中心として(현대국제법의 해상 봉쇄 설정과 실시: ‘가자 자유’ 선단 사건(Gaza flotilla incident)을 중심으로)」同志社大学, 学位论文(修士), 2014.</p>
18	야쿠시지 기미오	<p>①「国連海洋法条約と海洋環境保護—越境海洋汚染損害への対応—(유엔 해양법 조약과 해양환경보호-국경을 넘는 해양 오염 손해에 대한 대응-)」『国際問題』617, 2012年.</p> <p>②「船舶の国籍と旗国の国際請求権(선박의 국적과 기국의 국제 청구권)」栗林忠男・杉原高嶺編代, 『日本海洋法研究会, 現代海洋法の潮流第3巻「日本における海洋法の主要課題」』有信堂, 2010.</p> <p>③「海洋汚染(해양 오염)」山本草二編『海上保安法制—海洋法と国内法の交錯—』2009年.</p> <p>④「海洋汚染防止に関する条約制度の展開と国連海洋法条約—船舶からの汚染を中心に—(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조약 제도의 전개와 유엔 해양법 조약-선박을 통한 오염을 중심으로-)」国際法学会編『日本と国際法の100年』三省堂, 2001.</p> <p>⑤「国連海洋法条約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条項の構成と問題点—国家の国際賠償責任と民事賠償責任との関連を中心に—(유엔해양법조약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조항의 구성과 문제점-국가의 국제배상 책임과 민사배상 책임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高林秀雄先生還暦記念論文集海洋法の新秩序』東信堂, 1993.</p>
19	허숙연	<p>①「200海里以遠における大陸棚制度の本質——大陸棚の権原付与の均一性——(200해리 대륙붕 제도의 본질 대륙붕 권원 부여의 균일성)」岩澤雄司ほか編著『国際法学のダイナミズム』2019年.</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②「国際法上の島の定義と国内法制度——南シナ海仲裁と沖ノ鳥島をめぐる日本の対応を中心に(국제법상의 섬의 정의와 국내법 제도-남중국해 중재와 오키노토리시마를 둘러싼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論究ジュリスト』2016年秋号,2016.</p> <p>③「リギタン島とシバダン島の主権に関する事件（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리기탄 섬과 시파단 섬의 주권에 관한 사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国際法外交雑誌』111(4),2013.</p> <p>③「PSSA (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特別敏感海域)——海洋環境保護と海上交通の関係をさぐる一例として(PSSA (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 : 특별 민감해역) - 해양환경보호와 해상교통의 관계를 검토하는 사례로서)」『立教法学』(87),2013.</p> <p>④「領土帰属法理の構造：権原とeffectivitesをめぐる誤解も含めて(영토귀속법리의 구조:권원과 effectivites를 둘러싼 오역을 포함하여)」『国際問題』(624),2013年.</p> <p>⑤「避難水域をめぐる各国の動向(피난수역을 둘러싼 각국의 동향)」『海洋政策研究』(特別),2012.</p> <p>⑥「脱植民地時代における領域主権の移転の認定(탈식민지시대의 영토주권의 이전의 인정)」『国家学会雑誌』123(7/8),2010.</p>
20	쓰루타 준	<p>①「日中漁業協定の暫定措置水域等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管理の現状と課題（上）(중일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등에서의 해양생물자원 관리 현황과 과제(상))」『環境管理』2017.</p> <p>②「日中漁業協定の暫定措置水域等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管理の現状と課題（下）(중일어업협정 잠정조치수역 등에서의 해양생물자원 관리 현황과 과제(하))」『環境管理』2017.</p> <p>③「海洋の安全－日本における国連海洋法条約の実施(해양의 안전: 일본에서의 유엔 해양법 조약의 실시)」『沿岸域学会誌』29(4),2017.</p> <p>④「アジアの海洋秩序をいかにして維持・構築するか(아시아의 해양질서를 어떻게 유지, 구축할 것인가?)」『外交』2018.</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⑤“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the Law of the Sea in Japan 1, 2018.</p> <p>⑥“Japanese Measures against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under the UNCLOS and the IMO Treaties” Meiji Gakuin law journal 106,2019.</p> <p>⑦“The Sea Shepherd Case of 2007-2008: Interferences with Japanese Vessels Whaling for “Researching” the Maritime Ecosystem” Meiji Gakuin law journal 105,2018.</p> <p>⑧「海のプラスチックごみに関する国際規範(해양의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국제 규범)」『環境管理』10月号, 2019.</p> <p>⑨「IUU漁業対策としての寄港国措置 - 日本における寄港国措置協定の実施に焦点をあてて(IUU 어업 대책으로서의 기항국 조치- 일본의 기항국 조치 협정의 실시에 초점을 맞추어)」児矢野マリ編『漁業資源管理の法と政策』信山社,</p>
21	요시이 아쓰시	<p>①「国際裁判制度における判決の治癒ー1995年ニュージーランド審査請求事件ー(국제재판제도에 있어서의 치유의 판결-1995년 뉴질랜드 심사 청구 사건-)」『国際学研究』(19), 2000.</p> <p>②“アジア各国における国際法先例(State Practice of Asian Countri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2011.</p> <p>③“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 over Foreign Merchant Ships in Internal Waters And the Territorial Sea (Hamburg Studies on Maritime Affairs)”Haijiang Yang, 『国際学研究』18(2), 2009.(서평 논문)</p>
22	미즈다 슈헤이	<p>①「国際油濁補償制度の履行確保について(국제유류오염 보상제도의 실행 확보에 대해서)」『海洋汚染に関する国際的規制』2001.</p> <p>②「船舶起因汚染における沿岸国の立法的管轄権について(선박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연안국의 입법적 관할권에 대하여)」『海洋汚染に関する国際的規制』2000.</p> <p>③「国連海洋法条約における排他的經濟水域と大陸棚の境界画</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定との相互関係に関する研究－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ネシア間の境界画定条約を素材に－(유엔 해양법 조약에 있어서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의 경계 확정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경계 확정 조약을 중심으로)『上智法学論集』44(1),2000.
23	오쿠와키 나오야	<p>①「国際法における主権的裁量の意義変化―捕鯨裁判の規範的地位(국제법에 있어서 주권적 재량의 의의 변화 - 포경 재판의 규범적 위상)」『国際法研究』2016.</p> <p>②「海難救助をめぐる管轄権(해양 재난을 둘러싼 구조 관할권)海上保安大学校・国際海洋政策研究センター『海上法執行活動に関する諸問題の調査研究報告書』2015.</p> <p>③「海洋法における協力義務―情報の収集・提供・共有の義務を中心に(해양법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정보의 수집·제공·공유의 의무를 중심으로)」村瀬信也他編『国際法の実践』2015.</p> <p>④「公海上の管轄権の競合と対処の方策(공해상의 관할권의 경합과 대처 방법)」海上保安大学校国際海洋政策研究センター「海上法執行活動に関する諸問題の調査研究報告書」2014.</p> <p>⑤「新鉱業法と外国政府所有船舶による資源探査活動(신광업법과 외국 정부 소유 선박에 의한 자원 탐사 활동)」2011年度外務省研究会報告書,2011.</p> <p>⑥「海洋権益の保護と日本(해양권익의 보호와 일본)」『学会会報』2012.</p> <p>⑦「海洋紛争の解決と国連海洋法条約―アジアの海の課題(해양 분쟁의 해결과 유엔 해양법 조약-아시아 해양의 과제)」『国際問題』2012.</p> <p>⑧「海洋紛争処理過程の管理方式―船舶掌捕事例における即時釈放と暫定措置(해양분쟁처리 과정의 관리방식: 선박의 항해에 대한 규제 관련 사례에서의 즉시 석방과 잠정조치)」海上保安法制調査研究委員会調査報告書『海洋権益の確保に係る国際紛争事例研究(第3号)』2010.</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⑨「海底通信ケーブル問題と海洋法(해저 통신 케이블 문제와 해양법)」平成22年度海洋政策研究会報告書2010.</p> <p>⑩「日本における海洋法-海洋権益保護と国際協力のイニシアティブ(일본의 해양법-해양 권익 보호와 국제협력 이니셔티브)」『ジュリスト』2009.</p> <p>⑪「領海における外国公船に対する執行措置(영해에서의 외국 공선에 대한 집행조치)」『海洋権益の確保に係る国際紛争事例研究』2,2009.</p>
24	사코타 아키라	<p>①「国際海洋法裁判所「ARAリベルタード号事件」(국제해양법재판소 'ARA 리베르타도호 사건)」『西南学院大学法学論集』51(3・4),2019.</p> <p>②「国際海洋法裁判所「豊進丸事件」(早期釈放) 2007年8月6日判決(국제해양법재판소 호우신마루사건(조기석방) 2007년 8월 6일 판결)」『西南学院大学法学論集』50(2・3),2018.</p> <p>③「国際海洋法裁判所「富丸事件」(早期釈放) 2007年8月6日判決(국제해양법재판소 "토미마루 사건"(조기석방) 2007년 8월 6일 판결)」『西南学院大学法学論集』50(4),2018.</p> <p>④「国際海洋法裁判所「ジョホール海峡埋め立て事件」2003年10月3日暫定措置命令(국제해양법재판소 “조호르 해협 매립사건” 2003년 10월 3일 잠정조치 명령)」『西南学院大学法学論集』50(1),2007.</p> <p>⑤「国際海洋法裁判所『深海底活動責任事件』2011年2月1日勧告的意見(국제해양법재판소 “심해저 활동 책임 사건” 2011년 2월 1일 권고적 의견)」『商学討究』66(1),2015.</p>
25	고가 마모루	<p>①「『南シナ海仲裁裁判』の法的問題について(“남중국해 중재 판결”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海洋産業研究会会報』47(3),2016.</p> <p>②「大陸棚限界委員会の活動と機能—国際機関による海洋法の発展(대륙붕 한계 위원회의 활동과 기능-국제기구를 통한 해양법 발전)」『国際法外交雑誌』112(4),2013.</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③「大陸棚の延伸をめぐる手続的諸問題(대륙붕의 연장을 둘러싼 절차적 제문제)」『西南学院大学法学論集』42(3・4),2010.
26	아오키 다카시	①「海洋法裁判所の五年(해양법 재판소의 5년)」『法学研究会』75(2),2002. ②「北太平洋オットセイ保護と日本(북태평양 물개 보호와 일본)」『清和法学研究』10(2),2003. ③「大陸棚の限界決定の現状(대륙붕의 한계 결정의 현황)」『清和法学研究』20(2),2013. ④“State practice of Asian countri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Japan, [Pts.II and III]”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2007. ⑤“State practice of Asian countri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Japan, [Pts.II and III]”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2006.
27	에토 준이치	①「海洋境界画定における関連事情の考慮－判例を通じた客観化の過程(해양 경계 확정 관련 사정 고려-판례를 통한 객관화 과정)」『国際法外交雑誌』107(2), 2008. ②「海洋境界画定に関する国際判例の動向(日本の海洋境界画定)(해양 경계 확정에 관한 국제 판례의 동향(일본의 해양 경계 확정))」『日本国際問題研究所』565, 2007. ③「海域画定(バルバドス対トリニダード・トバゴ共和国)[仲裁裁判所2006.4.11判決] (해역 확정 (바르바도스 대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화국) [중재재판소 2006.4.11. 판결])」『上智法学論集』51(1),2007. ④「東太平洋のキハダマグロ漁におけるイルカ混獲問題(동부 태평양의 황다랑어 포획 중 돌고래 혼획 문제)」『東洋法学』38(2)1995.
28	가네하라 아쓰코	①“‘So-Called ‘Eco-Piracy’ and Interventions by NGOs to Protest against Scientific Research Whaling on the Highses: An Evaluation of the Japanese Position” Contemporary Issues in the Law of the Sea, 2011.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②“Legal Responses of Japan to Impediments and Harassments by Foreign Vessels against Japanese Vessels during Research Whaling in the Antarctic Sea” Japa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52),2009.</p> <p>③「IUU漁業の国際規制にみる海洋法の現代的課題(IUU어업 국제규제로 보는 해양법 의 현대적 과제)」『ジュリスト』1365, 2008.</p> <p>④「200海里を越える大陸棚の限界設定をめぐる一考察(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 설정을 둘러싼 일고찰)」村瀬信也・江藤淳一 共編『海洋境界画定の国際法』,2008.</p> <p>⑤「現代公海漁業規制における旗国主義の存立根拠(현대 공해 어업 규제에서의 기국주의 존립 근거)」『立教法学』75,2008.</p> <p>⑥“Challenging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and the Flag State Principle Expressed by Recent Non-Flag State Measures on the High Seas” Japa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51,2008.</p> <p>⑦「日本の大陸棚外側限界の設定をめぐる一考察 (日本の海洋境界画定) (일본의 대륙붕 외측 한계의 설정을 둘러싼 일고찰(일본의 해양 한계 확정))」『国際問題』565, 2007.</p> <p>⑧「公海制度の現代的意義 (特集 新世紀の国際法--危機とその克服) (공해제도의 현대적 의의(특집 신세기의 국제법-위기와 극복))」『法学教室』281, 2004.</p> <p>⑨「沿岸国としての日本の国内措置 (特集 日本法の国際化) (연안국으로서의 일본의 국내 조치(특집: 일본법의 국제화))」『国際公法』1232,2002.</p>
29	쓰루 야스코	<p>①「国連海洋法条約と日本外交(국제해양법조약과 일본 외교)」『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学』1,2018.</p> <p>②「南シナ海紛争の法と政治一仲裁裁判は何をもたらすのかー(남중국해 분쟁의 법과 정치: 중재재판은 무엇을 남겼는가?)」『法学新報』123(5・6),2017.</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③「海洋生物資源の環境問題化－NGOは国際交渉にどこまで関与できるのか－(해양생물자원의 환경문제화-NGO는 국제협상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21世紀の国際法と海洋法の課題』1,2016.</p> <p>③「国家管轄権外の海洋生物多様性の保全をめぐる制度間の相互作用－グローバル化時代の法と政治(국가관할권 밖의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둘러싼 제도 간의 상호작용-세계화시대의 법과 정치)」『グローバル化と社会科学』2014.</p> <p>④「海洋漁業資源ガバナンスの現状と課題－重層化する制度の協働の模索(해양 어업 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중층화하는제도의 협동 모색)」『世界法年報』27, 2008</p> <p>⑤「東シナ海海洋資源開発をめぐる日中対立の諸相(동중국해 해양자원을 둘러싼 중일 대립의 양상들)」『東京学芸大学紀要』2007.</p> <p>⑥“Marine Fishery Resources from the Point of Environmental Perspectives : beyond the Problematics of the Ecosystem Discourse” The Annual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Chuo University, 2006.</p> <p>⑦「海洋漁業資源問題におけるエコシステムアプローチの受容と意義－言説を超えて(해양어업자원문제에 있어서의 생태계 접근방식의 수용과 의의-담론을 넘어)」『中央大学社会科学研究所年報』11,2006.</p> <p>⑧“Changing Norms in Ocean Governance: Environmental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Fishery Resources” International Relations 143, 2005.</p> <p>⑨“Today's Problems of International Fishery Resources” Yearbook of World Law 27, 2005.</p>
30	가와노 마리코	<p>①「南シナ海仲裁の手續と判断実施の展望(남중국해 중재의 절차와 판결 실시의 전망)」『国際問題』659(12),2017年</p> <p>②“Towards a Comprehensive Convention on Marine Biological</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Maritime Institute of Malasia, 2016年</p> <p>③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nd the Development of the Rules and Methods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國際法外交雜誌』3(1), 2013年</p> <p>④ 「國際法と海洋紛争 : 南シナ海に関する紛争解決を事例に(국제법과 해양분쟁: 남중국해에 관한 분쟁해결을 사례로)」 『航政研シリーズ』597, 2016</p>
31	후루야 슈이치	<p>① 「自衛と域外法執行措置(자위와 영외 법 집행 조치)」 村瀬信也編 『自衛権の現代的展開』 東信堂, 2007.</p> <p>② 「領土・国境紛争の処理—最近のICJ判決にみられる特徴(영토·국경분쟁 처리-최근의 ICJ 판결에서 보이는 특징)」 『國際裁判の判例研究』2005.</p> <p>③ 「排他的經濟水域(배타적경제수역)」 島田征夫・林司宣編 『海洋法テキストブック』 有信堂, 2005.</p> <p>④ 「武力紛争被害者に関する賠償メカニズムの動的展開: 共通する基本原則の生成と進展 (Dynamism of the Development in the Reparation Mechanisms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 Emerging Common and Basic Principles)」 『法学雑誌』 65(3・4), 2019.</p>
32	이케시마 다이사쿠	<p>① “Diplomatic and Legal Challenges to the Historic Legacies of Japan’s Territorial Disputes” Transcommunication 4(2), 2017</p> <p>② “Is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under Threat from Marine Protected Areas?: Environmental Protection versus Security Interests under International Law” Waseda Global Forum 8, 2012</p> <p>③ 「国連海洋法条約における島の法的地位と紛争解決手続: 沖ノ鳥島をめぐる日中間の事例(유엔 해양법 조약에 있어서의 섬의 법적 지위와 분쟁해결 절차: 오키노토리시마를 둘러싼 중일 간의 사례)」 『Waseda Global Forum』7, 2011.</p> <p>④ 「南極周辺海域における豪州環境保護法の執行: 「共同船舶事</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件」を素材として(Enforcing Australian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Antarctica: the Kyodo Senpaku cace」Waseda global 『Waseda global forum』5,2008.
33	가가미 야스히코	<p>①「国家管轄権外区域の海洋保護区(국가관할권 외 구역 해양 보호 구역)」『国際法外交雑誌』117(1),2018.</p> <p>②「領土及び海洋紛争事件(ニカラグア対コロンビア) - 判決と日本へのインプリケーション(영토 및 해양 분쟁 사건(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 판결과 일본에 대한 임플리케이션)」『貿易風』11,2016.</p> <p>③「ベンガル湾におけるバングラデシュとミャンマー間の海洋境界画定事件 - 国際海洋法裁判所による初の海洋境界画定判決の評価 - (벵골만에서의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해양 경계 확정 사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첫 해양 경계 확정 판결 평가)」『貿易風』10,2015.</p> <p>④「海洋基本法制定以後の離島管理関連法制の展開とその意義 - もう一つの「島の制度」を求めて - (해양기본법 제정 이후 낙도 관리 연계법 제도의 전개와 그 의의: 또 하나의 ‘섬 제도’를 요구하며)」『貿易風』8,2013.</p> <p>⑤「国際海事機関による海洋保護区の構想 - 特別敏感海域の『追加的価値』をめぐって(국제해사기관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구상: 특별 민감 해역의 ‘추가적 가치’를 둘러싸고)」『海洋政策研究』9,2011.</p> <p>⑥「国連海洋法条約の実施と海洋保護区の発展 - 排他的経済水域に設定される保護区に焦点を当てて(유엔 해양법 조약의 실시와 해양 보호 구역의 발전-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되는 보호 구역에 초점을 맞추어)」『海洋政策研究』1,2005.</p> <p>⑦「国連公海漁業実施協定第七条における一貫性の原則(유엔 공해어업 실시 협정 제7조에 이셔서의 일관성 원칙)」『關西大學法學論集』50(4), 2000.</p>
34	세타 마코토	①“The Contribu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o Ocean Governance」Review of European”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p>28(3),2019.</p> <p>②“‘Use of Force’ under Maritime Police Law and Jus ad Bellum: Distinction between the Rules of Conduct and Norms for Judicial Proceedings”East-West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Law , 2019.</p> <p>③“The Legitimacy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the Way it Accepts the Involvement of Non-State Actors in Governing the Area Transforming the Ocean Law”Requir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2019.</p> <p>④「海上テロリズムに対する国際条約と日本法制：海洋構造物に対する規制を中心に(해상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조약과 일본법제:해양구축물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早稲田大学社会安全政策研究所紀要』10, 2019.</p> <p>⑤「船舶起因汚染に対する寄港国管轄権の適用基準－近年の米国とEUの実行を素材として－(선박으로 인한 오염에대한 근접 항구국의 관할권적용기준-최근의 미국과EU의 사례를 소재로-)」『比較法学』48(1),2014.</p> <p>⑥「海賊行為に対する普遍的管轄権の位置づけ－管轄権の理論的根拠に関する再検討－(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규정-관할권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재검토-)」『早稲田法学会誌』63(2), 2013年.</p> <p>⑦「民間海上警備会社 (PMSC) に対する規制とその課題－海賊対策における銃器使用の検討を中心に－(민간 해상 경비 회사 (PMSC)에 대한 규제와 과제-해적 대책에 있어서의 총기 사용의 검토를 중심으로-)」『海事交通研究』61,</p>
35	이시이 유리카	<p>①「海底ケーブルの保護についての機能的アプローチの意義と限界(해저 케이블 보호에 대한 기능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國際法研究』8, 2020.</p> <p>②「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妥当な考慮義務(배타적 경제 수역의 타당한 고려 의무)」『國際法研究』7,2019.</p>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③“The ‘Due Regard’ Obligation and the Peaceful and Economic Uses of the EEZ other than Fishe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34, 2019.
		④「海上不法移民に対する「押戻し」措置(해상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송환 조치)」『国際問題』674, 2018.
		⑤「安全保障上の脅威をもたらす第三国船舶に対する公海における自衛の可否(안전 보장상의 위협을 초래하는 제3국 선박에 대한 공해에서의 자위 가능 여부)」『世界法年報』36, 2017.
		⑥「海上を経由する不法移民に関する移送協定と国際人権法(해상을 경유하는 불법이민에 관한 이송협정과 국제인권법)」『国際法研究』5, 2017.
		⑦“M/V Guanabara: Japan’s First Trial on Piracy under the Anti-Piracy Act”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Law Journal 1, 2015
		⑧“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Repression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t Sea under the UNCLOS”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7(2) 2014.
		⑨「公海と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上空飛行の自由」の意義:防空識別圏を巡る実行を中心に(공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비행의 자유'의 의의:방공 식별 구역을 둘러싼 실행을 중심으로)」『国際安全保障』42(1), 2014.
		⑩「国際刑事裁判所と戦争犯罪——ルバンガ事件判決の評価を中心に(국제형사재판소와 전쟁범죄-르방가 사건의 판결을 둘러싼 평가를 중심으로)」『国際法研究』2, 2014.
		⑪「通過通航制度と海峡沿岸国の航行規制(통과, 통항 제도와 해협 연안국의 항해 규제)」『国際法研究』1, 2013.
		⑫「大陸棚の探査規制と安全保障(대륙붕의 탐사규제와 안전보장)」『海外事情』59(4), 2011.

번호	저자명	논문제목
36	시모야마 겐지	①「大陸棚での海洋調査活動に関する一考察ー沿岸国の同意なく実施された海洋調査への対応と調査結果の取扱い(대륙붕에서의 해양조사활동에 관한 고찰-연안국의 동의 없이 실시된 해양조사에 대한 대응과 조사결과의 사용)」『防衛法研究』42,2018.
		②「環境にやさしい船造りーバラスト水管理条約の発効と課題ー(친환경 선박만들기-밸러스트수 관리 협약 발효와 과제)」『日本マリンエンジニアリング学会誌』53,2018.
		③「大西洋海岸境界画定事件(ガーナ共和国対コート・ジボワール共和国)(대서양 해안 경계 확정 사건(가나 공화국 대 코트디부아르 공화국))」『島嶼ジャーナル』8,2013.
		④「海洋の持続可能な開発をめぐる国際法上の課題(해양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둘러싼 국제법 상의 과제)」『法と持続可能な社会の構築』1,2017.
		⑤「南シナ海における仲裁事件(남중국해를 둘러싼 중재 사건)」『島嶼研究ジャーナル』6(1),2016.
		⑥「船舶の運航及び処理に係る海洋環境問題と国際法の動向(선박의 운항 및 처리와 관련된 해양환경 문제와 국제법의 동향)」『環境と公害』45(3),2016.
		⑦「海洋構築物の法的地位と規制措置に関する一考察ーEEZ及び大陸棚における問題を中心にー(해양구축물의 법적지위와 규제조치에 관한 일고찰-EEZ 및 대륙붕에서의 문제를 중심으로)」『日本海洋法政策学会会誌』5,2015.
		⑧「沿岸国による海洋構築物に対する規制の可能性について(연안국의 해양 구축물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防衛法研究』39,2015.
		⑨「排他的經濟水域での人口島建設に関する国際法上の問題点(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건설에 관한 국제법상의 문제점)」『島嶼ジャーナル』5(1),2015.

자료: 저자 작성 (2020.04.30. 기준)

#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0년

01	해양수산업의 지역 간 연관구조 분석	장정인
02	해양수산 분야 기술 대외의존도 분석연구 - 스마트항만을 중심으로 -	전형모
03	지역 해양수산 오픈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최지연
04	갯벌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육근형
05	해양환경정책의 능동적 추진을 위한 자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박수진
06	항만 대기환경 관리 표준 및 평가모형 연구	안용성
07	해양수산분야 사회문제해결형 R&D 기반 구축 연구	좌미라
08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이윤정
09	수산물 품질·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현동
10	국제법 변화에 대응한 어선원 안전 및 권리 제고방안 연구	한덕훈
11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이상철
12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수산업 대응 방안 연구	정명화
13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 방안 연구	김수현
14	IMO 온실가스 규제 대응 정책방향 연구	박한선
15	퇴직전문가 활용을 통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안영균
16	글로벌 선사들의 물류통합화 전략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방안	전형진
17	내항여객운송항로 정책 발전방안 연구	김태일
18	블록체인 기술기반 식품콜드체인 체계 구축 연구	조지성
19	항만자동화 도입 관련 노무 갈등 해소 방안 연구	김찬호
20	스마트항만과 스마트도시 연계 발전 방안 연구	이연경
21	항만의 회복탄력성 측정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김성기
2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 -新해사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연구(4차년도)-	박한선
23	국내 항만연계 산업의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연계성 강화방안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신수용

# 2019년

01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접경수역 연구	최지현
02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 연구(2차년도)	이현동
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박상우
04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최석우
05	재해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연안토지 매수 이행방안 연구	윤성순
06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기술의 평가·인증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안용성
07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최일선
08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강화에 대응한 해양유전자원정책 개선 연구	박수진
09	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장원근
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이정삼
11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류정곤
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명화
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연구	한광석
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김태일
15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전형진
16	해상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방안 연구	박한선
17	해운 기업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우위 분석 연구	윤희성
18	국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하태영
19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이기열
20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수준 분석과 물류정책 방안 연구 - 화주~물류기업 협력을 중심으로 -	김은수
21	신선식품 수출입 증대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물류 개선 방안	신수용
22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비즈니스 모델 제안과 협력방안	박한선
23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 - 우리나라 新해사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	최나영환



##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 2020년

01	포스트 코로나 19 해양수산 분야 정책방안	박광서
02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 방안 연구	심성현
03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박영길
04	무인도서 해양주권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정지호
05	지역 해양수산 재정분권 대응방향	황재희
06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항만·물류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이기열
07	양식 활어 유통 효율화 방안 연구	마창모
08	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홍장원
09	해양바이오기업의 규제 정비 방안 연구	최석문
10	비상체제 시 선원의 안전을 위한 선박-항만-항공 이동경로 구축방안	이혜진

### 2019년

01	일본의 수산물 수입 구조 분석과 對일본 수출 전략 연구	임경희
02	선박부착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박수진
03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홍석
04	전국 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어촌지역 고용통계 (2016, 2017)	한광석

##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 2020년

01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화 연구	최일선
02	AIS 기반 글로벌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분석 연구	강무홍
03	김 중기 수급전망모형 「Gim-MFoS」 구축 연구	허수진

04	중앙 북극 공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이행방안 연구	김민수
05	동해 평화관광자유구역 조성 방안 연구	윤인주
06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II) - 일반 수출입 컨테이너 정보교환방식 중심 -	이연경
07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우리나라 해운·조선 기업의 안정성 분석	박성화
08	인공지능기반 해상운임예측 연구	황수진
09	국제물류주산업 실태분석 및 경쟁력 제고 방향 연구	최나영환
10	디지털화에 따른 개별 직업의 대체 가능성 추정 연구	박희대
11	시계열 분석을 통한 해운시장 분석 및 예측 연구	고병욱
12	해양수산분야 글로벌 경제효과 분석모형(KMI-GEM) 시범 구축 연구	임병호
13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사업 관리운영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자연

## 2019년

01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백은영
02	딥러닝 기반의 건화물선 시황예측 연구	윤희성
03	해운-조선산업 관계분석 연구 - 컨테이너 신조발주량 예측 -	최건우
04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Ⅰ) - 디지털 공급사슬 생태계 정보통합지도 구축 중심 -	최상희
05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해안관리 방향	정지호
06	우리나라 주요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운영, 시설, 제도를 중심으로	이경한
07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8	EU의 수산물 소비 특성 및 수출 전략(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김지연
09	해양수산 위성계정 기초연구(Ⅰ)	장정인
10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1	지역 해양수산 혁신성장체계 구축 연구	최지연
12	도미니카공화국 뱀장어 양식사업 타당성 조사	마창모
13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2차년도) -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과 신활력 사업구상 -	박상우

수시연구 2020-03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

2020년 12월 29일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 장 영 태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세븐스가든

---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02-394-0337

정가 15,000원